

2023년 주요업무계획



2023. 1.

해 양 경 찰 청



목 차

I . 2022년 주요 성과와 평가 1

(1) 주요 성과	(2) 보완 필요사항
-----------	-------------

II . 2023년 정책 여건과 전망 11

III. 2023년 정책 추진방향 13

(1) '23년 정책추진 전략	(2) '23년 정책추진 체계도
------------------	-------------------

IV. 주요 정책과제 15

(1) 역점과제	(2) 정책과제
----------	----------

1. 2022년 주요 성과

불법 외국어선 출현 척수

전년 대비 62.9% ↓



1 첨단기술 활용 주권수호 고도화

- ▶ 위성영상 분석 등을 통한 불법조업 감시체계 강화
- ▶ MDA 체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인력 기반 마련
- ▶ 상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등 상황처리 스마트화

2 예방 중심의 해양 안전관리 정착

- ▶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구축 등으로 연안사고 최소화
- ▶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민간자원 동원 체계 효율화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연안사고 발생현황

전년 대비 19.8% ↓



해양 마약사범 검거

전년 대비 78.8% ↑



3 해양수사의 내적 역량 강화

- ▶ 자체 수사심사 역량 강화를 통한 수사 완결성 제고
- ▶ 마약수사 전담부서 신설 등 마약수사 인프라 강화
- ▶ '국제범죄 공조강화 워크숍' 개최, 국내·외 협력 강화

4 선제적 조치로 해양오염 최소화

- ▶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최소화
- ▶ 해양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배출방지조치 증가
- ▶ 어선 방제보험 도입으로 영세어민의 방제비용 보상

해양오염사고 발생

전년 대비 17% ↓



예산 현황

전년 대비 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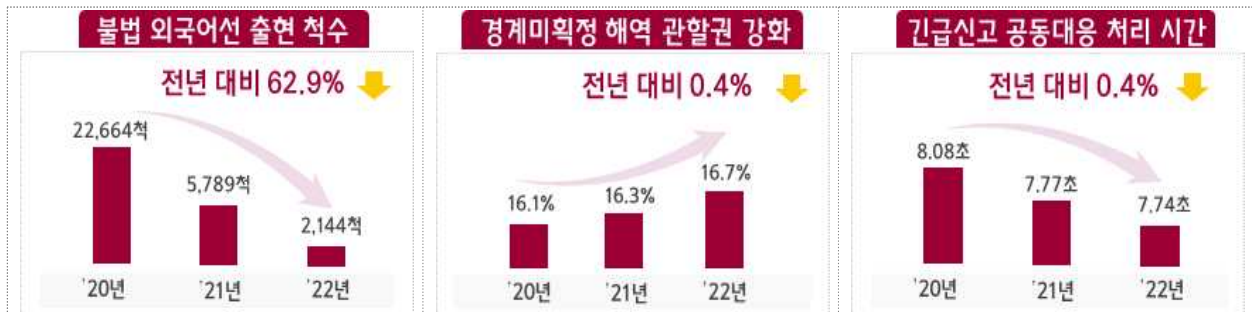


5 현장에 충실한 직무기반 마련

- ▶ '23년 예산(1조8,108억) 및 국유기금(471억) 확보
- ▶ 현장 중심의 필수인력 증원(+97명) 및 직급상향(±16명)
- ▶ 현장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통신체계(재난통신망) 개선

□ [경비] 첨단기술 활용한 해양주권 수호 고도화

- 위성영상 분석 등 불법조업 감시체계 강화, 한·중 간 외교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불법어선 감소 및 우리해역 주요어획량 증가
 - * (어획량) '21년(8월) 꽃게 7,020톤, 민어 2,458톤 → '22년(8월) 꽃게 10,539톤, 민어 4,896톤
- AI기반의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22~'26년, 90억원) 1단계 완료, MDA 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교육* 등 운영역량 강화
 - * (위탁교육) USCG MDA 전문과정(2명 수료) (전문인력) 위성정보분석관 2명 채용
- 상황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시스템(해양기상분석, 스마트신고접수, AI기반 상황접수·처리 등) 구축 추진
 - * 토속지명 GIS 반영, 현장세력 대응정보 표출, 현장상황관리 원터치 입력개선 등



□ [안전] 예방 중심의 해양 안전관리 정착

-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구축,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내실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 추진으로 연안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
 - * 최근 5년 평균 대비 연안사고 17%(699건→575건), 사망 13%(115명→100명) 감소
-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및 구조 인프라 확충, 민간자원 동원체계 효율화 등 전방위 대응역량 고도화로 선박사고 인명피해 방지
 - * 최근 5년 평균 대비 선박사고 인명피해 26%(84명→62명) 감소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총6장 32개 조문)」 제정안, 「수상레저안전법(총8장/64개 조문)」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공포('22.6.10.)
- * 향후 법 시행('23.6.11.)에 맞춰 분야별 전문화된 하위법령 제때마련 추진

□ [치안] 해양수사의 내적 역량 강화

- 마약수사 전담조직(지방청별 마약수사대 등) 운영 및 수사인력 확충, 국내·외 수사기관간 공조체계 구축 등 마약수사 인프라 강화
-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태국 마약청, 美 마약단속국, 대만 경찰청 등과 협력 강화
- 일선 수사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중심 이중심사체계' 구축, 안정적인 수사 심사제도 운영으로 보완수사 요구율 감소
- * (보완수사 요구율) '21년 7.5% → '22년 5.2% (2.4% 감소)
- 국내·외 유관기관 초청 「국제범죄 공조강화 워크숍」 개최, 광역화·지능화되어가는 국제범죄 사례 공유 및 상호 협력기반 마련
- * '22.8월 국정원·대검·경찰청·법무부·美 HSI·태국 마약청 등 총 93명 참석



□ [환경] 선제적 조치로 해양오염 최소화

-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홍보 추진 및 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등 선제적 예방 조치로 오염사고 17%(247→206건) 감소
- * 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추진, 선박 등 3,385개소 점검, 오염행위 등 총 1,095건 적발
- 좌초·침몰 등 선박사고 시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배출방지조치 7.6%(145 → 156척) 증가
- * 유류이적(45척, 7,976kℓ), 봉쇄(61척, 197개소), 비상예인(89척) 등 배출방지조치 적극 실시

- 어선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22년부터 시행되는 어선 방제보험을 통해 방제조치 비용을 보상하여 영세 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22년 어선 방제비용 6,900만원(44건) 중 방제보험으로 3,500만원(9건) 보상



□ [혁신] 현장에 충실한 직무기반 마련

- '23년 예산 18,108억 원 확보('22년 16,856억 대비 1,252억원 7.4% 증액), 주요사업비 962억원(12.7%) 및 인건비 304억원(3.5%) 증액

* 위성센터, 인천서 등 30개 사업 총 471억원(159억 증액) 국유기금 반영

- 정부 감축 기조에도 필수인력 97명(정기 75명·수시 22명) 확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종사 및 광역VTS센터장 등 직급상향(±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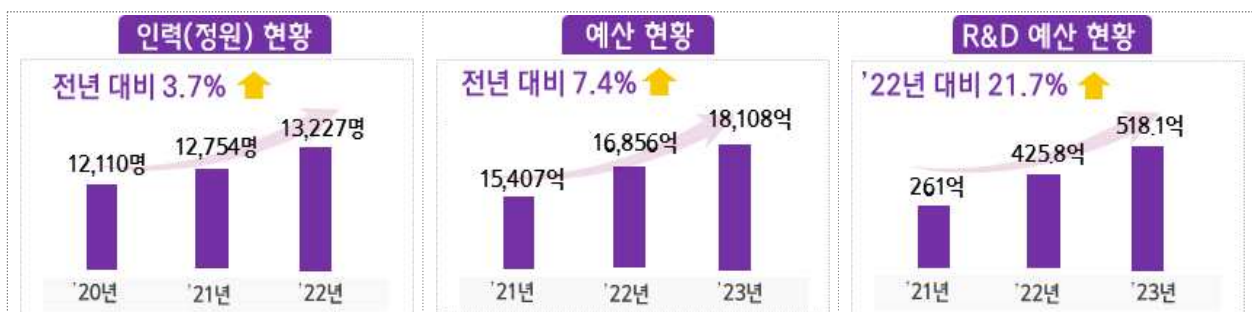
* '23년 정부 전체 정기 증원인력(250명) 중 우리 청 증원인력(75명)이 30%

-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휘통신망 전환(LTE → 재난망), 단말기 하나로 지휘망·위키토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 개선

* 단말기 4,717대(스마트폰형 3,593대, 무전기형 276대, 복합형 848대) 조기 확보·보급

< 주요 기관평가 현황 >

- ①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주요정책·규제혁신·적극행정·자체평가) 달성
- ② 감사원 주관, '22년 자체감사 「사전컨설팅 분야」 '우수기관' 선정
- ③ 데이터 기관평가 3종(제공·품질·활용) 전 분야 종합 '우수' 등급 달성



2. 보완 필요사항

□ 함정운영 여건 개선 및 인적역량 강화 필요

- 취사부담과 근무환경 열악으로 인한 소형정(P정) 근무 기피 및 초기 상황대응의 핵심인 함·정장 인적관리 및 평가체제 부재

〈 '22년 개선방향 〉

- ✓ 필수 교육훈련으로 검증된 인력풀을 구성하고 보직 시 교육훈련과 성과평가를 거치도록 인적자원관리 강화, 치안여건 감안 소형정 근무체계 개선

□ 무인기(드론) 운용 전문화 방안 마련 필요

- 함정용 드론 도입·운영에 대한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 부족, 향후 중고도 무인기 도입 등을 위한 무인기 운영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 '22년 개선방향 〉

- ✓ 중고도 무인기 도입·운영 여건 검토, 드론 운용인력에 대한 직렬 신설 및 교육훈련 등 드론 관련 인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 환자 이송체계 효율화를 위한 구급시스템 개선 필요

- 대형 해양사고 시 신속한 중증도 분류 및 체계적인 이송관리 등이 요구되나 現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은 영상진료 및 생체정보 전송만 가능

〈 '23년 개선방향 〉

- ✓ 現 보령·목포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고도화*, 응급환자 생체정보 및 이송과정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 전자태그 및 NFC 방식 종이태그, 쉼 구조세력 대상 배포(326 개소) 추진

□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신기술·신소재 기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적절한 검사기준 및 사회적 약자층(신체장애, 고령 등)의 조종면허 취득에 대한 세부검증기준 부재

〈 '23년 개선방향 〉

- ✓ 친환경 기구 검사기준 마련 및 안전검사기준 전면 개편, 신체(고령자 포함) 장애 및 정신질환 장애등급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가능 기준 마련

□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마약수사 인프라 보강 필요**

- 관서별 마약수사 전담부서 부재 및 전담인력 부족, 관련 정보수집 등을 위한 국내·외 마약 단속기관과의 공조 네트워크 미비

〈 '22년 개선방향 〉

- ✓ 지방청 마약수사대 직제화 및 마약수사 전담인력 확충, 유관기관 공조 강화

□ **HNS 등 해상 화학사고 등 대비·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신규 화학물질 및 위해요소를 통한 해상 화학사고 가능성이 증가

〈 '22년 개선방향 〉

- ✓ 해상화학사고에 대한 해역별 위험도 재평가, 현장 대응훈련 및 전문교육 강화, 화학방제 자원 확충, 위험물 운반정보에 대한 사전파악 방안 마련

□ **내구연한 초과 장비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필요**

- 노후 함정·항공기 적기 대체를 통한 성능개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 (노후장비) 함정 62척 (노후화율 약 17.3%) / 헬기 3대 (노후화율 약 16.6%)

〈 '23년 개선방향 〉

- ✓ 지속적인 노후장비 대체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내구연한 고려 합리적 교체시기 준수 및 안전도 검사 강화로 노후장비 안전 확보

□ **연구개발(R&D) 성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R&D 예산 확대에 따라 연구 성과물 증가('23년도 24개), 성과물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R&D 연구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 '23년 개선방향 〉

- ✓ R&D 성과물 현장보급 및 성과관리 등 '성과물 관리지침' 마련

□ **정부업무평가와 내부 성과평가의 연계성 강화 필요**

- 정부업무평가 내 주요정책이 내부 성과평가 내용과 연계성 부족

〈 '23년 개선방향 〉

- ✓ 성과평가체계 문제점 및 他 기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개선책 마련

1. 대외적인 여건

□ 한반도 주변 해역의 국제적 분쟁 및 신홍안보 위협 확대

- 미·중 해양패권 경쟁의 심화, 경계미확정 해역에서의 주변국(中·日) 활동 증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최근 해양 안보위협 증대

* 中조사선(서해) : 39회('21) → 57회('22), 日순시선(독도) : 78회('21) → 82회('22)

- 환경·식량·에너지·자원·인구·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요소의 출현과 안보위협 주체(국가·민간 등)의 다변화로 신홍안보* 지속 확대

* 미시적 소규모 안전 문제가 거시적 국가 차원의 안보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

□ 첨단기술 기반의 공공정책 시행 등 기술중심 정책환경 대두

- 첨단 과학기술 혁신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대규모 자본 투자 등 관련 분야의 인력·정책 비중 강화

* 디지털플랫폼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바이오 헬스 혁신방안 등 추진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 해양교통정보서비스(e-Nav) 등 첨단기술의 해양분야 도입 가속화

*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우주 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재정 지출 재구조화 및 효율성 중심의 정부 조직관리 실시

- 국가채무·재정적자 확대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출 재구조화 전망

* 국고채 금리 : 0.976%('20년말) → 1.798%('21년말) → 2.242%('22년말)

-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화 발생,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이행을 중심으로 정부조직 효율화

* (이명박정부) 99만 → (박근혜정부) 103만 2천 → (문재인정부) 116만 3천

2. 대내적인 여건

□ 우리청 주요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 정책추진 동력 확보

- MDA 구축, 경비력 증강 등 중장기 핵심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

< 우리청 소관 국정과제 >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 (소관부처, 해수부·해경청)
실천과제	41-2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경비정보융합 플랫폼(MDA)에 기반한 해양통제력 강화 ■ 주변국 견제·균형 수준의 대형함정 증강과 감시체계 첨단화 * 해상용 드론 단계적 도입, 위성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등
	41-3 과학적 해상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항안보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AI 기반으로 촘촘한 해상교통관제망(VTS) 구축 ■ 해양 인명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고도화 ■ 방제장비·기술 개발 등 방제 역량·인프라 강화

- 우리청 비전의 개선(「비전 2030」→「비전 2033」)작업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의 내적 기반 마련

□ 분야별 직무 전문성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 증대

- 현대사회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건·사고 발생 개연성 지속 증가, 최일선 대응기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기대수준 상승
- 해양주권 수호, 해양사고 대응, 해양범죄 수사 등 주요업무 분야와 관련한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중요성 부각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미래 지향적인 정책추진에 관심 집중

- 예방적 안전관리, 광범위 해양감시 등 업무체계 개선·효율화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확대, 현장을 중심으로 미래기술 개발투자 증가
-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 마련과 함께, 그간의 외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내실화 요구 증대

1. '23년 정책추진 전략

□ 우리청 비전(개정 비전 2030)과의 연계성 강화

-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별 연차적 추진계획(즉시·단기·중장기) 수립, 비전 실행계획과 기능별 중기계획을 연계하는 기반 마련
- 비전 실행과제 중 즉시 이행과제를 '23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 향후 연차별 이행과제는 차기 년도 업무계획에 순차적 반영 추진
 - * 매년 10월 기능별 차기 년도 비전 실행과제 사전 도출, 정책과제로 수립·추진

□ 정책과제별 추진 목표 명확화

- 추진과제별 성격 분류, 명확한 목표 제시로 실질적인 성과 유도

구 분	과제 성격	추진 목표
국정과제	국정과제 이행 세부계획	우리청 주관 국정과제 이행
신규과제	신규 추진 정책·사업	신규 정책적 수요 해소
계속과제	'22년 정책 고도화*	'22년 추진정책 보완 및 고도화
	* MDA, 위성센터, 종합안전망, 생존수영, 응급구조체계 등	

□ 주요 정책과제별 효과성 분석 실시

-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선정하고, 그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에 대해 매월 추진경과 점검* 실시
 - * 매월 현안점검회의(차장 주관) 시, 추진경과 및 기능간 협조사항 점검·논의
- 상·하반기 성과보고회를 통해 정책효과 점검(실적위주 점검 지양), 주기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해 과제별 추진 목표 및 방향 수정
 - * 대내·외 만족도 조사, 현장 정책피드백(해드림 확대 등), 빅데이터 분석 등 활용
- 내부 성과평가체계 개선으로 정책과제와 평가의 연계성 강화
 - * 정부업무평가의 자체평가 등이 현재 주요정책 위주로 평가되도록 지침 개선

2. '23년 정책추진 체계도

미션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비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

주요 정책

해양
경비

1. 경비체계 개선 및 함정 운영역량 강화
2. 고질적·관행화된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3. ICT기반 효율적 상황대응체계 구축
4. 해양주권 확립을 위한 경비세력 확충 등

구조
안전

1. 사고 예방 중심 연안안전관리체계 강화
2.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3. 해양 인명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고도화
4. 미래 수상레저 정책수요 창출 R&D 추진 등

해양
치안

1.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차세대 KICS 구축
2. 수사청렴도 향상 및 투명한 수사문화 조성
3. 해양 마약수사 전문기관으로 도약
4. 지역 특성화 국제범죄 대응 및 공조 강화 등

해양
환경

1. 정부합동 '해양오염사고재난 관리 혁신' 추진
2. 국가 주도 해양오염 재난대응체계 확립
3.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4. 방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소통 강화 등

조직
관리

1. 중장기 비전과 정책관리 역량 강화
2. 성과와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 개선
3. 미래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4. 공간빅데이터 구축 및 업무활용성 강화 등

구분	주요 정책과제	소관부서	비고
기획조정관	(역점) 중장기 비전과 정책관리 역량 강화	기획재정	신규
	(역점) 「비전2033」 중요과제 연구용역 추진	기획재정	신규
	(역점) 국민체감 기반의 규제혁신 내실화 추진	행정부무	계속
	국민패널 운영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행정부무	신규
	성과관리체계 개선 및 변화관리/정부혁신 추진	행정부무	계속
	(역점) 성과와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 개선	인사	신규
	현장목소리 반영 '수요자 중심' 인사정책 추진	인사	계속
	통합 인사운영체계 인사All-in-one구축	인사	신규
	(역점) 미래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교육훈련	신규
	현장직원 직무 전문성 고도화 추진	교육훈련	계속
	채용 환경 변화에 맞춘 적극적 채용제도 개선	교육훈련	계속
	다양한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교육훈련	계속
	(역점) 공간빅데이터 구축 및 업무활용성 강화	빅데이터	계속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역량 제고 및 체계화	빅데이터	신규
경비국	(역점) 경비체계 개선 및 합정 운영역량 강화	경비	신규
	고질적·관행화된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경비	계속
	해양권익 보호 및 해양안보 역량 강화	경비	계속
	(역점) VTS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교통관제	신규
	(역점) 목포·군산광역VTS운영 및 전국확대 구축	교통관제	국정
	『해상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파트너십 강화	교통관제	신규
	관제 데이터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VTS개발(R&D)	교통관제	국정
	(역점) ICT기반 효율적 상황대응체계 구축	종합상황	계속
	명확한 상황관리를 위한 유능한 상황전문가 양성	종합상황	계속
	해양경찰 해상기상 업무체계 고도화	종합상황	신규
	상황관리 조직 및 근무체계 현실화	종합상황	신규
수사국	(역점) 원활한 수사활동과 인권보호 위한 법령개정	수사기획	계속
	(역점)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차세대KICS구축	수사기획	계속
	현장 수사력 강화를 위한 수사기반 마련	수사기획	신규
	수사인력 효율화 관리로 수사질적 향상	수사기획	계속
	(역점) 수사청렴도 향상 및 투명한 수사문화 조성	수사심사	신규
	국민과 함께하는 수사인권 업무 추진	수사심사	계속
	심사제도 효율화를 통한 수사 완결성 확보	수사심사	계속
	(역점) 해양 마약수사 전문기관으로 도약	형사	신규
	국민안전 특별단속 강화 및 수사메뉴얼 발간	형사	계속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위한 기획수사 추진	형사	계속
	예방중심의 형사활동 및 형사2계 수사역량 강화	형사	계속
	(역점) 해양사이버 수사 대응체계 구축	과학수사	계속
	해양경찰 과학수사 발전방안 지속 추진	과학수사	신규
	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업무환경 개선	과학수사	신규
구조안전국	(역점) 사고 예방 중심 연안안전관리체계 강화	해양안전	계속
	(역점)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해양안전	계속
	파출장소 임무수행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대	해양안전	계속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	해양안전	신규
	(역점) 해양 인명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고도화	수색구조	국정
	해양재난 대비 구조대응역량 강화	수색구조	계속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상 구급체계 고도화	수색구조	계속

구분	주요 정책과제	소관부서	비고
	수상구조사 자격 정책·제도적 기반 강화	수색구조	신규
	(역점) 미래 수상레저 정책수요 창출 R&D추진	수상레저	신규
	개편 수상레저 법체계의 조기 안착 및 보완	수상레저	계속
	수상레저 정책 확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재개	수상레저	계속
국제 정보국	(역점) 지역 특성화 국제범죄 대응 및 공조 강화	외사	계속
	신흥 안보위협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외사	계속
	(역점) 국제업무 확대 및 역할 고도화	국제협력	계속
	국제정보·해양법 역량 강화	국제협력	계속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교류 다변화	국제협력	신규
오염 방제국	(역점) 정부합동·해양오염사고재난 관리 혁신·추진	방제기획	신규
	재난형 해양오염사고 대응 조직 역량 강화	방제기획	계속
	방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소통 강화	방제기획	계속
	해양환경재난 대비 방제기술·인프라 고도화	방제기획	국정
	(역점) 국가 주도 해양오염 재난대응체계 확립	기동방제	계속
	전문성 강화를 통한 현장방제 역량 제고	기동방제	계속
	복합 해양오염사고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기동방제	국정
	한국형 방제시스템 고도화	기동방제	계속
	(역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오염예방	계속
	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선박·시설 중점관리	오염예방	계속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예방활동 추진	오염예방	계속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환경 예방관리정책 이행	오염예방	계속
	임무환경에 적합한 함정, 항공기 적기 도입	장비기획	계속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기술역량 제고	장비기획	신규
장비 기술국	효율적 장비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장비기획	신규
	(역점) 함정안전·가동률 향상, 정비·보급체계 강화	장비관리	계속
	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노후 공용차량 조기교체	장비관리	계속
	(역점) 해양경비력 강화 항공정보 플랫폼 첨단화	항공	계속
	고난이도 임무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항공	신규
	항공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관리 여건 조성	항공	신규
	신뢰받는 항공정비관리 시스템 추진	항공	신규
	(역점) GMDSS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	정보통신	계속
	IoT기반 스마트 함정 플랫폼 구축	정보통신	신규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 강화	정보통신	신규
	(역점) 안전한 정비창 건설사업 위한 현장관리 강화	정비창신설	계속
	서부정비창 운영인력 및 장비 예산 확보	정비창신설	신규
직속 부서	(역점) 「바로해(海)플랫폼」을 활용한 내부통제 제도 정착	감사	계속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해양경찰 실현	감사	계속
	안전을 위협하는 구시대적인 관행 근절	감사	계속
	내·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감사 추진	감사	신규
	(역점) 해양경찰 창설70주년 기획홍보 강화	대변인	신규
	국정과제 대국민 소통 위한 전략적 언론 홍보	대변인	계속
	(역점)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건립 추진	운영지원	계속
	마음 소통, 사소한 만남을 통한 근무만족도 향상	운영지원	신규
	해양경찰 마음돌봄프로그램 내실화	운영지원	계속
	(역점) 위성센터 기구 신설 및 전문인력 확보	스마트	국정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지속 확대	스마트	계속
	(역점)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양성	신규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양성	계속

기획조정관

역점	중장기 비전과 정책관리 역량 강화	기획재정
	[과제목표] ('22년) 정책연계를 마련 → ('23년) 정책관리 고도화 → ('24년) 정책연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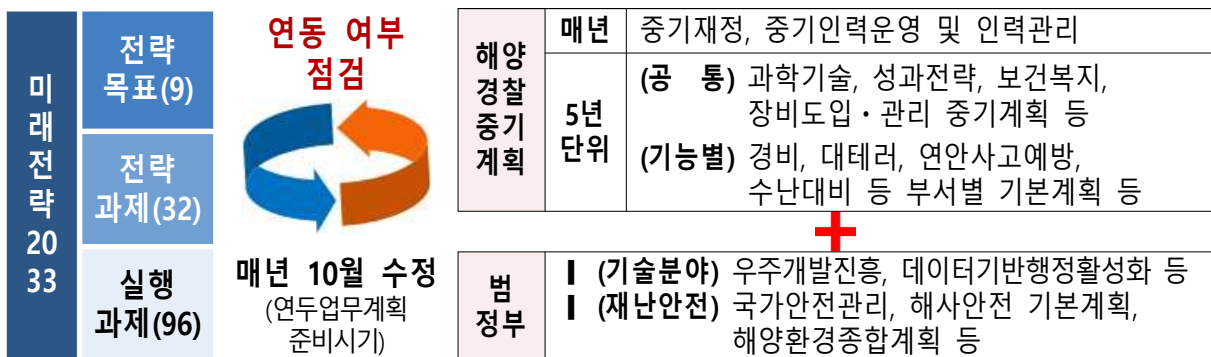
□ 추진 배경

- **(대내적)** 우리청 미래 발전전략에 포함된 각종 전략과제-실행과제가 실행력을 갖고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대외적)** 정책환경이 복잡해지고, 외부 변화 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식 교류,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적 거버넌스 중요성이 강조
→ 民-官-學 협력, 부처 협업 등 정책 네트워크 관리 및 확대 필요

□ 세부 내용

- **(비전-정책 연계 강화)** '비전2033'과 '주요 중기·기본계획, 범정부 주요 정책'을 연계하고, 단기계획까지 정책방향성이 반영되도록 점검

※ 주요 중기계획과의 연계를 마련完('22.12월) → 연두업무계획 수립전 점검 실시(매년 10월)



- **(정책 네트워크)** 국가정책 수준으로 정책관심이 확대되도록 주요 학계(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 등) 협력 정례화, 학계 내 당연직 임명 확대

✓ ❶ 우리청 이슈의 주요학술대회 상정 지속 ⇒ ❷ '주요학회 내 (가칭)해양안전·안보분과연구회' 신설 ⇒ ❸ 연구사업 확대(본청-연구센터 교류 강화)

□ 추진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1분기	❖ 한국정책학회 춘계세미나 참여, 해로연구회 당연직 확대 협의
3분기	❖ 한국행정학회 추계세미나 참여, 비전-정책 연동체계 점검 실시

역점	개정 비전2030 중요과제 연구용역 추진	기획재정
	[과제목표] ('22년) 비전달성 추가 연구과제 용역 → ('23년) 비전관리 체계에 반영 정책연계	

□ 추진 배경

- '22년 '비전2030 고도화 연구용역' 결과 해양경찰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정책·조직·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후속연구 필요 결론
- ※ '비전2030 고도화 연구용역'에서 방향성은 제시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세부 내용

- 추가연구 필요성이 제기된 ①정책관리, ②조직관리, ③인적자원 관리 측면의 3대 분야 중요 과제를 선정, 연구용역 추진

- ① **(미션·비전체계 개선)** 해양경찰법에서 부여한 임무(△해양주권수호, △해양안전, △치안확립)를 미션과 비전에 명확히 반영하되, 국민과 내부 직원 모두의 수용성이 높도록 '미션·비전 개선안' 마련

⇒ 자문·공론화를 거쳐 창설 70주년 기념 일정에 맞춰 새 미션 체계 연구 추진

- ② **(정책/상황 분리)** 상황발생시 중장기 추진 정책이 상황(현안)처리에 매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해양경찰 조직 재구조화 방향 검토

⇒ 1인 통솔범위 한계를 고려하여, 상황대응 전문성을 높이면서 정책관리(예산·기획 등) 연속성도 담보하도록 수평적 분화방안 제시

- ③ **(인적역량 관리)** 인적자원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에. 따른 3B전략*을 구체화하여 미래형 인재확보·교육훈련 등 방향 제시

※ (3B전략) **Build**(채용 후 육성), **Buy**(외부인재 채용-첨단분야 등), **Borrow**(전문가 한시채용)

□ 추진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1분기	❖ 3대분야 중요과제 연구계획 수립,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2~3분기	❖ 연구용역 진행, 최종보고회 개최
4분기	❖ 연구결과물을 반영한 비전2030 수정, 중기·단기 정책연계 추진

역점	국민체감 기반의 규제혁신 내실화 추진	행정법무
	[과제목표] 규제혁신 현장 인터뷰 ('22년) 4회 → ('23년) 6회	

□ 추진배경

- **(외부환경)** 국민의 규제합리화, 규제의 품질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6.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내부환경)** 규제 사각 해소 등 실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규제순응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을 위한 합리적 규제시스템 마련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민중심)** 국민·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경험자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인터뷰** 지속 추진
- **(연구용역)** 소관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 규제의 실효성과 국민·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 타기관 사례: 소방청, 법령의 규제개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2017)

〈 정책연구(案) 〉

- ✓ 소관 법령의 규제사례, 실태, 국민의 순응도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 규제법령 제·개정 시 규제적절성·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절차개발
- ✓ 불합리한 규제시스템 발굴, 개선대책 및 일몰규제 설정의 적절성 등 심층연구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규제혁신 간담회	❖ 규제학회 업무협약
2분기	❖ 규제개선 정책연구과제 수요제출	❖ 규제혁신 현장 인터뷰 실시
3분기	❖ 규제개선 정책연구용역 수행	❖ 규제혁신 홍보콘텐츠 제작
4분기	❖ 국조실 주관 규제혁신 평가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편
수시	❖ 규제혁신 실무회의 및 TF회의 개최	❖ 규제혁신 카드뉴스 등 제작·배포

정책	국민패널 운영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행정법무
	[과제목표] 정책·사업 모니터링 및 아이디어 제안 분기별 실시	

□ 추진배경

- (정책 환류) 정기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해양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 환류를 통해 정책개선 흐름 확대
- (적시성 확보)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 현안 대응에 적시성 있는 유의미한 통계 자료의 생산·보급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대상) 해양경찰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 해양경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으로 패널 구성, 총 334명 선발(22. 11월)

① 정책·사업 모니터링	해양경찰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효성 파악, 긍정&부정 반대 의견수렴 등 방향성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② 아이디어 제안	해양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도 개선을 위한 ①정책적 제안, ②개선 아이디어 제공 등 국민의견 수렴
③ 패널 FGI(집단면접)	「국민패널 ↔ 정책부서」 간 주요 정책 등 조사목적과 관련된 양방향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국민의견 수렴 및 개선과제 발굴
④ 홍보 채널	국민패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해양경찰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능동적 마케팅을 통한 선순환 효과 기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정책·사업 모니터링, 정책·아이디어 제안(~3월)
2분기	❖ 정책·사업 모니터링, 정책·아이디어 제안(~6월)
3분기	❖ FGI(집단면접) 조사 실시(7월), 정책·사업 모니터링, 정책·아이디어 제안(~9월)
4분기	❖ 정책·사업 모니터링, 정책·아이디어 제안(~12월)

정책	정부정책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정부혁신 추진	행정부무
	[과제목표] (성과관리) 성과관리체계 개선(안) 수립 추진 (조직문화) 내면이 단단하고 스마트한 조직 내부역량 토대 구축 (정부혁신) 디지털 행정 고도화 및 對국민 소통·행정서비스 향상	

1. 새정부 국정과제·정부정책 연계성, 내부평가 공정성 확보 측면 관리과제 및 KPI 개선으로 廳 성과관리체계 안정화 추진

□ 추진배경

- **(변화하는 정부정책 반영)** 우리청 국정과제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재설정하고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각종 지표*를 성과체계에 반영
 - * 디지털플랫폼정부구현에 따른 빅데이터 지표, 우수장비 도입 관련 측정산식 신설
- **(정책 효율성 강화)** 정부업무평가와 내부성과평가의 연계 요구에 따라 성과관리·평가가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도록 개선 필요

□ 세부내용

- **(성과목표 고도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국정과제 맞춤형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체평가 관리과제 및 기관성과지표(KPI)에 반영



- **(성과관리체계 개선)** 소속기관 평가항목 中 변별력 강화를 위해 부서목표관리(MBO) 폐지를 검토하고 대체 방안(KPI 확대 등) 마련
 - 他 기관 및 기업의 사례를 분석과 성과담당 워크숍 및 지방청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우리청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수립
 - * '23년도 사례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 성과평가체계는 '24년도에 반영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기관성과지표(KPI) 고도화 (2~3월)
2분기	❖ 성과관리체계 분석(4~5월) 및 성과관리 워크숍(5~6월)
3분기	❖ 지방청 및 소속기관 설명회(7~9월)

2. 세대별 맞춤형 변화관리와 세대 간 소통 활성화로 내부역량 결집

□ 추진배경

- **(조직문화)** 최근 세대별 비중 양극화* 관련 기성·MZ세대 대상 맞춤형 조직문화 개선 추진 및 **소 세대**가 함께하는 소통·화합활동 필요
 - * MZ세대 : 53% → 60% 확대, 기성세대 : 47% → 40% 축소
- **(정부혁신)** 새 정부의 혁신 추진방향** 고려 정부혁신 리뉴얼 필요
 - ** 국민에게 최고 서비스 제공 ☞ "적극행정", 근무방식 개선 ☞ "온라인·디지털 중심"

□ 세부내용

- **(조직문화 개선 진행)** 세대별 핵심위주 맞춤형 변화관리 및 세대 간 소통 활성화로 단단한 조직역량 구축, 해경 혼(魂)을 조직 핵심가치로 활용
 - **(①세대별 맞춤 관리)** MZ세대(60%)가 양적성장 못지않게 조직의 진정한 주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직 정체성 제고, 상행하효* 고려 올바른 문화 전승 및 인재육성 위한 기성세대(40%) 대상 변혁적 리더십 교육/코칭 강화
 - * 상행하효(上行下效) : '윗 사람이 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받음', 후배직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 필요 의미
 - **(②세대 간 조화 추진)** **소 직원**이 동참하는 세대 간 소통활동을 강화하여 오로지 해양경찰의 이름 아래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문화' 구축
 - **(③조직 핵심가치 정립)** 헌장·인재상·교육원 원훈 등 여러 정신적 가치를 「해양경찰 혼(魂)」으로 통합하여 조직역량 결집 및 **廳 변화관리**의 핵심가치로 활용
- **(정부혁신 리뉴얼)** 온라인·디지털 행정 고도화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보상·면책분야)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선제적 해양서비스 지원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조직문화 개선 기본계획 수립(3월),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3월)
2분기	❖ 조직문화 개선 실천과제 발굴(4월), 혁신파이어니어 대표단 워크숍(6월)
3분기	❖ 조직문화 개선 추진실적 점검(8월), 정부혁신 실행과제 점검(9월)
4분기	❖ 조직문화 개선 추진실적 점검/정부혁신 실적 보고(11월), 조직문화 개선 유공 포상(12월)

역점	성과와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 개선	인사
	[과제목표] ('23년) 승진제도 개선 관련규정 개정 → ('24~'25년) 유예기간 후 개선제도 적용	

□ 세부내용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순경 → 경무관까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현재) 16년 → (개선) 11년 <5년 단축>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안) 〉							
최저연수(년)	순경→경장	경장→경사	경사→경위	경위→경감	경감→경정	경정→총경	총경→경무관
현행	1	1	2	2	3	3	4
개선안	1	1	1 (-1)	1 (-1)	2 (-1)	2 (-1)	3 (-1)

- (성과중심의 승진인사) 경력평정 반영비율과 기간을 조정하여 연공서열보다는 유능한 직원이 승진하는 조직문화 조성

- (경력평정비율 조정) 성과와 실적에 따른 승진인사가 되도록 승진대상자명부(5배수) 작성 시 「근무평정-경력평정」 간 반영비율* 조정

* (현재) 근무평정 65 : 경력평정 35 → (개선안) 근무평정 70 : 경력평정 30

- (경력평정기간 현실화) 승진소요최저연수·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경력평정 만점기간도 현실화하여 평정의 실효성 확보

* 예) 「경위 7년 / 경감 9년」 → 「경위 6.5년 / 경감 8년」
 * 예) 경위·경감의 경우,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이 '근속승진기간'보다 길어 전반적인 정비 필요

-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직무몰입도 향상을 위한 심사승진 비율 확대

* (현재) 경감·경정 심사7:시험3 / 경위 이하 심사6:시험4 → (개선안) 쏜계급 심사7:시험3

- (심사승진에 순환전보특성 반영) 해·육상 순환근무 특성을 감안하여 승진심사 항목 '경험한 직책' 점수를 조정*, 다양한 직무경험 유도

* 경사 이하의 '경험한 직책' 월별 점수를 상향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포함한 다양한 부서에 근무할 경우에만 만점에 도달하도록 정비

□ 추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1분기	❖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및 인사혁신처 등 실무협의(3월)
2분기	❖ 제도개선안 확정 및 적용시점 검토(5월), 개정계획 수립(6월~)
4분기	❖ 법령개정 완료(12월)

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 '수요자 중심' 인사정책 추진	인사
	[과제목표] 급변하는 인사환경 변화, 현장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인사제도 개선 추진	

□ 추진배경

- 본청 인적 구성 다양화·정예화 등 요구, 지방청 채용 신입 증가 등 인사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 인력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승진·승급·표창 등 인사 포상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등 지속 향상

□ 세부내용

- (경감 근속승진 확대) 그간 年1회 실시로, 근속대상임에도 1년을 기다려야 했던 경감 근속승진을 年2회 실시, 승진인원 확대
* 세부 시행지침 마련('22.12월) / 대령·훈령 개정 완료 ('22.12월말 공포·시행)

< 경감 근속승진 확대 규모(안) >

* '23년도 근속 기준

구 분	이 전	확 대
근속승진 횟수	年1회 (1월)	年2회 (1·7월)
근속승진 인원	약160명	약210명 (50명·31%↑)

- (전보 개선) 선호-비선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본청은 경감 반장 까지 국별 안배 배치 검토, 지방청 채용자 인력운영체계 등 개선

< 전보개선(안) 세부내용 >

적 용	개선(안) 내용	비 고
경정	본청 전보요건 개선 (△現2년이상 → 3~5년 경정으로 명확화, △본청 연속근무 現6년 → 5년 단축, △본청 승진자 전출 의무화, △위원회 예외결정규정 삭제 등) * ①기존 경감 이하 본청 경력2년 조건 → 지방청 4~5년 근무도 인정, ②근무상한 기간 전에도 업무능력 미달자 소속기관 전출 검토	인사규칙 개정
경감	본청 '경감 반장급·간후 전임자'는 전국단위 희망자(인사운영시스템 활용)를 받아, 인사에서 각 국별 안배 배치 검토 (↔기존에는 전출자가 후임자를 찾아야하는 시스템)	전보지침 개정
경위 이하	10년 전보제한인 '지방청 채용자'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23년부터 본청·교육원 전입 허용 (전입 조건: 5년이상, 사무실 1년이상 등) * 인력난이 심한 '중특단 지역 특구대' 운영을 위해, 지방청 채용 구조직별은 해당지역 특구대에 전보가 가능하도록 검토 (예: 서해청 채용 → 서해 특구대)	전보지침 개정

- (순환전보 강화) ① 관서별 순환전보 결과 공개 및 '준수율'(KPI-기관성과 지표) 도입, ② 선호도(상중하) 순환근무 기준 고도화* ③ 신입 순환근무 강화를 위해 휴직기간 등 제외 '실근무' 기준으로 명확화

* 선호도 선정:(기존) 직원투표 → (개선) 근무희망지 조사결과·치안수요·근무형태 등 반영

- (비선호 부서 인센티브 강화) 파출소장·상황실장 등 비선호 직위, 소형정·일선서 사무실 등 비선호부서 근무자 인사상 인센티브* 검토

* 정기전보시 선호도 '상'부서 우선 보직, 승진심사 점수(경험한 직책) 상향 등 검토

- (포상체계 개편) 포상의 영예성 등 고려, 특별승진·승급 등 개선

- (특별승진) 주요정책 유공 폐지, '수시특진(구조·수사 등)'으로 내실화

- (특별승급) 지방심사 정착을 위해, '심사기준 구체화' 등 절차 강화

- (표 창) ① 기관간 형평성·업무 연관성 감안, 표창인정 기관을 조정하고, ② 영예성 고려, 합장 표창은 경정 합장(대형합장) 점수만 인정*

* 다만, 지휘권을 위한 파출소장·합정장 등 현장지휘관 소속 직원 근평권 등은 강화

- (전문직위 정비) 직위는 중요도 고려 재정비, 전문관 보직율을 높이는 등 운영 내실화, 경정도 일부직위* 지정 검토 (현재는 경감 이하만 지정)

* 경정 직위 중 장기근무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일부직위 선정

< 전문직위 재정비(안) >

구 분	'22년 현재
전문직위 수	260개 (본청 100·지방 160)
전문관 보직	177명 (보직율 68.1%)



재정비
194개 (본청 76·지방 118)
176명 (90.7%)

- (기 타) ① 파견 직위·파견자 재정비('23년 정기전보), ② 장기 국외훈련·해외주재관 복귀자 효율적 인사관리 방안 마련(교육·국제 협의)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경감 근속승진 확대(1월), 특별승진·특별승급 계획 수립(1월) ❖ 전문직위 재정비(1월), '23년도 정기인사·순환전보 결과 공개(1~2월)
2분기	❖ 비선호 부서 인센티브 강화 / 인사감사 등 현장의견 수렴 등 (4~6월)
4분기	❖ 임용에 관한 규정, 인사운영규칙 등 개정(10~12월)

정책	통합 인사운영체계 인사 All-in-one 구축	인사
	[과제목표] 인사All-in-one 시스템구축 ('24년)예산확보 및 중장기플랜 → ('26년)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중요 인사정보가 각 담당자·여러 시스템에 분산, 수기(手記)·파일 형태로 관리·처리되고 있어 활용 어려움. 연계 통합·디지털화 필요
- 인사업무(고충 등)처리 시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개인이 알아야 할 인사정보(개인경력, 근평 등)는 적극 제공하는 등 신뢰성·투명성 제고

□ 세부내용

'23년도 現시스템 활용 인사정책·정보 공개 확대

- (시스템化) 기존 아날로그방식(대면상담서류전달 등)의 고충 및 교류인사 등의 업무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처리, 인사정책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 (인사정보* 공개 확대) 시스템 실시간 공개로 투명한 인사정책 운영
- * 인사정보 : 원소속, 함정·파출소경력, 근무평정결과, 5배수, 성과등급 등

<인사제도별 주요 개선계획>

구분	기 존 (인사담당자 PC내 단순 파일관리 등)	개 선 (인사시스템 운영범위 확대)
고충 상담	담당자 대면상담 ⇒ 기록관리 한계, 대면상담의 어려움	비대면 실시간 상담 ⇒ 상담·답변내용·등록시간 등 실시간 소통·기록
고충 신청	공문신청, 원본서류 별도 송부 ⇒ 엑셀관리·부서장 결재 등 개인정보문제	개인 신청 및 서류첨부 ⇒ 신청서·첨부서류 자동보존 및 개인정보보호
원소속 교류	공문신청 ⇒ 담당자 유선 통화로 원소속 확인 등	개별 시스템 신청 ⇒ 시스템으로 현재 원소속 및 배점 실시간 확인
근평·성과	전자메일 등 개별 별도통보 ⇒ 담당자 전 직원 수기작성 후 메일발송	근평 및 성과등급 시스템 확인 ⇒ 개별로 근평 및 성과등급(2년) 확인
근무 희망지	공문제출 ⇒ 부서별 개인 확인·취합후 공문제출	개별 시스템 신청 ⇒ 본청, 지방청 등 지원가능, 효율적인 인력관리

⇒ 개인이 직접 시스템으로 신청·제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가능. 또한, 개인이 해당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진행사항 등 확인 가능하여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중·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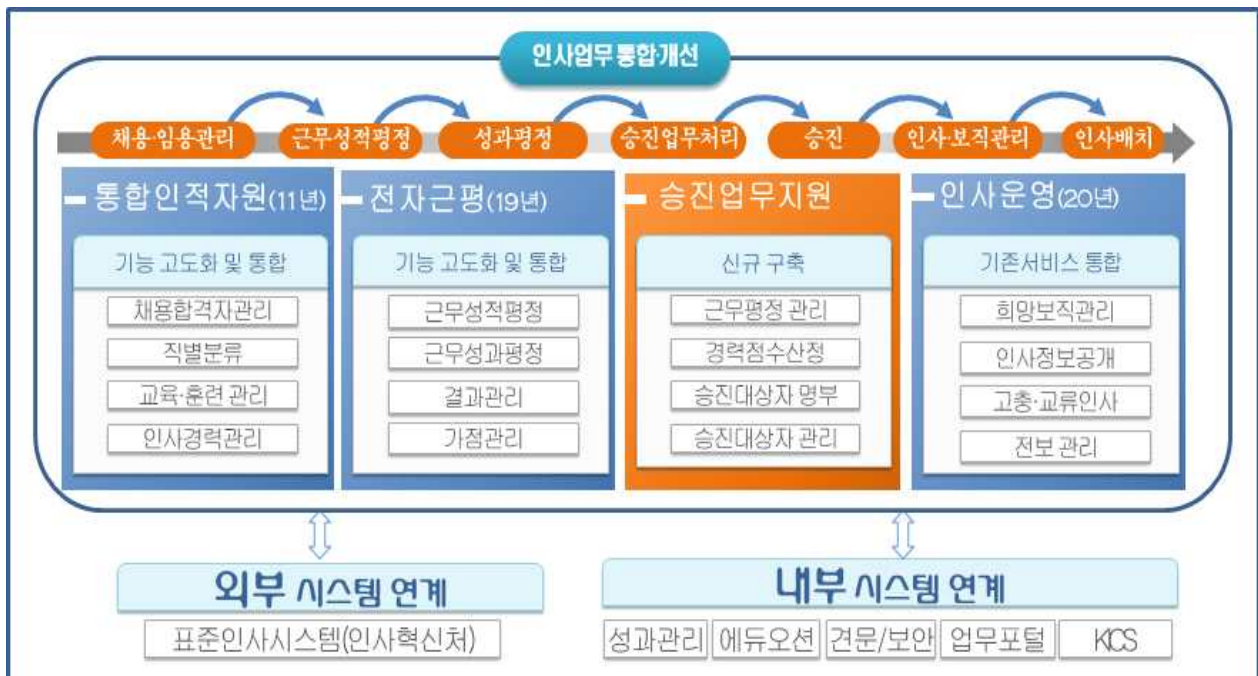
인사관련 시스템 연계 통합·활용('23년 시스템예산 확보 추진)

- (인사시스템 통합) 인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합·관리하여 임용부터 퇴직까지 'One인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보직관리

* 전자근무평정('19년), 심사지원('13년), 인사운영('20년) 등 시스템 통합 구축·관리

- (시스템 연계 활용) 각 부서별 인사관련 시스템*도 'One인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승진·전보 등 인사정책에 유기적으로 활용

* 에듀오션(교육훈련), 정보·보안·국제(건문), 성과평가 등 기능별 시스템 연계



☞ '채용 ↔ 교육·훈련 ↔ 자격·경력관리 ↔ 평가 ↔ 승진 ↔ 전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경력·특기에 따라 보직관리 및 '분야별 전문가' 양성 환경 조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평정결과 및 5배수 공개, 근무희망지 신청 시범운용(1월) ❖ 인사시스템 중기사업계획 작성·보완 및 연계 관련부서 사업계획 설명(2월) ❖ 성과 등급공개(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시스템 중기 및 본예산대응(5~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 파출소등 경력파악을 위한 전 직원 인사기록카드 정리(7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심사신청, 교류인사신청 정식 운영(11월), 총경, 4급 희망보직 신청(12월) ❖ 인사All-in-one 시스템 사업계획수립 및 보고

역점	미래형 교육훈련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교육훈련
	[과제목표] 인재개발원 ('22년) 사전타당성조사 → ('23년) 예비타당성 대상 신청	

□ 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사업개요] '27년 신설을 목표로 예산(1,700억)·조직(5과)·인력(총189명)·연간 교육인원(7,000명) 규모의 **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 →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 인재개발원 신축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
 -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의거 매년 4회(분기별 1회) 신청
- 직무교육훈련센터*를 인재개발원으로 확대 추진에 따라 소요정원 대응
 - * 정원 : ('22년) 20명 → (단기) 41명 요청(+21) 및 (장기) 189명(+148)
- 인재개발원 설립 추진을 위해 중기예산 1,683억 반영

□ 가상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메타해양경찰청 기반 마련

- RFP 마련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및 훈련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교육훈련 플랫폼 TF』운영
 - ※ 총 250억(5년차) : '23년18.5억 → '24년70.5억 → '25년84억 → '26년62억 → '27년15억

○ 교육훈련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 가상공간에서 현장지휘관과 현장요원이 실전형 훈련을 할 수 있는 첨단시설 구축
- 교육훈련담당관실과 타 기능(경비안전 등)간 DATA 연계가 되도록 기술개발
- 해양경찰 수 직원 1인 1아바타 부여
- 수 기능이 메타기반 활동토록 설계
- '24년 예산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기부국과삼기재부국회 등) 예산 심의 대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인재개발원 소요정원 요구(3월),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제안요구서(RFP) 공고
2분기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6월), 연구기관 선정(4월), 유관기관 대응(5~6월)
3분기	❖ 교육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8월), 기재부 예산 대응(7~8월)
4분기	❖ 교육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10월), 국회 예산 심의 대응
연중	❖ 인재개발원 조직·예산 확보 대응, 자료수집 및 콘텐츠·시나리오 작성

정책	현장직원 직무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훈련 추진	교육훈련
	[과제목표] ('22년) 현장부서 훈련 내실화 → ('23년) 현장부서 맞춤형 훈련체계 강화	

□ 추진배경

- 지역별 취약시기, 직원 인사발령 등 시기별·상황별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토록 중점 추진

□ 현장부서 맞춤형 훈련 강화

- (초기) 인사발령 후 早期 현장부서(함정·파출소) 팀워크 훈련 실시 및 평가

구 분		주요 내용
내용	함정	▶ (필기)백지도 평가 및 직무역량평가(카카오톡) / (실기) 훈련 종목 중 일부 시연
	파출소	▶ (필기)백지도 평가 및 직무역량평가(카카오톡) / (실기) 연안구조정 운용술
평가 결과반영		▶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선발』 항목에 평가기준 신설 반영

- (중기) 지역별 상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훈련 경진대회 고도화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경진 대회	예선	상반기 지방청 별 평가 및 1개 쏘 선발	지방청별 1·2분기 평가하여 2개 쏘 선발
	본선	본청 평가 1~5위 선발(3분기)	지방청별 1~2위 선발(3분기)
인센티브		순위별 가점 3~1점 부여	순위별 가점 1 ~ 0.8점 부여

- (연중) 해상종합훈련(함정) 및 연안구조정(파출소) 운용술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해상종합훈련	정박 훈련시간 8H 확대, 지방청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시행
연안구조정 운용술	자체훈련(24H→32H) 및 경찰서 교육훈련계 훈련(3H→5H) 시간 확대

□ 훈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現 훈련체계 분석을 통한 훈련 법령·조직·인사·예산 고도화를 위한 연구
- 훈련 결과를 해양경찰 표준모델(아바타)과 연계 관리하는 평가인증제 연구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현장부서 팀워크 훈련 및 도상훈련 경진대회 계획수립(2월) / 연구용역 추진(3월)
2분기	❖ 팀워크 훈련 평가(4월) / (지방청별)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태세점검(6월)
3분기	❖ 도상훈련 경진대회 본선 및 평가(9월)
4분기	❖ (지방청별) 하반기 해상종합훈련(10월)
연중	❖ 연간 훈련계획 의거 연안구조정 운용술 훈련

정책	채용 환경 변화에 맞춘 적극적 채용제도 개선	교육훈련
	[과제목표] 제도 개선 ('22년) 일부 평가체계 개선 → ('23년) 채용업무 총괄적 개선	

□ 추진배경

- 전문분야 인력 특성을 반영한 신속한 선발 및 부서 배치 요청 증가
- 효율성·공정성을 높이는 선진화된 채용제도 개선 도모

□ 공정채용 및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공고부터 최종발표까지 채용기간 장기화로 우수 인재 중도 이탈 문제 개선
 - * '22년 제1차 채용 기간 약 7개월 소요 → 4개월로 단축 추진
- 적성검사 점수 폐지(참고자료로 활용)에 따라 면접점수(10→20점) 반영 비율 증가
 - * 각 단계별(집단·개별) 면접관 증가(2→3명)로 인·적성 검증 강화
- 시험 전형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위촉제도 확대(1/2 이상)

□ 채용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집행 중심 개선

- 체계화된 채용업무를 위한「채용절차 표준매뉴얼」제작 및 지도·감독 강화
 - * (매뉴얼 구성) ① 단계별 주요사항 ② 점검항목 ③ 각종 서식 ④ 채용오류 사례
- 다방면·다각도로 채용 홍보 전략화 및 사각지대 발굴로 핀셋 홍보 추진

□ 미래 우수인재 채용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유관기관 및 외국기관과 비교분석으로 신임간부 양성 3축 설계
 - * ① 아카데미형<경찰대학 유사> ② 스콜라형<해경학과 학사> ③ 공채형<간후시험>
- 순환식 체력종목 개발 및 함정요원 승선경력 추가, 국제법 과목 도입 검토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연간 채용계획 수립(1월) 및 제1차 채용계획 수립(3월), 채용제도 연구용역(1~11월)
2분기	❖ 제1차 채용 필기시험 출제장 외부위원 위촉(4월)
3분기	❖ 제2차 채용계획 수립(8월) 및 제2차 채용 필기시험 출제장 외부위원 위촉(9월)
4분기	❖ 「채용절차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및 지방청 채용업무 지도·감독(11월)

정책	다양한 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교육훈련
	[과제목표] 민간위탁프로그램 확대 ('22년) 5개 지방청 → ('23년) 5개 지방청+5개 경찰서	

□ 추진배경

- **全 직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 추진**
- **미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재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신임간부 USCG 교육시설 및 재직자 MDA과정 확대

- USCG에 우리청 신임간부 위탁교육 확정 등 미래를 선도할 간부 양성
 - 간부후보생(20명) 대상 USCG '리더십과정'(1주) 및 현장 실습(1주)
 - * 신임간부 어학 능력향상을 위해 **매일 조석시간 영어 교육, 원어민 강의 등**
- 美 관계기관에 MDA교육 파견 확대 추진을 통해 국정과제 실현
 - * ('22년) USCG 2명 → ('23년) USCG·Volpe(美 교통부 산하기관) 4명

□ 수요자 중심의 교육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 활동 지원

- **개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추진으로 다양한 학습 선택권 제공
 - * ('22년) 수영(지방청 주관) → ('23년) 수영, PT, 필라테스 등(본청·지방청+일부서 시범운영)
- 기존 **e-러닝콘텐츠** 개선을 통해 질 높고 시의적절한 학습자료 확보
 - * ('22년) 307과목 운영 → ('23년) 기존과목 재검토 및 **최소 20과목 신규 증편**
- 교육 분야와 인공지능 결합시대에 맞춰 **인재개발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개인별 학습 활동 지원
 -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5분내 핵심강의) 확보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실시

□ 교육과정 재설계를 통한 생애주기별(신임-재직자-은퇴준비) 교육체계 확립

- (공통) **全 교육과정에 미래 환경 변화를 대비한 신기술 이해 교육** 및 **인성·동료애 함양·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등 기본소양 강화**
 - * **4차 산업기술·MDA·R&D 등 최신 정책 반영**
- (신임) **현업적응도 제고를 위한 신임과정 교육기간 확대(43→52주) 등 개선**
 - * **경과직별을 고려한 분야별 특성화교육 확대 및 관서실습 전·후반 분리시행 등 내실화**

- (재직자) 전문교육과정을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설계, 전문성 내실화
 - * 해양과학수사(기초/심화), 갈등관리와 적극행정(기초/심화), 상황요원 실무(기초/심화) 등
- (은퇴자) 재직자 대상 은퇴 후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등 위탁교육 운영
 - * 요양보호사자격증, 경비지도사자격증, 특수경호사(PSG), 사설탐정과정 취득과정, 요리사 과정 등 은퇴예정자 미래설계 관련 교육을 위탁교육과정으로 운영

□ 지방청 역할 강화를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 현업 이해도 함양을 위해 일반직 신입교육(기본교육) 지방청별 운영
 - * ('22년) 미운영 또는 보직 후 교육 → ('23년) 보직 전 지방청별 기본교육 제도화
- 타부처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발령권한을 지방청에 위임하여 역할 강화 및 지역별 위탁교육 발굴·활성화

□ 官-學 협력으로 채용 및 교육 정책 선순환 구조 설정

- 해양경찰 관련 대학 총장·학과(부)장 협의회 활성화 및 해수산계 고교 협의회 구축 등으로 채용·교육 정책 공조 강화
 - * (대학·고교) 해양경찰 학문적 발전과 인재 양성 정책 제언 (해경) 교수·교직에 참여

□ 교육훈련 정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계약학과 적정성 연구, 교수요원 전문직위제 도입 등 교육훈련 고도화
- 해양경찰 표준모델 구성요소인 직무능력단위를 교육훈련과정과 연계 도출하여 표준모델(아바타)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게 설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체력증진 민간 교육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운영(3월), 국외훈련 운영계획(3월) ❖ USCG 교육을 위한 ECL시험(3월), 지방교육훈련센터 운영계획 수립(1월) ❖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입찰 진행, 각종 통계 및 자료 작성(1월)
2분기	❖ 사이버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4월), 교육정책협의회(5월) ❖ 은퇴예정자 위탁교육 운영 계획 수립(4월), USCG 리더십과정(6월)
3분기	❖ 美 유관기관 MDA 교육 파견(7월) ❖ 간부후보생 어학교육(7월), 신입교육기간 확대 계획 수립(7월)
4분기	❖ 간후보 USCG 위탁교육과정 운영(10월), 사이버콘텐츠 제작(10월), 교육정책협의회(11월) ❖ 국외훈련 및 직무파견 성과보고회 개최(10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11월)
연중	❖ 신입 및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위탁교육 운영, 인재개발플랫폼 운영

역점	해양 공간정보활용 체계 구축	빅데이터
	[과제목표] GIS 기반 의사결정력 강화를 위한 공간주제도 구축 ('23년 신규) 2개분야↑	

□ 추진배경

- **(전략적 정보관리)** 구조활동 지원 등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시성이 필요한 해역·지형·시설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간정보 기반 의사결정력 강화 필요
- **(능동적 정보관리)** 기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의 이용 확산과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공유하는 현장맞춤형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확대 추진

□ 세부내용

- **(공간주제도 구축)** 총체적 데이터 현황파악과 활용이 어려운 수기관리 공간데이터의 디지털화 재구축을 통하여 활용성·정확도 개선
 - 지역·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주제를 선정*,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주제도 구축·공유 <관서별 2종 이상>
- * **대상** ①현장업무처리를 위해 중요하지만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소실되는 정보
 ②수기로 관리되어 체계적인 관리·활용이 어려운 정보 등
- **(공간빅데이터 기능확대)**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영상자료의 수집·저장·검색 확대 및 시스템화를 통한 현장영상자료관리체계 강화 추진
- * **예시** 대용량 드론영상 관리·활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부재
 ⇒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공간기반 드론영상 관리 확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2월) ❖ 빅데이터 플랫폼 공간주제도 작성 매뉴얼 제작(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주제도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교육 실시(4월, 소속기관) ❖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 수행(5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플랫폼 및 공간정보 업무활용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7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주제도 구축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표창 등) 부여(10월) ❖ 유관기관 데이터 서비스 연계 협의 및 대국민 개방(12월)

정책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역량 제고 및 체계화	빅데이터
	[과제목표] 데이터 교육 ('22년) 5개(교육원·온라인)→('23년) 12개(+7,위탁교육·공동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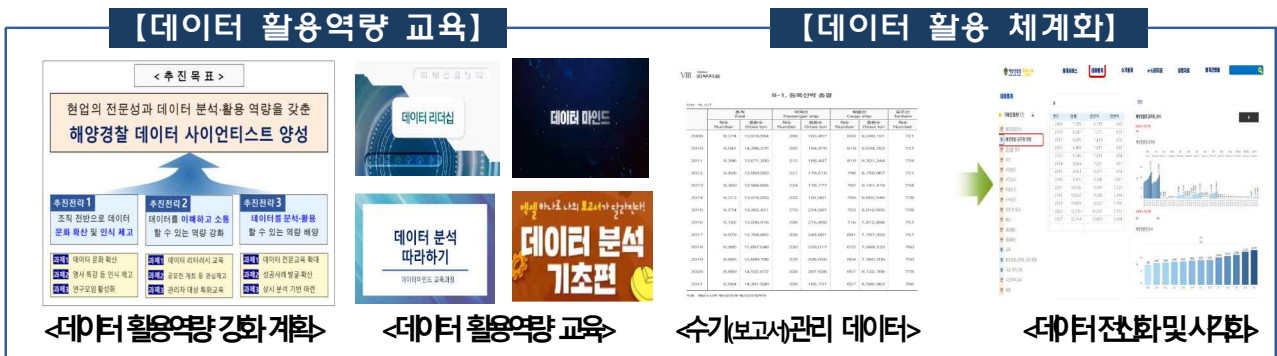
[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 추진배경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촉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확산 및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추진
- **(데이터 활용역량 제고)**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데이터 전문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조직 전반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계획 수립 필요**
 - * **[데이터리터러시]** :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유추하는 능력

□ 세부내용

-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강화)** 데이터 교육* 수료 인원 확대, 데이터 위탁 교육과정** 개설 및 통계 콘텐츠 공동활용(1개)을 통한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 * ①해양경찰교육원 30명, ②온라인교육 2,024명, ③오프라인교육 35명 수료('22.11월 기준)
 - ** (위탁교육) 데이터활용 역량교육(5개) 및 데이터기반업무능력 향상과정(1개) 개설 예정
- **(데이터 활용 체계화)** 데이터 활용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주요 수기 데이터를 전산화 및 시각화하여 데이터기반 정책평가 제도 지원 및 활용성 강화
 - * 해양 사건·사고에 관한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 구축**으로 시각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계획 수립(1월), 데이터 및 통계 신규위탁교육과정 협의(2월)
2분기	❖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홍보(4월), 디지털 상황판 설계(5월)
3분기	❖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시행(6월~9월), 디지털 상황판 구축(6월~9월)
4분기	❖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시행(10월~12월), 디지털 상황판 서비스 개시(12월)

경비국

역점	경비체계 개선 및 함정 운영역량 강화	경비
	[과제목표] 소형정 개선방안 마련 ('23년) 시범운영 10척	

□ 소형정 경비체계 개선

- 소형함정 근무여건(취사문제 등) 개선을 위해 경비·조직·예산·장비 등 관련 기능을 포함하여 「소형정 경비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
- 해역별 치안수요, 관할구역까지 출동거리 등 서별 연안경비환경을 분석, 소형함정 경비체계(교대주기, 경비방법 등) 조정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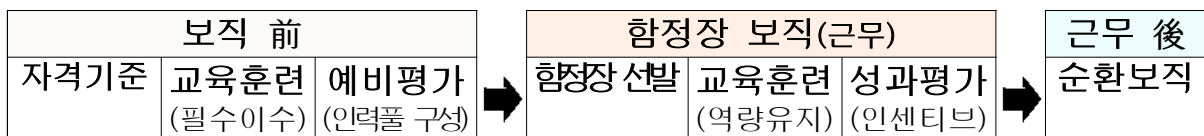
< 경비체계 개선방향 >

- ✓ 【교대주기】 서별 연안환경 여건을 고려, 교대주기 개선 모델을 마련
* (예시) 3교대(올-비-비), 4교대(주-야-비-휴) 등
- ✓ 【경비방법】 순찰형으로 운영(거점활용), 출동 중 총원근무(야간 휴게시간 부여)

- TF회의 및 해역별 간담회,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후 서별 시범운영 통해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함정장 지휘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정립

- 함정장 역량강화 TF를 구성, 사전교육과 자격기준부터 선발절차, 보직시 교육훈련 및 평가체계 등 함정장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 마련



- 예비평가를 통해 1차 검증된 인력풀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선발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 재차 검증하고, 함정장 보직 중 직무역량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 교육 및 직무역량평가* 체계 마련

* 정량평가(업무실적, 장비관리, 상황관리 등), 정성평가(리더십, 청렴도, 태도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소형정 개선 및 함정장 역량강화 TF 구성(2~3월)
2분기	❖ 간담회 및 현장의견 수렴(4월), 1차 시범운영(5~6월), 함정장 평가체계 마련(6월)
3분기	❖ 2차 시범운영(7~8월), 성과분석(9월)
4분기	❖ 소형정 경비체계 개편안 마련(12월), 함정장 예비평가 및 인력풀 구성(12월)

정책	고질적·관행화된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경비
	[과제목표] 불법조업률(나포건수 / 정밀검색건수) ('22년) 7.7% → ('23년) 6.7%	

[예산] '23년 예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장비 1,354백만원

□ 추진배경

- 서해 NLL 부근의 무허가 외국어선*과 협정선 집단침범 사례 등 우리해역 內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

* 서해NLL(日 평균) '20년(51척)→'21년(68척)→'22.10월(74척)

- 최근 봄대·와이어, 철망 등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기상악화시 우리해역을 침범하는 일명 '꾼'조업 외국어선 재출현(11.22. 서해특정해역)

□ 세부내용

- (선제적 대응) 위성영상 분석(월2회)으로 외국어선 主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유입경로를 파악, 경비세력을 선제적 배치로 불법조업 차단
- (엄정 대응) 성어기 경비세력 집중 투입(단속함정 증가배치·특별단속) 및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 불법조업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 추진
- (단속 전용 함정) 불법조업 외국어선 직접계류 가능(대규모 단속요원 등선) 및 강력한 소화 등 단속 장비를 무장하고 있는 전용함정 도입 추진
- (지방정부간 협력) 위성AIS를 활용한 공조단속*을 지방청과 중국 지방정부(단속기관)간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자정노력 촉구

* 위성AIS 사용법, 주중 외교채널을 통한 공조방법 등 공조단속 지침('22.11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불법외국어선 단속 대책(1월)
2분기	❖ 꽃게 성어기 대비 특별단속(4월)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4~6월)
3분기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8~9월), 해경-해수부 합동순찰(7~9월)
4분기	❖ 성어기 특별단속(10~11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의(11월)

정책	해양권익 보호 및 해양안보 역량 강화	경비
	[과제목표] 경계미획정 해역 관할권 강화율 ('22년) 16.7% → ('23년) 17.0%	

[예산] '23년 예산 원거리 감시추적 시스템 282백만원

□ 추진배경

- 독도·이어도 주변해역에 중국·일본 관공선이 지속출현 중이며, 경계미획정 해역內 일방적 해양조사*, 시설물 설치 등 공세적 활동 중
* 日 조사선 출현 '21.9월 2회 → '22.9월 3회, 中 조사선 출현 '21.9월 31회 → '22.9월 36회
-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드론·자율운항선박 등 신유형 해양테러 위협이 증가, 해양안보 대비대응 태세 확립 필요
* '22년 북 미사일·방사포 도발 : 40여회 100여발 / 11. 2. 속초 동방 해상 낙탄

□ 세부내용

- (위기대응태세 확립) 독도·이어도 우발사태 대비, 전담함정 배치 및 주기적 항공순찰(주1~2회)과 합동훈련(반기1회) 등 위기대응 태세 확립
- (독도전담 고속함정 도입) 日 순시선의 고속화(40노트 이상) 추세 등을 고려, 독도전담 중형급 고속함정 도입 및 사동항 전진기지 탄력운영
- (경계미획정 해역 관리 강화) 국·내외 위성 활용, 중점관리 해역 정밀탐색(월2회) 및 전략순찰 활동 강화(월6회), 해양조사 등 적극대응
- (통합방위 역량 및 협력 증진) 소속기관별 통합방위상황도 및 업무 수행 매뉴얼 작성 등 통합방위체계 정비 및 관계기관 협력 증대*
* 협조회의 및 상호방문 등(본청-합참·해작사, 지방청-함대사, 서-전대, 여단, R/S)
- (대테러 역량강화) 합동훈련 정례화 및 시나리오 고도화, 전문인력 위탁교육 확대 및 대테러 장비도입 계획 마련으로 테러대응 역량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상황도 작성지침 시달, 점검(2월), 비상대비 교육자료 작성(3월) ❖ 전략기동 계획 수립(1~2월),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계획, 장비도입 계획서 수립(1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업무 수행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작성(4월), 관계기관 협조회의(6월) ❖ PSI 합동훈련(5월) 및 해양 대테러 세미나, 해양테러 공동대응협의체 개최(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워크숍 실시(7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비통신망 세부운용지침 및 전개훈련(10월), 해양테러공동대응협의체(10월)

역점	VTSE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교통관제
	[과제목표] 교육훈련센터 구축 사업 완료 및 정상 운영 준비	

[예산] 공사비 31억(건축 9억, 장비 22억)

□ 추진 배경

- 교육훈련체계 확립 및 관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VTS 시뮬레이터 등 전문 교육장비를 갖춘 교육훈련센터 완공 예정('23.10末)

〈 VTS 교육훈련센터 구축 개요 〉

- ✓ (기간/예산/위치) '20.8~'23.10(3년) / 총 70억 / 해양경찰교육원 內
- ✓ (주요시설 등) 관제운영 시뮬레이터 등 설치(연면적 1,510[[456평], 지하1층·지상3층)



□ 주요 내용

- **(교육과정 마련)** 외부 위탁 중인 교육과정을 자체 시행하기 위해, 해당 교육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협의·자문 및 교육과정 마련
* '23년 센터 운영준비 ⇒ '24년 외부 위탁교육→자체교육 전환(순차적)
- **(운영인력 확보)** 전담 교수요원 배치 및 강사인력을 확보(~상반기)하고, 위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벤치마킹 및 교수법 교육 등
* '23년 수시 직제를 통한 전담인력 요구 및 교육원 내 학과 신설 추진
- **(중장기)** ① 선박운항자, 유관기관 등 민간 대상 VTS 전문교육 추진, ② 관제사·시설관리자 전문교육 지속 개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분기	❖ VTS 교육기관 간 협의(1월~3월) 및 전담 교수인력 확보(1월~6월) ❖ VTS 교육훈련센터 교육과정 마련(1월~10월)
3분기	❖ (수시 직제) VTS 교육훈련센터 운영인력 요구(9월)
4분기	❖ VTS 교육훈련센터 구축 사업 완료(1월~10월)

역점	목포·군산 광역 VTS 운영개시 및 전국확대 구축	교통관제
	[과제목표] 광역VTS 확대 구축 ('22년) 2개소 → ('23년) 3개소	

[예산] 제주 광역VTS 구축 2,704백만원, 동해 광역VTS 구축 3,22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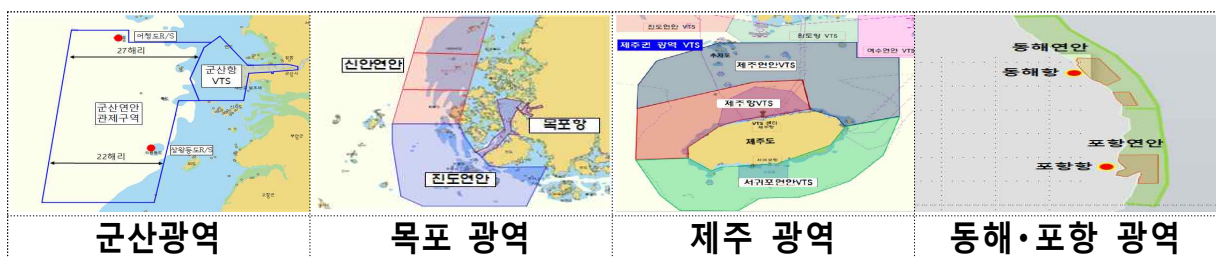
[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추진 배경

- **新개념** 교통관제 체계 「^{국정과제}광역 VTS」를 본격적으로 운영, 안정적인 연착륙을 통해 국민체감 정책효과 거양 및 제주·동해 확대 추진
- * 항만에서 연안으로 이어지는 광역관제망 구축으로 연속적 교통관리체계 마련

□ 주요 내용

- **(목포·군산권)** 인력 배치·교육 및 시범운영,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여 차질없는 개국준비를 통해 광역 VTS 운영개시('23.5~)
 - * 광역VTS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
- **(제주권)** 시스템 설치(~'23.9) 및 「신설추진단」 조기 구성을 통해 인접센터 및 관련기능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운영준비 추진
 - * 목포·완도·여수 등 인접 관제구역과 연계하여 선박통항관리 연속성 확보
- **(동해·포항권)** 속초에서 포항까지 동해권 **수** 연안(약 280km)을 연결하는 레이더(5개소) 및 광역 관제센터(2개소) 구축 추진
 - * 센터구축 및 시스템 설치('23~'25) → 시범운영 및 운영개시('26. 上)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군산 광역VTS 정상운영 (5월) ❖ '24년 소요정원(제주·동해·포항 광역VTS 인력) 요구(5월) ❖ 동해 광역VTS 구축 공사 착공(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광역VTS 시스템 설치 완료 및 신설추진단 운영 (9월)

정책	『해상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파트너십 강화	교통관제
	[과제목표] 해상교통기관관 정보공유 강화로 해양사고 감소	

□ 추진 배경

- 광역 VTS 구축 등 정책이행력 제고를 위해 ‘해상교통’ 관련기관간 긴밀한 공조는 필수적, 협업을 통한 해상교통안전 강화 필요

* 해경(VTS), 해수부(e-Nav), 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센터), 수협(어선안전조업국)

□ 주요 내용

- (‘해상교통’ 협의체 구성) 상선(VTS), 어선(수협), 여객선(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종·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교통기관 정보공유 및 업무활용 추진(MOU)

* 효율적 사고예방에는 전문성 있는 기관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해상교통’ 기관별 ‘23년 핵심업무 현황】

해 경	Ⅰ ① 빅데이터·AI 활용 권역별 광역VTS 구축, ② 클라우드 VTS 개발 등
교통공단	Ⅰ ①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7억), ② 본부 상황실 24시간 운영
수 협	Ⅰ ① VHF-DSC 위치정보를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협업 강화) 해양교통 관련 「정책수립 → 집행 · 조정 → 평가 · 환류」 전 단계에 걸쳐 협업 강화 및 정보공유 방안 마련

- (시너지 제고) 해역별 VTS와 교통공단 · 수협간 교류 강화를 통해 상호 이해도 증진 및 관제업무 활용으로 현장대응력 제고

* VTS(20센터), KOMSA(12센터), 수협(20센터), e-Nav(8센터)간 정보공유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분기	❖ 관계기관간 협의체 구성 및 양해각서 체결 추진 (5월)
4분기	❖ 협업 성과점검 및 미비점 개선 계획 수립 (11월)

정책	관제 데이터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VTS 개발(R&D)	교통관제
	[과제목표] 클라우드VTS 시범센터 구축 및 기술검증	

[예산] 75억('23년 34억) / [연구기관] (주)지씨 / [연구기간] '21~'23년(3년)

□ 추진 배경

- 다기종 VTS 시스템간 관제정보 연계·통합 및 상황실·함정 등 유관 기능과 정보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VTS 시범운영 및 검증 추진

□ 주요 내용

- (시범센터) 부산항·인천항VTS를 연계한 시범장비 현장 설치·운영



- (기술검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리빙랩 자문단*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발기술 검증

* 리빙랩 자문단: 클라우드VTS관련 전문가, 현장근무자 등 10인 구성(23.2~23.12)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클라우드 VTS 착수보고(2월)
2분기	❖ 클라우드 통신 강화를 위한 표준기술 고도화(6월)
3분기	❖ 클라우드 VTS 시범센터 구축 및 운영(7월~) ❖ 관제데이터 수집·처리·분석·지원기술 검증(7월) ❖ 레이더 추적 및 물표처리기술 검증(7월)
4분기	❖ 클라우드 VTS 운영방안 및 로드맵 도출(11월) ❖ 클라우드 VTS 연구개발 완료보고(12월)

역점	ICT기반 효율적 상황대응체계 구축	종합상황
	[과제목표] 체계적·과학적 상황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정과제 (관련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연안안전 강화, 연안 안전망 확보)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신속한 대응 및 현장정보 확보를 위한 「스마트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23년)
 - **(운용목적)** 신고자에게 URL 문자 발송, 신고자 핸드폰을 통한 영상 획득 및 GPS 위치정보 직접 획득으로 신속·정확한 상황대응 가능
- 보안상황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보안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23년)
 - **(운용목적)** 보안상황 발생 시 상황실 운용요원의 상황대응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대외기관에 발송된 상황보고서의 보안강화(추적·관리) 가능

□ 체계화된 국가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R&D 사업)

- 「AI기반 상황접수 및 초동조치 지원체계」 구축(우리청 R&D 사업, ~'27년)
 - **(구축목적)** 상황접수 전문인력과 AI기반 기술융합(AI 초동대응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상황지원체계 구축으로 골든타임 내 명확한 상황대응 가능
- 「해양·항공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데이터 수집·분석 공유 시스템」 구축(다부처 R&D 사업, ~'29년)
 - **(구축목적)** 경비함정 등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후 관측 데이터 분석·예측 → 정확한 해양기상 예보를 통해 해양재난 선제적 대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3분기	❖ 「보안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9월) 및 시범운용(10월)
4분기	❖ 「스마트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10월) 및 시범운용(11월~12월)
계 속	❖ 국가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R&D 사업) 추진을 위한 중기예산 확보

정책	명확한 상황관리를 위한 유능한 상황전문가 양성	종합상황
	[과제목표] 신속·정확한 상황처리를 위한 인적·체계적 능력 향상 프로세스 구축	

□ 인적(Human) 상황관리 능력 향상

- (전입자 교육·평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기인사 후 1개월 이내 ① 전입자 교육, ②상황훈련, ③매뉴얼·지침 필기 및 시스템 실기평가 실시
 - * 각 직수 팀별 Teamwork 향상을 위해 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주·야 1회 이상 훈련 실시
- (단계별 교육) ①사례위주 일상교육(자체), ②초급·중급 전문교육(교육원), ③행안부 파견교육, ④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한 상황관리 능력 향상
 - * 상황요원 개인별 근무연수, 교육이수 여부 등을 확인, 인적 D/B 관리 예정
- (특성화 상황훈련) 지방청별 치안특성을 반영하여 본청은 6대 해양사고 중심, 지방청은 해양안보·해양주권·치안분야 등의 특성화 훈련 시행
 - * 상황훈련 시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PS-LTE) 운용숙달 훈련 병행
- (평가 및 포상) ①정기직무능력평가, ②상황처리 우수, ③지도·점검우수, ④상황훈련우수 근무자에 대해 표창, 승급, 특진, 성과급 등 우선순위 부여

□ 체계(System)적 상황관리 능력 향상

- (상황분석 및 결과 환류) 상황처리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개선사항을 도출, 본청 주관 화상회의(월 2회) 및 관련 매뉴얼·지침 최신화 개정
 - * 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신고접수 및 상황처리 관련 지침서 등 개정
- (ONE-TOUCH Book 구축) 28개 유형 사고사례집 및 핵심조치사항 대응카드 등 관련 매뉴얼·지침에 대해 전자북 형태로 구축·운영
 - * 앱 형태의 전자문서로 구축, 노트북·탭에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전입자 교육·평가(3월), 긴급신고전화 가이드북 개정(3월)
2분기	❖ 상반기 지도·점검(6월), 매뉴얼·지침서 등 ONE-TOUCH book 구축(6월)
3분기	❖ 정기직무 능력평가(9월), 해양상황처리 가이드북 개정(7월)
4분기	❖ 상황처리 우수사례 선발·포상(10월), 하반기 지도·점검(11월)
매월	❖ 상황분석 화상회의(월 2회), 특성화 훈련(매월 1·3주 본청 / 2·4주 지방청)

정책	해양경찰청 맞춤형 기상정보생산 기반 마련	종합상황
	[과제목표] 효율적 해양기상 업무 수행을 위한 기상 데이터 재가공 및 인프라 확보	

□ 추진배경

- (기상전문가 배치) 해양사고 예방 및 효율적 상황대응을 위한 기상 분석·활용 등을 위해 기상전문가 채용* 후 종합상황실 실무 배치
 - * '22년까지 3명 채용 완료, 향후 3명 추가 채용 후 지방청 종합상황실 배치 예정
- (업무 기반 미비) 맞춤형 해양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수치모델·관측데이터 등 원활한 해양예보업무를 위한 인프라 부재

□ 추진계획

- (해양위험지수 개발) 해양사고와 기상변수들 간 회귀분석*을 통해 사고 위험 예측 후 종합상황실에서 사전 대비대응을 지시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 해양사고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수(풍랑·시정·조차 등)를 분석하여 사고 위험성 예측판단
- (예보 세분화) 40여개 ^{앞바다·안쪽면바다·바깥면바다 등} 기상청 해양예보구역의 ^{오전·오후 기준} 12시간 단위 예보를 65개 ^{연안·내해·광역구역 및 특별경비수역} 경비구역의 ^{새벽·오전·오후·야간 기준} 6시간 단위 예보로 세분화하여 맞춤형정보* 생산
 - * 수색구조를 위한 유속예보, 항공경비임무를 위한 해상 공역예보 등
- (인프라 확보) 해양기상정보를 직접 생산 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 파랑조류항공기상 예측 수치모델* 도입
 - * 기상청·해양조사원·공군기상단 등 슈퍼컴퓨터 및 수치예보모델 운용 기관

□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위험지수 개발을 위한 과거('19년~) 해양기상 메타데이터* 관리(연중) * 빅데이터 및 통계분석에 용이하도록 데이터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의 하는 과정
2분기	❖ 기상청 실무협의(4월) 및 파랑예측모델(WaveWatch-III) 도입(5월) ❖ 해양사고위험지수 개발(6월)
3분기	❖ 해양사고위험지수 시범운용(7월~) ❖ 해양조사원 실무 협의(8월) 및 유속예측모델(YES-3K) 도입(9월)
4분기	❖ 공군기상단 실무 협의(10월) 및 항공기상예측모델(KAF-WRF) 도입(12월) ❖ 해양사고위험지수 검증(12월)

정책	상황관리 조직 및 근무체계 현실화	종합상황
	[과제목표] 상황관리 조직 체계화 및 소속기관 4교대 근무로 업무 효율화 달성	

□ 추진배경

- (넓은 업무범위) 해양사고 뿐만 아니라 안보·치안·해양오염 등 다양한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군·경찰·소방 등)과 업무협조 필요
 - * 구조 골든타임 확보,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직급상향 등 강력한 상황지휘력 확보 필요
- (피로도 심화) 해양경찰의 상황대응 환경은 광활한 해역에서 발생, 신고 접수부터 상황 종료까지 장시간의 복합적 상황판단 필요
 - * 3교대 근무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 부족 및 피로도 누적으로 전문성 저하 발생

□ 추진계획

- (본청, 조직 개편·직급 상향) 차창 직속 종합상황실 및 상황실장 직급 상향(→경무관)을 통해 넓은 업무범위의 다양한 사고에 즉각 대응
 - * 일사분란한 상황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상황책임자(경무관급)과 신속 협업 가능
- (소속관서, 상황관리자 직급 상향) 지방청·署 상황실은 초동조치의 핵심 역할 수행, 상황관리자의 현장세력 등 지휘력 강화를 위해 직급상향추진
 - * 지방청 상황실장(경정→총경), 지방청 상황계장(경감→경정), 료 상황실장(경위→경감)
- (소속관서, 4교대 근무 추진) 상황요원의 피로도 해소,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향상, 교육훈련 시간 확보 등으로 상황요원 상황대응 역량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조직개편 및 소요정원(안) 조직계 제출 (3월)
계속	❖ 소요정원(안) 반영을 위한 행안부 대응

수사국

역점	원활한 수사활동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수사기획
	[과제목표] ('23년) 인권보호를 위한 他부처 법령 5건 개정	

□ 필요성

- (수사활동의 법률적 미비) 법률 상 수사활동의 근거규정이 없거나 부족하여 해양치안 공백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법령 개정 필요
 - *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군사법원법, 수사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규칙 등
- (법률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 국정과제(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관련, 해양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보호 등을 위해 법령 개정
 - *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주요 내용

- (수사활동 근거 마련)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활동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해양경찰 범죄수사 실정에 부합하도록 법적 기준 등 정비

①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 국제항해여객선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보안사건과 연관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이 보안검색 가능하도록 규정 * (1차) 항만 보안검색(경찰) / (2차) 여객선 보안검색(해경) → 이중 보안체계 구축
② 「군사법원법」 : 해양 관련 군 사건에 대한 이첩 기관을 해양경찰로 명시 * (현 행) 하위법령(대령)에 "해양 관련 군 사건"을 경찰청 등에서 해양경찰에 재 이첩
③ 「수사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수사 절차 상 작성하지 않는 서류에 대한 의무적 송부 규정 삭제, 압류 규정 정비

- (피해자 인권보호) 현행 법률 상 해양범죄 피해자 등 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실질적인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 피해자 보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 기관에 해양경찰 추가 * (現 위원회) 법무부 주관 검찰, 경찰, 행안부 등 9개 기관 차관급 위원으로 구성
⑤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전담 경찰관(수사관) 및 외부전문가 지정에 해양경찰 추가

□ 추진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해수부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 개정 협의(~3월)
3분기	❖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군사법원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 개정(~9월)
4분기	❖ 수사활동 및 인권보호 규정 등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한 교육실시 (~10월)

역점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관련 차세대 KICS 구축	수사기획
	[과제목표] 차세대 KICS 구축 ('23년) 시스템 구축·테스트 → ('24년) 안정화·오픈	

< 형사절차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대비한 전담 T/F 신설 >

□ 필요성

-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수천 장 종이 기반 형사사건 서류처리로 관리 부담 및 비효율 발생,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마련 필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4. 10월 시행)〉

-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 전자적 기록 송부
- 형사사법기관은 전자문서 작성 원칙, 사건관계인은 선택적으로 전자문서 제출
-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적으로 기록 송부, 사건관계인에게 전자적 송달·통지

- (대국민 형사사법 혁신)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전자영장, 원거리 참고인 조사를 위한 화상조사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형사사법체계 전환 준비 필요

* 차세대 KICS 구축 : 해경·법무부·검찰·경찰 4개 기관 공동사업(1,505억 / '21~'24)

□ 주요 내용

- (형사사법 전자화 추진단 신설) 형사절차 변화에 따른 관련 법 제·개정, 신규 업무절차 정립, 예산확보 등 전담인력의 면밀한 대응 - (운영방안) 총경(단장) 등 13명 구성 / '23.2월 ~ 별명 시



* 타 기관은 형사사법 전자화 업무를 위해 20여명(법제 검토, KICS개발) 규모 T/F 운영중

□ 추진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사국 소속 형사사법 전자화 추진단 신설 (2월)

< 차세대 KICS 구축으로 해양수사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진 >

□ 필요성

- **(육상 위주 기존 KICS)** 그간 경찰청 KICS 사용으로 단순 항적조회·선박정보 조차 이용불가, 해양수사 특화 기능 개발 필요
- **(과중한 수사행정)** 타기관 수사관련 자료 조회, 유치인 관리 등 업무 시 종이서류 생산 및 관리로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 간소화 필요

□ 주요 내용

- **(해양수사 특화 분야)** 해양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능 구현으로 첨단 해양수사 체계 마련

- ❶ **(불법 외국어선)** 해경↔검찰간 실시간 사법처리체계(위반조치, 담보금 등) 구현
- ❷ **(불법 어획물 방류명령)** 방류명령 절차·서식 전산화 및 모바일 KICS를 이용한 현장 방류 증거사진 채증, 전산 유통으로 업무 효율 증대
- ❸ **(함정·파출소 사건접수)** 수사·KICS 경험이 부족한 현장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 다양한 사례(예시) 제공 및 입력 값 최소화 등 신규기능 개발

- **(수사행정 간소화 분야)** 현장 수사관 업무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 시대 걸맞은 행정관리체계 구축

- ❶ **(각종 정보연계)** 각종 통지·의뢰 시 온나라 문서발신 연계, 선박·항적·검사기록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시스템에 산재한 해양정보 통합조회로 수사역량 강화
- ❷ **(업무 전산화)** 과학수사지원, 유치인 관리, 기록물관리 등 엑셀·종이로 이뤄지는 업무 별도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 대폭 감소

□ 추진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1,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KICS 기본설계(프로세스, 데이터 등) - 현장 테스트 시작 ❖ 해양정보 공동활용 관련 해수부 등 관계부처 업무협의
3,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KICS 상세설계 및 개발(현장 테스트 및 의견 반영)

정책	현장수사력 강화를 위한 수사기반 마련	수사기획
	[과제목표] ① 직급상향 ('23년) 51개(경정 9, 경감 42) → ('24년) 15개(경정 5, 경감 10) ② 초과근무 현실화 지방청·경찰서 수사관 초과근무수당 상향	

□ 수사지휘 및 정책·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수사관리자 직급 상향

- **(현장 부서)** 일선 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통솔 강화, 검찰 등 관련 기관 대응 등을 위해 경찰서 수사과장·계장(54개) 직급 상향
 - * ㄱ과 장 2개(경정←경감) : 완도·울진서 수사과장
 - ㄴ계 장 52개(경감←경위) : 경찰서 수사·형사·형사2계장 중 경위 직급
- **(관리 부서)** 현장 수사에 대한 지휘권 확립, 수사정책 고도화, 지방청 수사부서 역할 강화를 위해 본청·지방청 계장(12개) 직급 상향
 - * ㄱ본 청 6개(경정←경감) : 수사국 계장 중 경감 직급
 - ㄴ지방청 6개(경정←경감) : 5개 지방청 광역수사대장, 제주청 수사계장
- **(점진적 확보)** 안정적인 소요정원 대응을 위해 2년간 직급 상향
 - * '23년(1단계) : 전체 66개 중 77%인 51개(경정 9, 경감 42) 상향 요구

□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 받는 수사부서 근무여건 조성

- **(보상체계 미흡)**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부담, 야간·공휴일에 잦은 범죄현장 출동 등 과중한 수사업무에 비해 보상은 부족한 실정
- 범죄수사 중 긴급한 체포·구속 등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수사(현안)업무 처리 시에는 초과근무수당 확대(총량제 예외) 지급

< 범죄수사 초과근무수당 확대(안) >

- (사 유)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체포·구속, 압수수색, 영장집행, 사건관계인 긴급 조사, 마약류사범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및 현장 증거수집 등
- (절 차)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초과근무명령 발령(日 8h)
- (대 상) 지방청 광역수사대·마약수사대 / 경찰서 수사계·조사계, 형사계장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의견수렴 및 협의(~2월) / 소요정원 내부 대응(~3월)
2/3분기	❖ 소요정원 행안부(~7월), 기재부(~9월) 대응
4분기	❖ 소요정원 반영(12월)

정책	수사인력 효율적 관리로 수사 질적 향상	수사기획
	[과제목표] 수사인력풀 안정화 ('22년) 경과선발/해제 확대 → ('23년) 경과 안정화	

□ 단계별 수사인력 관리시스템 운용으로 업무적 효율성 증진

- **(필요성)** 해양 수사기관으로 책임수사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풀 분석·확보 및 평가·관리 등 수사경찰의 효율화 운영 필요
- **(단계별 관리)** 생애주기형 교육을 도입하여 안정화 단계 중으로, 계급, 경력(업무/교육), 직책 등 보다 세부적인 그룹핑(grouping) 관리
 - 개인별 자격체계 도입으로 수사관 자체 역량 향상을 유도하고 자격에 맞추어 수준별 교육, 사건 배당 및 적정부서 배치 고려

* **예비수사관(수사전담요원)** ▶ **일반수사관** ▶ **전임수사관** ▶ **책임수사관** ▶ **전문수사관**
 ↳ 수사부서 진입 전 ↳ 3년 미만 ↳ 3년이상 ↳ 7년이상 ↳ 별도선발

□ 수사경과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수사인력 관리 전자화

- **(경과 활성화)** 수사경과 비선호 관련 현장 실태점검으로 원인분석 및 관서별 홍보·워크숍으로 지속적인 경과선호 문화 정착
 - * 타기능(경비·수색)에 비해 사건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수사 성과 발표회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선입견·오해 불식(현장접수 병행)
- **(인센티브)** 수사경찰에 대한 자부심 제고 및 일한 만큼 인정(보상) 받는 인식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인센티브 강화 방안 강구
- **(전자화)** 수사경과/해제, 인력선발/관리·평가 등 전 분야의 시스템 (D/B)화로 객관·공정성 및 업무효율화로 스마트 수사 환경 구축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전국 수사인력의 종합 분석, 수사 인력 현장 실태점검
2-3분기	❖ 수사인력 단계별 분류 및 자격 부여(수사전담요원, 경과, 전문수사관 선발)
3-4분기	❖ 홍보영상 제작, 지방청별 홍보 및 워크숍 등 수사경과 활성화
상시/매월	❖ 수사/인력 D/B화 관리(KICS시스템 연동), 경과/해제 상시접수

역점	수사청렴도 향상 및 공정·투명한 수사문화 조성	수사심사
	[과제목표] ('22년) 신규 → ('23년) 외부청렴도 3등급 이상, 수사관 부정·부패비위 Zero化	

□ 필요성

- 외부청렴도 평가 점수 하락 및 사건관계인-수사경찰간 청탁·유착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도의 자체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주요 내용

- **(수사청렴도 향상)** ❶ '공정한' 조직 개선, ❷ '책임있는' 인적 개선, ❸ '투명한' 수사시스템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입체적 추진으로 수사청렴성 확보

< 분야별 세부 추진업무 항목 >

■ '공정한' 조직개선(Organization Improve)

- ① 수사청렴 T/F 활성화 ② 타기관 정보공유 체계 구축 ③ 수사인권관 확충 ④ 법(法)과 원칙을 준수한 수사경찰 구제방안 마련

■ '책임 있는' 인적개선(Human Improve)

- ① 수사경찰 인식전환 및 예절의식 함양 ② 수사간부 청렴도 및 민원서비스 평가 관심도 제고 ③ 반부패·청렴 교육 활성화 ④ 현장 단속경찰관 이미지 개선

■ '투명한' 시스템 개선(System Improve)

- ① 유착 우려사건 수사심사 강화 ② 부정·부패 내부신고 활성화 ③ 외부통제(위원회) 강화 ④ 수사분야 접촉고객 집중 관리로 수사경찰 이미지 쇄신

- **(공정·투명한 수사문화 조성)** ❶ 사건관계인 사적접촉, ❷ 정(情)의 동료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수사 공정성 저해 요소 및 부패 고리를 원천 차단

< 분야별 세부 추진업무 항목 >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집중 추진업무

- ①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 등 사건관계인 사전접촉 원천 차단(외부)
② 동료 간 사건문의 원천 차단(내부)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중 추진업무

- ①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수사인권관 운영 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② 유착우려 사건 등 수사심사 강화

□ 추진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사청렴 T/F(2월), 교육·홍보(3월), 접촉고객 집중 관리(계속), 수사심사 강화(계속)
2분기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4월), 교육·홍보(6월), 행정규칙 제·개정(4월), 수사심사 강화(계속)
3분기	❖ 수사청렴 T/F(7월), 교육·홍보(9월), 접촉고객 집중 관리(계속), 수사심사 강화(계속)
4분기	❖ 수사인권관 확충(중·장기, 조직 등 대응), 교육·홍보(12월), 수사심사 강화(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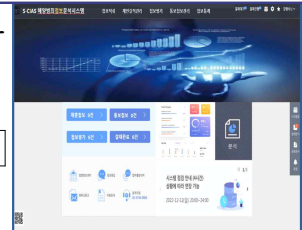
정책	차세대 해양범죄정보시스템 구축	수사심사
	[과제목표] 고가치 첩보수집 ('21년) 48건→('23년) 283건 약 6배 ↑ 증가	

□ 차세대 해양범죄정보 시스템 구축

- (주요변화) ① 수사첩보 행정규칙·실무지침에 따른 시스템 자동 통제, ② 범죄정보 DB 구축을 통한 다^多분석 활용, ③ 첩보배당-사건관리 연속성 확보, ④ KICS 연계로 불필요 업무 간소화 등 관리 구축 등
* (빅데이터) 범죄첩보 증가 및 보안유지에 따른 빅데이터를 관리할 DB 구축 시급
- (원스톱 처리) 범죄정보 전 유통과정을 원스톱(ONE-STOP)처리 가능한 복합기능 솔루션* 추진하여 데이터처리관리자의 편의성 제공 등
* (복합기능 솔루션) 첩보 수집·작성·저장·전송·평가·제공·처리·폐기·활용

■ (시스템 연계) 수사자료의 원활한 관리, 유통 및 활용을 위해 KICS 내부 업무시스템에 연계 추진 진행 중

■ (시스템 구성) 첩보작성, 첩보평가, 첩보통계, 개인실적 관리, 통보첩보관리 등 대기능별로 세부기능 재분류



- (주요기능) ① 나의첩보목록, ② 첩보작성, ③ 첩보상세조회, ④ 첩보평가, ⑤ 첩보 보고서 목록, ⑥ 통보첩보보고서 목록, ⑦ 첩보 발송처리, ⑧ 첩보 수신처리, ⑨ 통보첩보 검색, ⑩ 첩보통계, ⑪ 마일리지, ⑫ 권한관리 등 **12개 항목 개설**

■ (그 외) 이송·수정·통계·사건연계 등 각 부서별 범죄정보 데이터관리자의 원활한 처리 과정을 위해 편리하고 쉬운 편의 기능으로 개편 반영예정

□ 지속적 환류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행정규칙 개정

- (규칙개정) 「차세대 해양범죄정보시스템」 오픈 전까지 지속적으로 오류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수사첩보 행정규칙」 개정 및 시스템 개선
* (환류 방안) 현장 첩보 작성이 가능한 “모바일 첩보”를 이용, 의견청취 및 피드백 실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차세대해양범죄정보 시스템 S/W 개발자와 디자인 초안 및 주요기능 등 협업
매월	❖ 해양범죄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기회의(月 2-3회)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수사인권 업무 추진	수사심사
	[과제목표] 수사민원 서비스 만족도 ('22년) 91.7점(10월)→ ('23년) 92점 이상	

□ 수사경찰 청렴·만족도 업무 안정화로 국민 신뢰 강화

- ① '공정한' 조직 개선, ② '책임있는' 인적 개선, ③ '투명한' 수사시스템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계속 추진으로 수사청렴 업무 안정화

□ '공정하고 책임지는 수사를 통한' 투명한 해양경찰 수사문화 조성

- ① 사건관계인 사적접촉, ② '정(情)'의 동료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수사 공정성 저해 요소 및 부패 고리 원천 차단을 위한 인권활동, 평가업무에 집중

□ 국민과 협력·소통 중심의 수사인권 정책 추진

- (전문가 소통)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인권 위원회 및 유관기관들과의 소통 정례화*(연 2회 이상)를 통한 정책마련
* '23년의 경우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해양경찰 인권수사 문화를 주제로 하는 경찰·법조계·학계·종교계 등 인권전문가 대상 세미나 추진

- (국민 소통) “국민제안”,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제안하기”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문가 외 많은 국민의 모든 의견을 반영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채널 확보

□ 업무분석을 통한 활동방향 재정립 및 조직(인력) 정비 추진

- (활동방향 재정립) 예방적 수사인권 활동 강화(분기 1회↑) 및 업무 분석을 통한 '수사인권계(관)' 명칭* 사용 재검토 등 업무방향 재정립
※ 모호하고 폭넓은 인권업무 범위를 수사감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
- (기타 중·장기 목표) 분야별 전문적인 수사인권 관련 업무 추진·운영이 가능하도록 담당 인력 확보 및 “계”단위 직제 신설* 추진
* 피해자보호·지원업무 담당자 및 지방청 수사과 내 수사인권계 신설(경감급)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반기	❖ 전문가 소통(3월, 10월) 및 대외협력 강화·정보 공유(6월, 11월)
분기	❖ 활동전환(지도·점검 등 예방기능 중심으로 활동 전환) (3월, 6월, 9월, 11월)
매월	❖ 국민소통(모니터링) 강화, 청렴도 향상업무, 청렴·부패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정책	심사제도 효율화를 통한 수사완결성 확보	수사심사
	[과제목표] 검찰 보완수사요구율 ('22년) 5.2% → ('23년) 5% 미만	

□ 수사심사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효율화 전략 추진

- '21. 1.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심사제도 시행, '22. 2. 일선 심사역량 강화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청 중심 이중심사체계 구축

*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권한 확대에 따라 책임수사를 위한 심사제도 신설

- 그 간 심사제도는 수사오류의 최소화 등 수사완결성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나, 일부 경직된 심사로 인한 절차 지연 등 문제 발생
- 따라서, 절차 개선 및 소통강화 등을 통한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추진

〈 참고 : 수사준칙 개정안 〉

- ✓ '검·경 책임수사협의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 이는 수사 미진사항을 누가 보완하느냐의 문제일 뿐, 검찰의 '직접보완'으로 인하여 경찰에 대한 '보완요구'가 감소하더라도 검찰 수사완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수 없음
- ✓ 즉, 수사종결권 등 경찰 권한 확대에 따라 도입된 수사심사제도는 해경 자체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의 효율화 등 지속적 개선 대책 필요

□ 「선별적 이중심사」 및 「집중심사」 시행으로 제도의 효율성 강화

- (선별적 이중심사) 이중심사로 인한 절차 지연 등 제도의 경직성 방지를 위해 수사심사 실적 분석을 통한 선별적 이중심사 시행

- 분기별 상위 3개 우수관서 선정, 해당관서는 차분기 2차심사 생략*

* 주요사건 제외 : 고소·고발 사건, 혐의부인 사건은 2차 심사 실시

[기존] 2차심사	[우수관서] 2차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치사건 中 혐의부인 • 불송치사건 • 자체종결사건 (변사, 고래혼획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심사 생략 (단, 고소·고발, 혐의부인사건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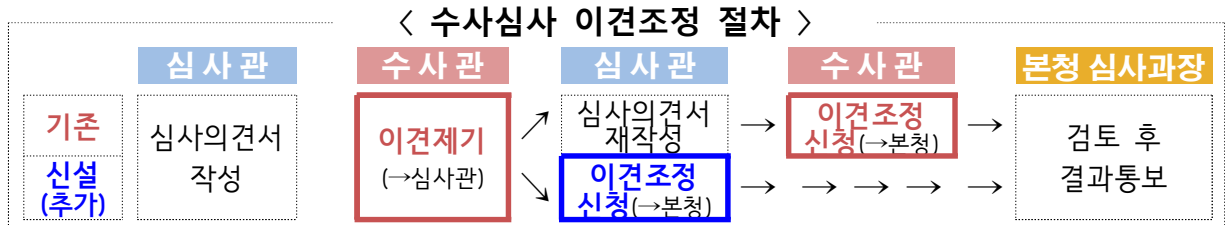
- (집중심사제도)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심사관 요청을 통해 집중심사 대상 사건으로 지정, 경찰서·지방청 심사관의 1, 2차 통합심사 실시

- 중요사건의 수사완결성 강화와 동시에 절차 간소화로 업무부담 경감

대 상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적 쟁점이 있어 경찰서 심사관이 요청하는 사건
절 차	경찰서 심사관 요청 → 경찰서·지방청 합동심사 → 심사의견서 작성 → 2차 심사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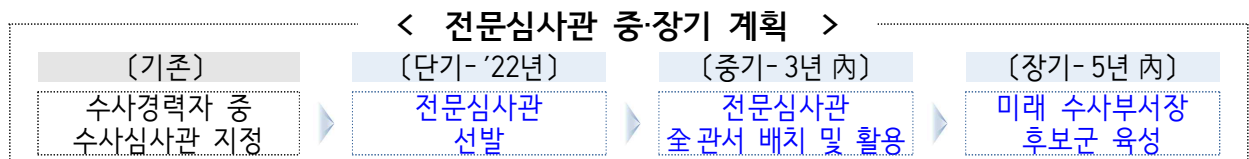
□ 「수사관 - 심사관 협업 강화」를 통한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 (사전협의 절차 신설) 수사심사관이 심사의견서(보완 후 처리·재심사 의견) 작성 前, 수사관-심사관 간 '사전 구두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 상호 협력을 통한 수사결과 도출로 소통 강화 및 수사 완결성 확보
- (심사관 조력 의무 명시) 수사관이 수사 주 과정에서 자문 필요시, 자유롭게 '상담을 요청'하고 심사관은 '이에 조력'하도록 지침* 명시
*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운영 지침 (‘21. 7. 2.)」 개정을 통해 명시
- (이견조정 신청 주체 확대) 수사관-심사관 간 이견 발생시, 이견조정 신청(→ 본청 수사심사과) 주체를 기존 '수사관'에서 '심사관'까지 확대
- 심사관의 선제적 조치를 통한 갈등 예방 및 신속한 합의점 도출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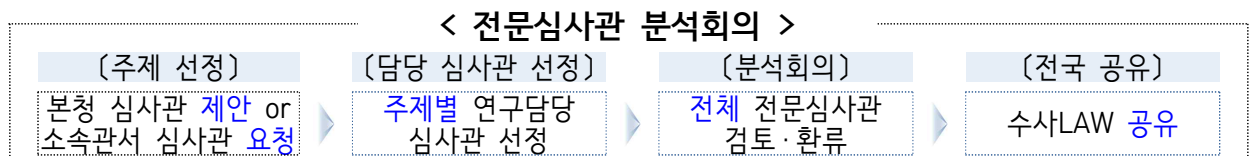


□ 「전문심사관」을 활용한 「수사기법 및 법령·판례연구」 활성화

- (전문심사관) 변호사·심사관 특채·우수 심사관을 전문심사관으로 선발하여 소 관서 배치, 수사기법·법률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으로 육성



- (수사자료 개발) 수사·법령 연구자료 제작시 「전문심사관 분석회의」 개최, 테마별 심도있는 연구자료 제작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한 신뢰성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선별적 이중심사·집중심사 시행(2월)	❖ 수사심사관 운영지침 개정(3월)
분기별	❖ 분기별 심사평가 우수관서 선정(4, 7, 10월)	❖ 연간 심사평가 및 전문심사관 선발(11월)

역점	해양 마약수사 전문기관으로 도약	형사
	[과제목표] 마약류사범 검거건수 ('22년) 962건 → ('23년) 1,010건 (5%↑) UNODC 고용휴직 직위 신설(수사관 파견) 및 관세청 업무협약 체결	

□ 해양 마약류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마약수사 인프라 구축

- (마약범죄 증가) 선박 마약 밀반입 및 외국인 선원 등 마약사범 증가 추세
 - * 해양 마약범죄(건) ('18) 90 → ('19) 173 → ('20) 412 → ('21) 518 → ('22) 962
 - ** '22년 국정감사時 「마약범죄 대응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다」며 박덕흠의원 등 7명 지적
- (마수대 직제화) 국정 과제(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사회 구현) 관련 마약범죄 근절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청 마약수사대 직제화

〈 마약수사대 신설 및 소요정원 확보 대응 〉

- ▶ (마수대 신설) 동해·제주청 기준(2명)·유동정원 활용 → 마수대 신설
- ▶ (소요정원 확보) 마수대 소요정원(21명) 확보 대응 → 마수대 직제화

- (최신 장비 보강) 마약단속 현장에서 약물 및 은닉 목적물의 신속한 탐지·분석을 위한 최신 장비 도입*('23년 예산 5억원 확보)
 - * 경찰청 등 마약단속기관과 정보 교류를 통해 최신형 마약장비 도입 추진

□ 해외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내외 정부기관과 총력 대응

- (국제공조 확대) 선박을 통한 해양 마약류 대량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단속기관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법 마약류 국경 차단
 - 해양 法집행기관인 미국·일본·중국 코스트 가드와 공조, 마약실무 협의체 구성, 공해 및 접경해역 합동 단속 등 협업 체계 구축
 - 콜롬비아, 태국 등 주요 마약 생산국 정부기관과 공조 체제 구축, 수사정보 교환 등을 위해 UNODC 고용휴직 직위 신설(수사관 파견) 추진
- (국내협력 강화) 경비합정 등 보유자산 활용 합동단속 및 마약단속 장비(탐지견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동해·제주청 마약수사대 신설 및 소요정원 대응(2월), 관세청과 업무협약 체결(~3월)
2분기	❖ 마약수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4월), 최신 마약탐지 장비 보급(~4월)
3분기	❖ UNODC 고용휴직 직위 수사관 파견근무 추진(~7월)
4분기	❖ 국조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의의 참가(10월)
연 중	❖ 특별단속 기획 및 단속홍보 실시, '24년 마약류 소요정원·예산 확보 추진

정책	국민안전을 위한 특별단속 강화 및 수사매뉴얼 발간	형사
	[과제목표] 해양치안 위협범죄 특별단속(연 4회 ↑), 추진실태 중간점검(연 2회 ↑)	

□ 필요성

- (국정과제)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①해양 흉악범죄, ②권력형 성범죄 관련 예방·근절 방안 마련 및 ③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필요성 대두
- (수사 가이드라인) 신속·공정한 수사를 위해 현장에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 사건 등에 대한 체계적 사건관리 및 지침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해양치안 위협범죄) ①마약류 · ②국가예산 편취 · ③해양안전저해 사범 등 국민생활안전 및 해양치안 위협범죄 대상 특별단속 추진

- ① (마약류 사범)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및 국민 일상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연중)
- ② (국가예산 편취사범) 항만 재개발 공사·어촌뉴딜300 등 국가예산 해양사업 분야의 부패·비리·유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4~9월)
- ③ (해양안전 저해사범) 국민생명과 직결된 해양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해양 사고와 개연성이 높은 유형(불법 증·개축 등)의 범죄 집중단속(상·하반기)
- ④ (인권침해사범) 여성·아동·외국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해양종사자 대상 권력형 성범죄 등 인권침해범죄 강력대응, 전담반 구성 및 상시 단속체계 구축

- (수사매뉴얼 발간) 특별단속 등 현장수사 시 도출되는 쟁점사항 및 사회적 이슈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매뉴얼 및 지침 마련

*현장점검 등 의견수렴을 통한 추가 소요 지속 발굴

- ① (선박 충돌·화재) 울산 성회항 방화·서귀포 성산항 화재사건(22년) 등 선박관련 해양범죄에 대한 주요사례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선박 충돌·화재 수사 매뉴얼 발간
- ② (중대재해사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교류 협력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사건 관리 체계 정비, 선박·항만 등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수사 매뉴얼 발간
- ③ (불법 해루질) 고질적 민원사건(해루질) 관련 주요쟁점 사항을 도출, 장소별·수법별 수사 착안사항을 담은 '불법 해루질 단속 및 수사지침' 마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4~6월), 국가예산 편취사범 기획수사(4~9월)
하반기	❖ 하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10~11월),
연중	❖ 마약류·인권침해 단속 실시, 특별단속 추진실태 현황점검, 수사매뉴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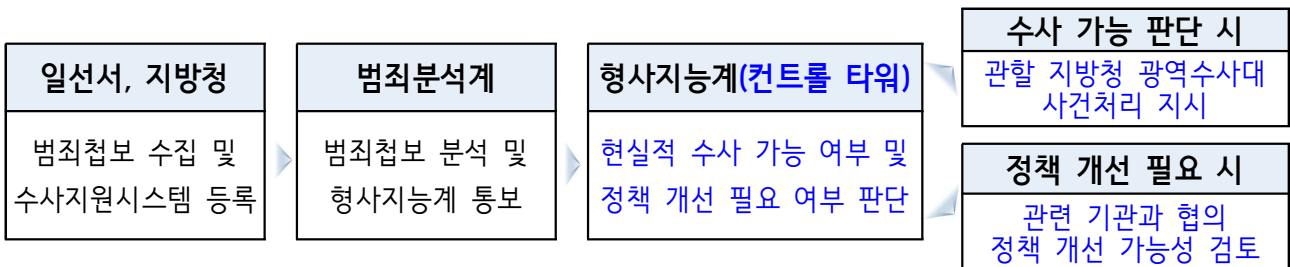
정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	형사
	[과제목표] 공정수사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춘 양질의 기획수사 활성화	

□ 지역별 특성에 맞춘 양질의 기획수사 추진

- (광수대 분소 설치) 지방청 관할 내 원거리 주요항만 소재지 및 기획수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 광수대 분소 설치,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수사 전개
* 중부(평택)·서해(군산)·남해(통영)·동해(포항) 분소 설치(형사2계 또는 순찰형 출장소 활용)
- (특화된 기획수사) 민·관 유착비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비리에 대한 지역·시기별 특성에 맞춘 기획수사 전개
*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비리 특별단속(1월~3월) / 국가예산 편취사범 기획수사(4월~9월)

□ 공정한 인지사건을 위한 첩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첩보 컨트롤 타워) 무분별한 인지·기획수사 및 청탁수사 지양, 양질의 기획수사 전개를 위한 범죄 첩보 컨트롤 타워 구축



□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건관리 강화

- (수사기간 예고제) 기획수사 장기화 방지를 위해 사건 담당자가 수사기간 예고*, 체계적 관리 및 사건 장기 처리 시 패널티 부여
* 기획수사 승인 요청 시, 사건 담당자가 수사기간을 직접 지정, 사건처리 기간 지표 신설
- (기획수사 D/B화) 지역별 발생빈도 높은 사건에 대한 범죄흐름, 수법 등을 시각화·정보화하여 D/B구축 수사지원시스템과 연계 추진
* 동일유사 사건에 대한 간접경험 및 이해도 향상으로 수사 기간 단축 / 민감정보 별도 관리
** 영장작성 및 교부방법 등 주의사항, 주요 착안사항 등 포괄적 영장신청 매뉴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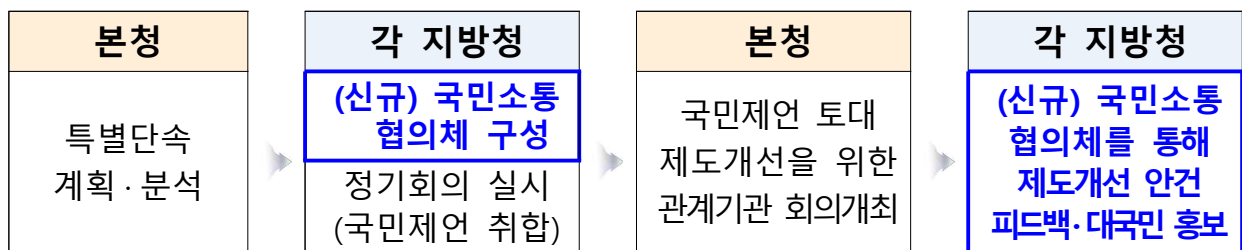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기획수사 역량강화 광수대장 소통간담회, 분소 시범 운영, 특별단속 실시
2분기	❖ 기획수사 경향 등 분석, 기획수사 지도·점검
3분기	❖ 분소 시범운영 결과 도출 및 개선사항 발굴, 기획수사 지도·점검
4분기	❖ 중요사건 수법 D/B 구축 및 공유, 기획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연 중	❖ 주간 진행사건 보고, 중요사건 지휘·지도, 기관교류 및 양질의 첩보생산 하달

정책	예방중심 형사활동 및 형사2계 수사역량 강화	형사
	[과제목표] 현장계도 사례집 발간, 국민소통 협의체 구성, 형사2계 직제화	

□ 국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예방중심의 형사정책 활성화

- (예방중심 형사활동) 특별단속 前 대국민 홍보문자 등 ①단속예고제 시행, 경미사안 ②현장계도 등 예방중심의 국민 친화적 단속정책 추진
* 지역별·분야별 현장계도 사례 분석 후 가이드라인 제시, '현장계도 사례집' 발간
- (국민소통창구 확대) 단속결과 분석에 따른 체계적인 국민제언 취합을 위해 지방청별 지역대표 선정* 및 국민소통 협의체 신설, 정기회의 개최(상설화)
* 해·수산 관련업체 대표, 어촌계장, 언론계, 학계 등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대표 선정



□ 형사2계(형사기동정) 수사역량 강화 및 역할 재정립

- (특별단속 전담수사) 해양안전저해·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 등 특별단속 전담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현장 인지수사 부서로서 역할 재정립
- (형사2계 직제화) '24년 도입될 차세대 형사기동정(13톤/2척)의 상시 출동 태세 완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형사2계 직제화*
*차세대 형기정(13톤/2척) 배치관서 검토 및 운영인력 배치를 위한 직제화 추진
- (수사역량 강화) ①수사경력자(1년↑) 인력배치, ②형사기동정 특화 전문교육 신설, ③해양특화 수사기법 공유 발표회 등 형사2계 수사역량 강화방안 마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상반기 각종 특별단속 전 단속예고제 추진 (1월, 4~6월), 국민소통 협의체 구성 및 정기회의(3~6월),
3~4분기	❖ 하반기 각종 특별단속 전 단속예고제 추진 (9~11월), '현장계도 사례집' 발간(9월) 해양사고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9월), 형사2계 우수사례 발표회(10월)

역점	해양사이버 수사 대응체계 구축	과학수사
	[과제목표] ('22년) 사이버수사 기반 마련 → ('23년) 사이버수사 체계 완성	

□ 필요성

- **(해양사이버범죄 출현)**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해양 관계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증가 우려
- * IMO(국제해사기구)는 '24. 1. 이후 건조 선박 사이버 보안 시스템구축 의무화 권고

〈 '22년 국정감사 지적 〉

- ✓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제대로 된 대응역량 구축 필요
- ✓ 사이버보안, 수사역량을 늘리고 전담조직 신설 필요 (민주당 신정훈 의원)
- ※ 최근 5년간 항만공사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득 등 사이버공격 442건 발생

□ 주요 내용

- **(조직체계 구축)** 본청(컨트롤타워) 및 지방청(사이버수사) 조직 구성·인력 증원
 - ┐ 본청 과학수사과 및 지방청 사이버수사계 신설, 인력증원(20명) 소요정원 요청
 - └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실 방문 설명 등 부족한 조직체계 적극적인 홍보 실행
- **(인력·장비보강)** 사이버 수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실무형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등) 경력 채용 및 사이버 수사 전문 포렌식 장비 도입
 - ┐ '23년 디지털 포렌식(2명)·사이버 수사(3명) 분야 경찰관 경력채용 요청(인사)
 - └ 사이버포렌식장비 경찰청 수준 대폭 확충('22년 2.9억→ '23년 6.2억 증액)
- **(대외협력 강화)** 경찰청,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사이버수사 관계기관 간 교류 확대(사이버 범죄정보 제공 및 해양 관련사건 이첩 등 요청)
 -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관 : (공공) 국정원 (민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보안 전문교육, 수사업무 협조 등 MOU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실무형 전문가 경력채용 요청(3월)
2분기	❖ 과학수사과 직제신설·인력증원 소요정원 요청 (4월), 전문 포렌식 장비 도입(6월)
3분기	❖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실 방문 설명 실시(9월~)
4분기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11월)

정책	해양경찰 과학수사 발전방안 지속 추진	과학수사
	[과제목표] 「해양경찰 과학수사 발전방안」 추진경과 점검·보완 및 지속추진	

□ 추진배경

- (단절없는 업무추진) 미래 해양 과학수사 전문기관 도약을 위해 수립된 『해양경찰 과학수사(CSI) 발전 방안』* 완결을 위한 부단한 업무추진 필요

* '20. 9.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과학수사를 목표로 3대 핵심전략 선정

□ 주요내용

- (그간 추진사항) 선진 해양과학 수사기관으로의 도약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수사 발전 핵심전략 3UP⁺(인프라, 전문성, 이미지) 지속 추진
* '20. 7. 과학수사와 신설(총액인건비)이후 체계적 추진 / '22년부터 사이버수사 업무 개시

전 략	주요 추진성과
인프라 ^{UP}	✓ 과학수사과 신설('21.7), 본청 유동정원 2명(사이버, 대외협력) 확보, 예산증액('20년3억→9억)
전문성 ^{UP}	✓ 전문인력 채용·양성, 통계시스템구축, 위탁교육 대폭확대, 과학수사관 역량평가 등
이미지 ^{UP}	✓ 과학수사 CI제작, KDVI워킹그룹 합류, 국외훈련(FBI), 성균관대 업무협약, 자문위원회 개최
사이버수사	✓ 사이버수사전담반 편성, 워크숍 개최, 포렌식학회 가입, 국보연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보완필요) 핵심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예산·대외협력 등 발전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총경급 정식직제 미반영, 인력확보 등 다소 미진

* 소수의 인력, 경정급 임시부서로 대내·외적 원활한 업무추진에 일부 한계

- (지속추진) 새정부 기조(국정과제), 국민 눈높이(스마트한 해양경찰)에 부응하는 과학수사 역량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 지속 추진

* 사이버수사계 신설, 대외협력 확대, 최신시설·장비 확충, 현장소통 강화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사이버수사계 신설(2월), 경력채용·전담요원 활성화(복제, 전문교육지원)(3월)
2분기	❖ 최신 사이버수사 장비 도입, 대외협력(국정원, 경찰청, 국과수, KISA 등)(6월)
3분기	❖ SOP등 규칙·매뉴얼 재정비(8월), 대국민 홍보(CI활용, 과학수사교실 등)(9월)
4분기	❖ 시설·장비 확충(11월), 과학수사 학술활동 확대, 업무협약(KISA, 고려대 등)(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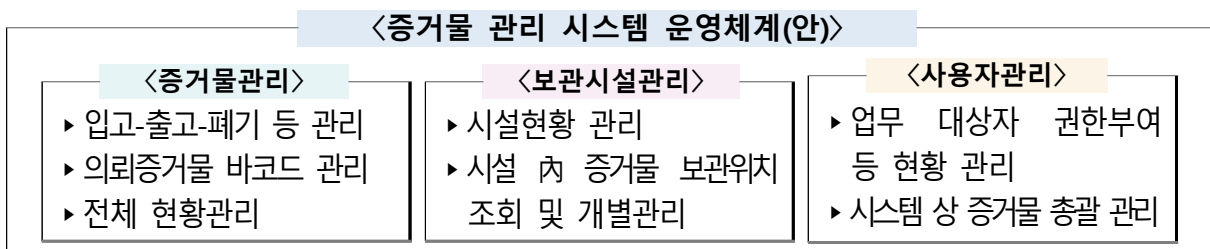
정책	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업무환경 개선	과학수사
	[과제목표] 증거물 관리체계 전산화 및 과학수사관 검시역량 강화	

□ 변사사건 이첩 대응 검시역량 강화

- 군사법원법 개정('22. 7. 1.)으로 군(변사) 사건 이첩 시 우리청 과학수사관의 검시 참여 의무화에 따라 전문성 확보 및 대응 방안 마련
 - * **검시담당** 지방청 과학수사관 대상 관련학과, 과학수사 경력 감안 지정 (1명)
 - * **지침마련** 현장경험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응지침 마련 (선별적 대응 지양)
- 「검시 기초과정」 교육개설*을 통해 해상 변사자 검시, 지문감정,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실무역량 양성
 - * **내부** 교육원 기존 감식교육 내 검시일부 편성 → 검시 전문가 과정 신설
 - * **외부** ㄱ 국과수 부검 참관·검시 교육과정 개설 협의
 ㄴ 변사현장 감식·검시조사관 교육과정 우리청 인력 편성

□ 증거중심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증거물 관리체계 전산화

- 미제사건 등 주요증거물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24년까지 수사지원시스템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
 - * 現 수사지원시스템의 통계, 첩보 등 전체기능 '24년 차세대 KICS 메뉴 이관
- 해양 수사 환경에 맞는 메뉴 구성하여 증거물의 '입고 → 출고 → 처분 → 폐기' 전 과정 전산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검시 특채 소요정원(24년) 협의 (2월~) ❖ 경찰청 증거물 관리 현황 파악(3월)
2분기	❖ 유관기관 검시 교육 개설 협의(4월) ❖ 일선 증거물 보관 실태 파악 (4~6월)
3분기	❖ 검시관련 지침, 용어집 등 작성(8월) ❖ 증거물 관리시스템 메뉴 구성(6~7월)
4분기	❖ 검시 기초과정 교육(10월) ❖ 시스템 업체와 개발 협의 (9월)

구조안전국

역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해양안전
	[과제목표] 법령 제·개정 ('23년) 「연안사고예방법」 개정 및 관련 행정규칙 제정	

[예산] 대국민 연안안전 교육 내실화(교재 제작 등)를 위한 '23년 예산 3.3억원 배정

[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연안안전교육 관련 행정규칙 제정

□ 추진배경

- (연안안전교육) 최근 5년간 연안사고의 85%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확대* 시급
 - * ('21년 교육 인원) 해경청 2.2만명 ↔ 소방청 363만명(소방안전교육)
- (연안체험활동) 현행법상 연안체험활동은 2중 신고체제로 인한 운영자 등 불편 및 신고 제외규정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 발생

□ 세부내용

- (법률 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마련
 - * [주요내용] ① 해경 ↔ 교육청 등 협력을 통해 유아·학생 등 대상 연안안전교육 교육 실시, ② 연안체험활동 당일 신고체제로 개선 및 신고 제외대상 최소화
- (하위법령 개정) 법률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 등 일부 개정안 마련
 - * [주요내용] ① 연안안전교육 종류,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강사의 자격 및 교육방법, 안전관리기준, ② 연안체험활동 신고방법, 서류 등 간소화
- (고시 제정) (가칭) 「연안안전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 * [주요내용] ① 연안안전교육의 종류·대상 및 내용, ② 연간 교육계획의 수립, ③ 교육신청·접수, ④ 안전교육 운영, ⑤ 참가자 준수사항, ⑥ 지도·점검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원 발의(3월)
2분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심의 및 공포(6월)
3분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심사 등(7월) ❖ 「연안안전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마련 및 심사(8월)
4분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 및 고시 제정 (12월)

역점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해양안전
	[과제목표] 연안안전교육 이수인원 : '22년 38천명 → '23년 80천명(110%↑)	

[예산] 대국민 연안안전 교육 내실화(교재 제작 등)를 위한 '23년 예산 3.3억원 배정

[법령] 연안안전교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 (법적 근거) 대국민 연안안전교육을 위한 법률 개정('23년)에 따라 연간계획 수립, 표준교재 발간, 영상 제작 등 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 세부내용

- (연간계획 수립) 연간 교육목표(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 등), 운영체계, 일정 및 대상, 커리큘럼 구성, 만족도 조사 등 추진방안 마련
 - * 중장기적인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조직·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 필요
- (표준교재 발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연안의 특성 및 이해, 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주요 사고사례, 안전장비 활용법 등 구성
 - * 연령별 ① 미취학~초2용, ② 초등 고학년용, ③ 중·고등용, ④ 성인용 맞춤 제작
- (교육동영상 제작) 연령별로 안전교육의 집중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영상교육 콘텐츠(애니메이션 등) 제작·배포
 - * 범정부 안전교육 플랫폼(학교안전정보센터 등)에 등록, 연안안전교육 저변 확대
- (체험교육방안 마련) 연내 이동형 연안안전 체험차량 도입·운영방안 마련 및 중장기적으로 쏠 해경서 도입*을 위한 소요예산 협의
 - * '24~'27년간 매년 5대씩 총 20대 도입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운영 계획 수립(1월) ❖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필수 기자재 수요조사 및 구매·보급(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표준교재 및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배포(6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12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생존수영 교육 실시(교육기간 중)

정책	파출소 임무수행 역량 강화	해양안전
	[과제목표] 인명구조자격증 보유율 목표치 ('22년) 80% → ('23년) 82%	

[예산] '23년 인명구조자격증 취득·갱신 교육 운영 약 4억(20개 해경서x20백만원) 편성

□ 추진배경

- 현장 파출소 인력 대규모 충원, 구조장비 인프라 확대 등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고도화 정책 필요
- 현대화된 구조장비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신입 경찰관 및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개개인 역량 극대화

□ 세부내용

- (조종시뮬레이터 도입) 기초적인 연안구조정 운용능력 학습을 위해 여수교육원에 모의주행 장비 도입, 18톤급 연안구조정 교육과정 마련
* 최근 5년 연안구조정 사고통계: 운항부주의 등으로 年 평균 4.4건 발생
- (파출소 구조전문가 양성) 기존 인명구조자격증 취득과정과 연계하여 구조능력 고도화를 위해 상위개념의 수상구조사 신규교육 개설
* 파출소 근무자 수상구조사 자격증 보유 현황: 103명 ('22년 10월 기준)
- (진압장비 운용능력 강화) 적절한 경찰 물리력 행사를 위해 상·하반기 가스발사총, 38권총 실제 사격훈련 및 운용술 교육 추진
-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 연안구조정 운영규칙 제정, 기존 훈령* 정책 변경사항 조문 신설, 어구 수정, 상위법 변경내용 등 반영
* 소관 규칙(3): 어선출입항신고 관리규칙, 파·출장소 운영규칙, V-Pass 고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 연안구조정 시뮬레이터 예산안 산출(5월), 수상구조사 과정 개설(3~10월)
하반기	❖ 가스총.38권총 사격술 교육안 마련(7월),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연중)

정책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	해양안전
	[과제목표] 청사 리모델링, 수상연접형 부지 및 개선공사 소요예산 확보	

□ 추진 배경

- (현장인력 증가) 최근 5년 현장인력 증원 기조로 인해 파출소 교대 인력 등 명목으로 600여명 정원 보강('17년 2,020 → '22년 2,662명)
- (청사공간 협소) '97~'02년 준공 파출소는 1일 근무자 5~6명 기준으로 설계, 現 1일 근무자 10~12명으로 확대되어 시설면적 재편 필요
- (신축 어려움) 관련 기능(국유재산계) 필요성 인식, '23년 파출소 신·증축사업 11개소 추진하였으나 최종 6개만 반영(新 2, 增 4)

□ 세부 내용

- (실태조사) 전국 97개 파출소 건물 연면적, 형태(단층, 복층), 외관(건축자재), 노후도 등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리모델링) 건축연한 20년 이상 파출소 35개소(36%) 중 개선 필요 청사 선정(지방청별 2개소 이상), 연내 시범공사* 추진(3.3억원)
 - * ('23년 공사일정) 실태조사(2~3월) → 대상 선정(3월) → 관서별 공사 계약(4월~('24년 소요예산) 잔여 25개소 리모델링 소요예산 산출 및 협의('23.5월~)
- (수상연접형 부지 확보) 신속 출동 가능한 청사·계류 위치* 확보
 - * 파출소와 계류시설간 이격거리 평균 100m이상 개소 우선 확보 추진
- (新 청사 표준모델 마련) 환경변화* 반영 및 상징적 건물디자인 개발**
 - * 구조거점 신설('18~), 「장애인편의법」개정('15) 등 제도 및 환경 변화
 - ** 일반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해양경찰만의 상징적 건축물(이미지) 필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 실태조사(2~3월), 파출소 시설면적 기준 연구(3~7월), '24년 청사 공간개선 예산안 산출(5월)
하반기	❖ 청사 리모델링 개소 선정 및 진행(3~8월), 수상연접형 파출소 부지 확보 추진(연중)

역점	해양 인명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고도화	수색구조
	[과제목표] 민관 협력·지원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 민간구조협력 22.25억원(출동수당 8.46억, 민간경상보조 13.45억, 수용비 0.34억)

[법령] 민간해양구조대법안 발의(10.11. 윤재갑 / 11.16. 이달곤), 수상구조법 개정(보상 확대)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이행) 민관협력 고도화를 위한 ‘민간구조세력 통합·정부 지원 강화’ (국정 41-③)과제 이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민간조직 법제화)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체계적 지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발의('22. 11월) → 농해수위 상정(2월) → 입법 공청회('23년) → 국회 심사('23년)

- (민간역량 제고) ① 전문교육* 지원 확대, ② 민간구조자원 동원관리 통합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자율·능동형 민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 ③ 사회 공익사업과 연계, 국민참여형 해양구조안전문화*** 확산 추진

* 전문강사(10명, 6개월) 운영, 교육원 과정개설(초동조치 과정 10회, 관리자담당자 과정 1회)

** ISP 사업 연계(약 10억원) 해·육상 동원시스템 통합으로 운영 효율화

*** 서프구조대 확대(태안·제주), 민간구조경진대회 및 대국민 구조안전 캠페인 실시

- (민간처우 개선) ① 장비사용료 신설*, ② 피복·보험 혜택 확대, ③ 보상 제도 개선**, ④ ‘민간해양구조대의 날’·‘바다의인상’ 등 사기진작 도모

*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의 사용료 지급근거(시행규칙 제12조) 신설 및 예산확보 추진

** 정신적 질환까지 보상검토(법 제29조 개정), 부상자 치료절차 신설(시행령 제30조의 2 개정)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민간경상보조사업 시행(1~12월), 장비사용료 기준신설 및 예산대응(2월~)
2분기	❖ 전문강사 채용(4월), 보상확대 관련 수상구조법 개정 추진(3~12월)
3분기	❖ 서프구조대 확대(태안·제주) 신설(7월), 구조경진대회 개최(8월)
4분기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법 제정(연내), 민간해양구조대의 날(바다의인상) 개최
매월	❖ 민간해양구조대 전문교육 실시

정책	해양재난 대비 구조대응역량 강화	수색구조
	[과제목표] 해양재난(사회·자연) 인명피해 감축(최근5년 평균 84명→'23년 76명 / 10% ↓)	

□ 추진배경

- 최근 사회(이태원 참사) · 자연재난(태풍)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대비태세 고도화 및 훈련 강화로 생명구조 중심 정책 추진

□ 주요내용

- (사회재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사고에 대한 맞춤형 대응계획(1개 사고유형 선정*) 수립·추진, 현장수용력 및 역량 강화
 - *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해양사고 유형을 발굴하여 맞춤형 대응계획 수립
 - 행동사항 중심의 매뉴얼 개선, 전복 등 고위험 사고 관리강화** 등
 - * 예부선 안전관리제도(21년), 전복선박 인명구조 강화방안(22년)은 지속적 고도화
- (자연재난) 태풍, 지진 · 해일* 등 발생빈도는 낮으나 대규모 인명피해 등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자연재난에 대비 관계기관 협의 및 훈련 실시
 - * (국내)1983년 동해중부 지진해일(규모 7.7), (해외)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0)
- (현장대응 역량강화) MRO(대규모 인명구조) 상황 대비, 지방청 수난대비 기본훈련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수사상자 분류 · 이송 훈련 실시
 - * 재난안전통신망 이용,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DMAT) 등과 합동 훈련
 - 구조대원 등급별 교육 체계화 및 수중탐색 장비확충·노후장비 교체 등
- (국제규정 수용 등) 국제규정인 RCC(구조조정본부)와 수상구조법에 따른 구조본부 체계를 재정립*하고, 구조본부 지도 · 감독 규정 마련
 - * 국제수색구조매뉴얼(IAMSAR) 상 주요보직을 우리 해양경찰 조직체계와 일치
 - ** 국외사고 대응강화를 위해 주변해역 및 인도 · 태평양(호주 등) RCC 협력망 확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난대비기본훈련 계획 수립 (2월), 구조본부 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2월)
2분기	❖ 맞춤형 대응계획 수립(4월), 지진해일 대비 대응계획 고도화(5월)
3분기	❖ 수색구조지침서 개정(7월), 구조본부 운영규칙 등 행정규칙 개정(9월)
4분기	❖ 각급 구조본부 현장 지도점검(11월), 수난대비 기본훈련 성과 분석(12월)
매월	❖ 각급 구조본부 수난대비 기본훈련 실시 결과 모니터링

정책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상 구급체계 고도화	수색구조
	[과제목표] 해상 응급환자 이송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전국 확대	

[예산] 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등을 위한 18.2억

□ 추진배경

- (구급팀 구성) 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도서의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3개 파출소에 1급 응급구조사 배치, 구급팀(3인 체제) 시범운영*('22.7.~)
 - * 진도·지도·노화派에 1급 응급구조사 7명+ 일반 경찰관 14명으로 구성 응급상황 우선 대응
- (시스템 검증) 대규모 해양사고 시 신속·정확한 중증도 분류 및 실시간 환자이송 동선 파악이 가능한 신규시스템* 시범운영 및 효과성 검증**
 - * 재난단말기에 설치된 전용APP과 NFC방식 전자태그를 연결 환자정보 실시간 공유
 - ** 보령·목포서 함정(42개소) / 現 시스템 보다 신속(5분↑)하게 정보 취합(정확도 100%)

□ 주요내용

- (구급팀 확대검토) 연안·도서 지역 구급역량 향상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파출소 구급팀 운영성과 분석 후 순차확대 추진
- (시스템 개선) 상황실 통합상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상 응급환자 이송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전국 확대 구축 추진*
 - * 전자태그 및 전용 종이태그 함정, 파출소 등 326개소 확대보급
- (R&D) 원격응급의료시스템 미설치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형·경량화된 지능형 휴대용 응급의료키트(R&D 성과물)시범운영('23. 말~)
- (정책연구) 新 구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용기준 등 현장에 적합한 구급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으로 해상 구급체계 전반* 정비
 - * 시스템 운용기준, 인력 운영방안, 비자격자 업무범위 설정, 교육훈련 체계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해상 응급환자 이송정보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연구용역 추진(3월)
2분기	❖ 응급처치 공통 커리큘럼 개발 및 강의안 마련(6월)
3분기	❖ 해상 응급환자 이송정보 시스템 구축(9월)
4분기	❖ 해상 응급환자 이송정보 시스템 확대 위한 구급 장비구매 및 사전교육(10~12월)

정책	수상구조사 자격 정책 · 제도적 기반 강화	수색구조
	[과제목표] 국민 수요 맞춤형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변화되는 수상구조 환경 및 정책여건 반영, 수요자의 접근편의성 개선 등 자격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및 시스템 고도화

□ 세부내용

- (제도 정비) 국내 유일 인명구조 국가 자격 위상에 맞는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고도화 정책 연구용역 수행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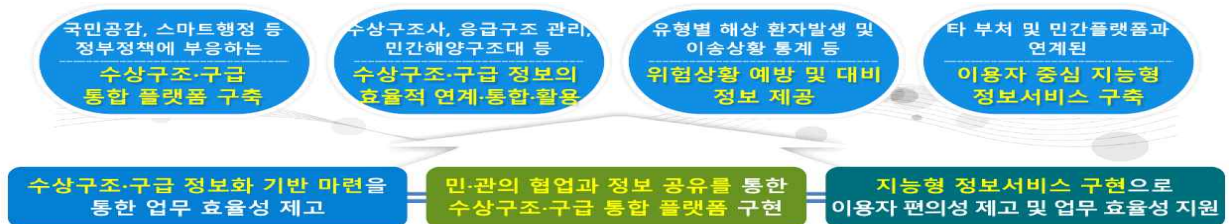
* 연구용역과 연계, 「수상구조법령」, 행정규칙 및 업무편람 등 일제 정비

〈연구용역 주요내용〉

- ✓ (자격 세분화) 수상구조사 자격수요 대응 및 전문화를 위해 2종(안) 구조사 신설
- ✓ (시설기준 등) 사전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시험장 수심기준 정비
- ✓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자격과 민간 인명구조사자격의 목표·역할·역량강화 방안 등
- ✓ (법체계 정비) 수상구조법령 상 체계정비(하위법령 위임조항 정리,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 (시스템 구축) 유사 시스템 통합*, 정부 · 민간 연계 확대로 수상구조·구급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종합포털 구축

* 수상구조사·민해대·응급구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ISP 수행 完('22. 8. 9.)



- (디지털 행정) 자격증 취득자의 카드형 자격증 발급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자격증 표출 기능을 하도록 시스템 개선

* (추진일정) 기술협상 ('22. 11월 完) → 기능 모델링 ('23. 3월) → 시범운영 ('23. 5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 기재부 및 NIA 시스템 구축 예산대응(4월~), 23년 수상구조사 제도 정책연구 수행(3월~)
하반기	❖ 연구용역 결과연계 수상구조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 업무편람 일제정비(10월~)

역점	미래 수상레저 정책수요 창출을 위한 R&D 추진	수상레저
	[과제목표] ①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개발, ②스마트 안전검사 플랫폼 개발 예산 확보	

□ 추진배경

-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개발(R&D)*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1년차 사업 착수
* (사업기간) '23~'26년(총 4년) / (사업비) '23년: 17억원(총 사업비: 81억원)
- '24년 신규사업 추진 위한 사전기획연구* 토대로 예산대응 필요
* (연구기간) '22.9월~12월 / (결과활용) '24년 R&D 예산확보 위한 자료 활용

□ 세부내용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통해 사업 수행기관의 연구개발계획에 따른 연구내용의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공적인 과제 수행 지원

〈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개발 주요 연구내용 〉

- ✓ 수상레저기구 위해도 평가방법 및 안전인증 등급화(안) 개발
- ✓ 수상레저기구 품목별 안전인증 기술기준(안) 연차별 개발(24종)
 - 수상레저기구의 재료, 구조 등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 설정을 통한 안전기준(안) 개발
- ✓ 안전인증 제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안, 관리지침 등 개발
 -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화 및 운용요령, 인증·시험기관 운영방안, 홍보·교육 프로그램 마련

- '24년 법제화 추진 시 공감대와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산학연 참여 컨퍼런스 개최
* 제조·수입업체 등 인증제 도입에 부정적인 정책수요층도 적극 참여 유도
- 『레저선박 스마트 안전검사 플랫폼 개발』을 위한 '24년 R&D 예산 확보
* 첨단 시설·장비 중심의 시스템적 검사 프로세스 체계 마련을 통한 검사기준 고도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R&D 신규사업 공고(1~2월), 연구개발기관 선정(3월), 사업착수(4월) ❖ '24년 R&D 신규사업 예산확보 위한 중기사업계획서 제출(2월)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인증제 법제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년 1회)

정책	개편 수상레저 법체계의 조기 안착 및 보완	수상레저
	(23년)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제정,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시행(6.11.)	

□ 추진배경

- 수상레저 법제가 2개의 법률로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야별 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선·오류 최소화를 위한 대비 필요

□ 세부내용

- 현장 법령집행 통일성 확보를 위한 「수상레저법령 해설서*제작」
 - * 법령 구성체계, 조문별 입법취지, 유권해석례 등을 수록한 현장업무 기본지침서
- 지자체, 수상레저 관련 기관·단체·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한 수상레저 법제의 개편과 제도 변화 요인에 대한 「다각적 정책PR* 강화」
 - * 입법설명회, 수상레저포럼, 워크숍, 법정교육, 수상레저활동 신고 등을 활용

〈분법으로 인한 주요 제도변화〉

- ✓ (대국민 편의제고) ▲ 안전검사필증제 ▲ 야간운항장비 세부기준 마련 ▲ 사업장 안전장비기준 개선 ▲ 사업용 안전검사기준 완화 ▲ 안전검사의 예외규정 마련 등
- ✓ (안전 강화) ▲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 안전검사필증제 ▲ 양벌규정 ▲ 수상레저 기본계획 수립 ▲ 수상레저시스템·보험가입관리전산망 근거 ▲ 변경등록 사유추가 등

- 분법 추진과정에서의 쟁점화 방지를 위해 보류하거나, 내·외부적으로 지속 제기된 개정소요*를 중심으로 분법시행 후 「법률개정 추진」
 - * 「(수상레저안전법) 통합 조종면허 근거 마련, 조종면허 갱신기간 개선 등
 -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검사 후 상태유지의무 신설, 임시검사사유 추가 등
- 관계기관 입법심사 대응을 통해 「분법 하위법령 개편작업 완수」
 - *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사전설명·대응, 소관 행정규칙 5건 재정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상레저법령 해설서 제작(~6월)
2분기	❖ 분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개정(~6월) ❖ 수상레저안전법 등 보완을 위한 일부개정 추진(~6월)
연중	❖ 분법 관련 제도변화 사항에 대한 정책PR 활성화(~12월)

정책	수상레저 정책 확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재개	수상레저
	[과제목표] 수상레저국민포럼 등 민관 네트워크 활동 재개	

□ 추진배경

- 수상레저 안전정책의 공유 및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대내외적 민관 네트워크 활동 재개

□ 세부내용

- 수상레저 동호회, 사업자, 수상스포츠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협회 관계자 등으로 『수상레저 국민포럼』 재구성, 정책 공유 및 의견 수렴
 - * '20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 / 반기별 1회 개최

〈수상레저 국민포럼 개요(안)〉

-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
- ✓ (기능) 현장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논의, 해외 정책·제도 파악, 법령 제·개정 의견수렴

- 수상레저 안전정책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 및 내·해수면 안전 관리 협업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지자체 합동 워크숍』개최
 - * 코로나19 여파로 '20년부터 3년간 워크숍 미개최로 지자체측 개최요청 지속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개최
 - * '23.1월 개최지 최종 확정 이후 3~4월 예정 / 안전홍보관·요트체험행사 등
- 현 정부의 기업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발맞춰 전국 수상레저사업자, 지자체 등과 함께 하는 『전국 권역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 '22. 6. 신설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내 담당분과와 필요시 협업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국민포럼(3월) ❖ 해양경찰청·지자체 합동 수상레저안전워크숍(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권역별 규제개선 간담회(4~5월) ❖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국민포럼(9월)

국제정보국

역점	지역 특성화 국제범죄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외사
	[과제목표] 국제범죄 검거율 제고 수사인력당 2.5건↑, 인터폴 국제공조 신청 6건↑	

□ 추진배경

-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국제범죄 대응 및 인터폴 등 국제적 경로를 통한 공조수사 활성화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필요성 부각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지역 맞춤형 대응 강화)** 권역·해역별 치안요소의 종합적 분석 및 자체 이슈 발굴 등을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 체계 확립 추진
 - <본청> 국제범죄 대응 방향성 조정, <지방청> 시기·테마별 국제범죄 대응 계획 수립(Bottom-Up), <경찰서> 국제범죄 검거 활동 전개 등 임무 수행
 - 특히, 유관기관 공조확대로 밀입국·밀수 등 국제성 범죄 대응 강화
- **(인터폴 국제공조 활성화)** 지명수배자의 관리실태 점검* 등 전수 조사 및 인터폴 등 국제적 경로를 통한 공조수사 전개 병행 추진
 - * 전체 지명수배자(324명) 중 인터폴 수배서 발부요건 충족 대상 81명(25%)
 - 특히, 사안의 중대성 및 사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 인터폴 국제공조 대상 특정 및 수배(수사)관서 대상 수배서 발부 신청 등 적극 독려*
 - * 전국 수사관서 지도 방문 및 인터폴 수배서 신청 절차·사례 등 교육 병행
 - 또한, 인터폴 전용통신망(I-24/7) 조회권한 확보 및 시스템 연계 예정, 향후 인터폴 수배내역 등 범죄관련 정보조회·분석 업무 수행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인터폴 국제공조 강화 계획 수립(1월), '23년 국제범죄 대응 계획 수립(2월)
2분기	❖ 인터폴 전용통신망(I-24/7) 운영 계획 수립(4월)
3분기	❖ '23년 국제범죄 검거 우수사례 성과보고회(9월)
4분기	❖ 인터폴 국제공조 추진 실태 점검(11월)
연중	❖ 전국 수사관서 지도 방문 및 시기·테마별 국제범죄 대응 계획 수립

정책	신흥 안보위협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외사
	[과제목표] 외사 중요 정보보고 26건, 해양 산업보호 전문가 양성 30명	

[예산] 해양 산업기술보호 전문가 양성 민간 위탁교육 1,900만원 ('23년 신규 확보)
해양경찰 사법통역인 전문성 강화 교육 7,000만원 ('23년 신규 확보)

□ 추진배경

- 국내·외 최신 외사정보 수집능력 및 수사력 강화, 외국인 소통 능력 및 유관기관 협력도 제고, 전문교육 등 신흥 안보위협 대응역량 강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외사 정보수집 다변화)** 신안보 위협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강조
*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 계획 마련
- **(산업기술보호 전문화)** 해양플랜트, LNG 선박조선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보호를 위해, 기술트렌드·기업전산 등 민간 위탁교육 실시
* 산업기술협회 주관, 산업기술전담반 위탁교육, 32명×60만원(신규, 1회)
- **(사법통역인 역량강화)** 외사 민간통역인에 대해 인권보호·수사절차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법처리의 객관성·효율성 제고
* 해경청에서 위촉·관리하는 통역인(427명) 중 선발, 130명×30만원(신규, 계속)
- **(유관기관 협력강화)** 워크숍·전문회의·컨퍼런스 개최·참석 등 국제 범죄 대응 유관기관과 연중 활발한 인적교류 및 시스템교류 지속
* (국외) UNODC, HSI·FBI, JCG, 中해경국 (국내)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軍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3년도 외사정보 수집 운영 (3월)
2분기	❖ '23년도 외사 워크숍 (6월), '23년도 외사 전문교육 실시계획 (4월)
3분기	❖ 사법통역인 전문교육 (연중), 산업기술보호 위탁교육 (연중)
4분기	❖ '23년도 국제범죄 전문회의 (11월)

역점	해양경찰 국제업무 확대 및 역할 고도화	국제협력
	[과제목표] 프로젝트 추진 건수 ('22년) 1건 → ('23년) 3건	

□ 추진배경

- 한-아세안 협력방안 중 하나로 '함정 무상양여'사업 재활성화 필요
- 現정부, ODA 예산 확대 등 ODA 사업 정부 적극 지원 강조

('22.11.14.) VIP 인도네시아 방문시 말씀

* 각 부처는 ODA를 확대, 적극적 ODA 사업 진행 및 ODA 사업 중요성 강조 등 적극적 정부지원 지시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함정 무상 양여 사업 추진을 통한 국제 개발협력 강화
- 방위사업청과 신규 MOU 체결, 함정 양여 및 수출상담회 연계 추진

〈 베트남 · 케냐 함정 양여 추진 〉

- ✓ (베트남·케냐) 한국과의 '해양경찰 퇴역함정 양여' 분야 관심 및 요청
- ✓ (우리측) 의견교환·검토 및 신규 ODA사업 발굴 등을 고려 TF팀 구성 운영 검토
- ⇒ 베트남·케냐 **해상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된 협력방안 마련 및 교류확대 등**

- 코로나19로 기존에 추진이 미흡했던 우리청 ODA 사업 재개, 적극 추진

국 가	ODA 사업명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역량강화

- 우리 청 해양기법을 배워가려는 외국 해양경찰 기관 요청에 따라
수색구조·오염방제·장비기술 등 신규 전수사업 발굴

- 외국 해양치안기관 초청 연수 프로젝트 고도화 및 전략적 추진

- 외국치안기관 직원 우리청 초청 연수 시, 직장교육 등 활용 외국
해경 임무 소개 등 외국 해양치안기관 정보 전 직원 공유

* <상호교류> (외국치안기관) 외국 해경 정보공유 ↔ (우리청) 현장체험 등 연수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분기	❖ 방위사업청 MOU 신규 체결(6월)
4분기	❖ 해양치안기관 초청연수 실시(11월)
매월	❖ ODA 사업 추진, 함정양여 사업 검토 및 추진

정책	국제정보 및 해양법 역량 강화	국제협력
	[과제목표] 국제해양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완료 ('23년)	

□ 추진배경

- 국제안보 환경 악화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정보망 필요성 고조
- 각국의 공세적 해양 활동에 따른 분쟁 대비 해양법 역량 강화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외국 해양치안기관 대상 정보망 확대 및 정보수집 요원 역량 증진
 - 호르무즈해협 등 해양안보 위험지역 치안기관 초청 정보협력망 보강
 - * 오만 해양경찰 주니어 장교급 3명 초청 사업(1차) 추진('22.11.20~25.)
 - 과거 국내 초청 외국 해양치안기관 참석자 사후 네트워킹 관리
 - * 초청연수실적: '17년(17명), '18년(15명), '19년(15명), '21년(5명), '22년(9명)
 - '국제해양정보시스템' 재구축으로 외국 해양정책, 기관 및 인물 정보 등을 시스템화하여 국제정보 수집·분석 체계화 및 전문성 제고
 - * '23년 예산에 국제해양정보시스템('09년 구축) 재구축 사업 예산 확보
 - 본청·소속기관 대상 국제정보 수요조사와 그에 맞는 국제정보 수집
- 국제해양법 전문 인력풀 구축 및 해양법 교육훈련 지원
 - 해양법 관련 전공 또는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국내·외 해양법 교육 및 세미나 등 참여 유도로 전문인력 양성
 - * 본청 및 소속기관 대상 해양법 전공 또는 교육, 근무 유경험자 파악
 - 해양경찰교육원 전문과정으로 해양법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추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1분기	❖ 본청·소속기관 국제정보 수요 조사(2월), 교육원에 해양법 교육과정 개설(3월)
2분기	❖ 국제해양법 전공 또는 유경험자 명단 파악(6월)
3분기	❖ 방한 사업 참가자 연락망 개설(7월)
4분기	❖ 국제해양정보시스템 재구축 완료(11월), 호르무즈 해경 정보협력 사업(11월)

정책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교류 다변화	국제협력
	[과제목표] 신규 MOU 체결('22년) 1건 → ('23년) 2건	

□ 추진배경

-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따른 아세안 국가간의 협력 중요성 부각
 - 기존 협력국과 긴밀한 체제 유지 및 주요 아세안 협력국과 신규 관계 구축

한-아세안 정상회의시('22.11.12.) VIP 말씀

* 한-아세안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

- 대륙별 거점국가 협력관계 확대에 따라 유럽과 아프리카 중요 협력국가 신규 구축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아시아 국가간 해양안보 선도적 대응을 위한 'HACGAM' 개최 추진

<아시아 해양치안기관회의(HACGAM) 개최 추진>

✓ (HACGAM) '04년 아시아 지역 해상에서의 해적·해상테러 등 국제성 범죄의 공동대응 및 국제공조 증진방안 논의 목적으로 창설

✓ (추진내용) HACGAM 회의 시 한국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회원국들간 공감대 형성, 예산·전담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를 통하여 '24년도 국내개최 추진

* 일본 2회, 중국 1회 개최 감안, 국제적 영향력 확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개최 추진 필요

- 기존 아시아 협력국과 협력체계 공고화 및 신규 협력체계 구축
 - (인도·싱가폴) 기존 협력국가와 내실있는 정례회의 개최로 해양안전망 확보
 - (중국·일본) 3년 동안 대면으로 개최되지 못한 기관장급 정례회의(대면) 추진
 - (필리핀) 생계형 동남아 해적 범죄 대응, 해양안보 확보 등 국제 협력망 구축을 위해 필리핀 해양경찰과 신규 MOU 체결
- 해양테러 대응에 전문적인 프랑스 등 유럽, 해적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아프리카(케냐 코스트가드) MOU 체결 추진
- 다자협의체(NPCGF, CGGS 등) 주도적 참여를 통한 해양안보 적극 협력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싱가포르 정례회의(2월) 인도 정례회의 (3월)
2분기	❖ NPCGF 전문가회의 참석(4월), 필리핀 MOU 체결(6월)
3분기	❖ HACGAM 전문가 회의 참석(8월), NPCGF 기관장 회의 참석(9월)
4분기	❖ HACGAM 기관장 회의 참석(10월) 케냐 MOU 체결(11월)
매월	❖ '24년 HACGAM 한국 개최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 유럽·아프리카 등 협력 확대 검토

해양오염방제국

역점	정부합동 ‘해양오염사고재난 관리 혁신’ 추진	방제기획
	[과제목표] 『해양오염사고재난 관리체계 혁신 방안』 '23년 추진과제 이행	

□ 추진배경

- 선박 대형화 추세 등에 따라 대규모 오염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해양오염사고 재난 관리 체계 필요성 대두
- 해양오염사고재난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주체별 협력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해양오염사고재난 관리체계 혁신방안*」 마련 중
 - * 해수부, 해경청 등 참여, '국가 재난 대응 역량 선진화' 등 4개 전략 11대 과제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범정부 「해양오염사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해경청·해수부 등 합동)

- * 예방-대비-대응-복구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면서, 국가-공공-지자체-민간의 협력 체계를 규정한 종합적 계획 마련

- 국가 방제자원 확보목표 및 배치기준 확립 등 대응 인프라 확충('24년~)
 - * 국가·공공 방제자원의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방제자원확보목표」 설정 및 「지역별방제자원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지원 등
 - * 복합 해양사고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화학방제선 등 맞춤형 장비 확보
- 해상화학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및 협업 강화('23년~)
 - * 대응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혼선 없는 대비·대응 체계 구축
 - * 환경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여수 등 4개소)와 인력·기술 공유 등 협업 강화
- 지자체 등 해안방제 책임기관의 방제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24년~)
 - * 지역해안방제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표준지침 개발·배포 준비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연 중	※ 『해양오염사고재난 관리체계 혁신 방안』 23년 과제 이행

정책	재난형 오염사고 대응 조직 역량 강화	방제기획
	[과제목표] '23년 신규인력평가 정규화 또는 평가연장	

□ 추진 배경

- 그 간의 외적 성장을 기반으로, 현장 방제조직 및 방제요원의 교육 체계를 내실화하여 재난형 해양오염사고 대응 전문성 제고
- 방제 실행력 강화 및 국민편의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해양오염 취약분야의 대응력 보장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오염 상시대응을 위한 현업운영 내실화* 및 ^{'21년 소요정원 41명}신규인력평가 대응**
 - * 교대근무체계 등 운영상 문제점 개선·보완으로 안정적인 현업체계 가동
 - ** 현업 운영인력 성과 분석 → 보고서 작성 → 외부 컨설팅 → 행안부 평가
- 방제정 증톤대체 건조에 따른 전문 승조원 채용* 및 소요정원 대응**
 - * 해경 응시생 대상, 메타버스 등 최신 매체를 활용한 해양오염방제 업무 홍보
 - ** '23년 미반영 소요정원(300톤→500톤 증톤 건조에 따른 증원 인력) 우선 확보 추진
- 방제국 일반직공무원 교육체계 내실화 방안 마련
 - * 내부 교육체계 분석, 타 교육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예산·인사·행정 등 공무원 기본 교과목 신설 및 중복·유사 교과과정 통폐합 등 교육체계 정비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소요 발굴 및 부처협의를 통한 개정 추진
 - * 방제조치명령서 개선, 자재·약제 성능시험 권한 위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 국립공원공단과 갯벌 등 블루카본 지역 환경 보호 지속 협력
 - * 오염사고 공동대응, 방제훈련 참여 등 협력 강화 및 협업과제 추가 발굴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우리청-국립공원공단 업무협약 운영회의(3월)
3분기	❖ 행안부 신규인력평가 대응(7월~) ❖ 우리청-국립공원공단 업무협약 운영회의(9월)
연중	❖ 방제국 영상회의 및 워크숍 개최(수시)

정책	방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소통 강화	방제기획
	[과제목표] 글로벌 전문가 소통 협력 지수 ('22년) 94% → ('23년) 95%	

□ 추진 배경

- 선박 대형화 추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등으로 대규모 복합사고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외 방제협력 강화 추진
- 국·내외 방제전문가 간 기술 공유 협력으로 재난형 사고 국가 방제역량 제고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오염 방제분야 국제 협력 중심 역할 수행 및 인접국간 협력 강화
 - * 북태평양 인접 6개국(한·중·일·러·미·캐)의 재난형 해양오염사고 방제 협력 주도 및 한·중·일·러(NOWPAP) 간 해양오염 방제 교류 협력 강화
 - * 한국-일본 간 재난형 해양오염 대응을 위한 방제 정책 교류회의 개최
- 방제기술지원협의회 화학·화재 분야 전문가 추가 위촉 등 자문 활성화
 - * '방제기술지원협의회' 해양오염사고 재난 대응 자문 역할 및 교류·협력 강화
- 한-베 방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2차 사업* 추진
 - * 베트남 국가 방제체계 구축 지원 사업('24~'26년 / 410만불)
 - * 관계기관(외교부 등) 대상, 사업 타당성 등 적극 설명('23. 6월중 대상 사업 최종 선정)
- 해외 선진 방제 기술 및 재난 대응 우수사례 등 현장 환류체계* 마련
 - * 국제 정보 공유 회의, 방제기술 아카데미, 해외 오염사고 시 사례 분석 등 정보 제공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3월)
2분기	❖ IMO 해양오염 대비·대응 전문위원회 참석(4월) ❖ NPCGF 전문가회의(위기대응그룹) 참석(4월)
3분기	❖ 국제유류오염학회(Spillcon, 호주) 참석(9월) ❖ NPCGF 기관장회의(위기대응그룹) 참석(9월)
4분기	❖ NOWPAP 국가방제 책임기관 간 회의 참석(10월) ❖ 해경-ITOPF 합동 방제전문가 교육과정 실시(11월) ❖ 한-일 방제정책 교류회의(12월)

정책	해양환경재난 대비 방제기술 · 인프라 고도화	방제기획
	[과제목표] 다목적 방제함정 현장 배치 ('22년) 2척 → ('23년) 5척	

□ 추진 배경

- 복잡·다양한 해양 환경 재난*에 대응 가능한 방제함정·장비를 확충하고, R&D 사업을 통해 차세대 방제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방제역량·기술 축적

* 친환경선박은 가스기반 연료를 주로 사용, 화재·폭발·해양오염 및 유독가스 발생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방제 장비·기술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 예산 확보 추진

* ❶ 화학방제함 추가확보, ❷ 민간방제단체 지원, ❸ 필수 방제장비 확보 등

- 소화·예인 등 사고 대응 기능을 강화한 다목적 방제함정 건조* 및 배치**

* 노후 대체 LNG 방제정 건조 추진(여수(2년차), 사천(1년차))

** '23년 신규 LNG 방제함정 3척 현장 배치(울산, 부산, 창원)

- 광역방제지원센터 전면적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비축자원 관리

* 전국 광역방제지원센터 준공(대산('09년), 광양('09년), 울산('11년) 후 10년 이상 경과

- R&D 사업* 성과물 현장 적용 및 신규 R&D 발굴 등 투자 지속 확대

* ㄱ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 기술개발('23~'27년, 115억)

ㄴ 웨어러블 기반 해상화재·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22~'25년, 205억)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3년도 방제자원 확보·재배치 계획 수립(1월) ❖ 다목적 방제함정 확보 및 신규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반영 추진(2월~)
2분기	❖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 기술개발' R&D 사업 추진(4월) ❖ 친환경 LNG방제함 인수 준비(6월)
3분기	❖ 광역방제지원센터 등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8월)
4분기	❖ 친환경 LNG방제함 3척 현장 배치 완료(11월) ❖ 신규 R&D 사업 발굴(연중)

역점	국가 주도 해양오염 재난대응체계 확립	기동방제
	[과제목표] 재난관리 부처 간 대응체계 점검 ('23년) 2회 이상(신규지표)	

□ 추진배경

- 재난형 오염사고시 위기대응체계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민간 간 역할 및 임무 명확화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가방제시스템 정비로 관계부처(위기대응기구*)간 유기적 대응체계 확립
 - * 중대본(행안부)-중수본(해수부)-방대본(해경청)간 도상훈련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방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 위기경보 수준 판단기준 및 위기대응기구 설치기준 구체화 등(행안부-해수부 협의)
- 항만 등 위험지역의 화학사고 사각지대 협업체계 구축
 - * 재난대응부처 공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행안부, 소방청 등)
- 복합해양사고 고위험 해역(울산, 여수광양항 등)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정착
 - * 복합사고대응 자원 확충(소화약제, 항만예선) 및 합동 대응 훈련 실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재난관리 관계부처 간 대응체계 점검 도상훈련(3월)
2분기	❖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안 협의 및 개정(6월)
3분기	❖ 지역긴급방제 실행계획 개정(9월)
	❖ 민·관 공동협의체 대상 복합해양사고 대응 교육 및 합동훈련(9월)
4분기	❖ 재난대응부처 공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10월)
	❖ 소화약제 및 항만예선 자원 확충(12월)

정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현장방제 역량 제고	기동방제
	[과제목표] 해양오염방제 조치율 (5년 평균) 81.5% → ('23년) 80% 이상	

□ 추진배경

- 복잡·다양하게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제 전문성 강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실제 사고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현장상황을 고려한 훈련 실시
 - * (가상상황) 사고유형(위험물컨테이너 LNG추진선 화재폭발 등) 및 사고해역(묘박지 SPM 등) 다각화
 - * (훈련강화) HNS훈련(연 2회 3개서 → 5개서), 배출방지훈련(8개서 → 전국서) 확대
 - * (재난통신망) 관계기관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통신체계 확립
- 한·중·일 국제합동훈련 개최로 인접국가 간 방제협력체계 강화
 - * 참가국가 간 방제체계, 방제기술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마련
- 사고현장 대응요원 능력 평가를 위한 전국 경진대회 실시
 - * (경진대회 3종) ❶ HNS 방제능력 ❷ 긴급구난 ❸ 사고대응(도상)
- 선박 구난작업(침몰선 유류이적 등) 해양오염방지대책 표준안 마련
 - * 구난작업 신고서(방제분야) 표준안 제작, 작업자의 오염방지대책 및 이행 실태 점검
- 해안방제기술지원 컨설팅 및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활성화
 - * (컨설팅) 퇴직공무원 활용, 지자체·해양자율방제대 대상 전문방제기술 지원
 - * (해양자율방제대) 간담회, 우수대원 포상, 핸드북 제작·배부 등 지원 확대
- 지자체 등의 해안방제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해상, 해안방제 관계기관 간 역할·책임 확립, 지자체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방제대책본부운영훈련(3월), 구난작업신고서 방제분야 작성 표준안(3월)
2분기	❖ 해양오염사고 대응 온라인 경진대회 (4월) ❖ HNS 방제훈련, 해상방제훈련, 해안방제훈련(5월~10월)
3분기	❖ 한·중·일 합동방제훈련 실시(7월)
4분기	❖ 해양오염 긴급구난 경진대회 (10월) ❖ HNS 방제능력 경진대회(11월)

정책	복합 해양오염사고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기동방제
	[과제목표] 위험해역 사고대응 장비·자재 확보율 ('22년) 86% → ('23년) 92%	

□ 추진배경

- 위험화물 운송량 증가에 따라 선박 화재·폭발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발생 증가 예상
 - * 위험유해물질 해상물동량 '17년 155백만톤 → '21년 182백만톤으로 증가(17.4% 증가)
- 복합 해양사고로 오염물질 유출시 유해 성분 및 화재·폭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구난 조치 등 사고 대응 강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민·관 협업 고위험 해역 해상화학사고 대응장비·자재 보강
 - * (해경) 내알콜포(40톤) 등 장비·자재 10종 확보 (민간) 항만예선, 소화약제 확보
- 사고 유형별 맞춤형 교육으로 사고대응 역량 강화
 - * (사고선종) 컨테이너선, LNG연료추진선 (사고유형) 비상투묘, 비상조타, 화재대응 등
- 긴급구난 민간업체 대응능력 사전 파악 및 정보 제공
 - * 사고 시 방제의무자에게 동원 가능업체 대응장비(파공봉쇄, 선체인양 등) 현황 제공
- 해상화학사고 관련 전문가 실무협의체 확대(5개 분야 → 6개 분야)
 - * (외부전문가 확대) 위험물컨테이너, LNG 연료추진선 전문가 추가
- 위험물 컨테이너 물질정보 신속파악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 * 위험물컨테이너 반입시 특수화물적부도 및 위험물목록을 Port-MIS로 사전 제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위험물컨테이너 및 LNG 연료추진선 분야 전문가 실무협의체 추가 구성(2월)
2분기	❖ 민간 긴급구난 방제세력 대응능력 사전 파악 및 정보 제공(4월)
3분기	❖ 해경서 별 HNS 사고 대응 장비·자재 구매·배치(8월)
	❖ 사고선박 비상상황 대응조치 및 해상화학사고 대응 위탁 전문교육 추진(9월)
4분기	❖ 위험물컨테이너 반입 신고 제도 개선(12월)

정책	한국형 방제시스템 고도화	기동방제
	[과제목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신규 정책 이행 ('23년) 5회 이상(신규지표)	

□ 추진배경

- 블루카본 보호 등 국내 해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제시스템 구축
- 다양한 변수가 있는 해양 특수성에 맞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대응 할 수 있도록 방제대응체계를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대한 평가 환류 시스템 마련
 - * (대비) 방제훈련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등 훈련 평가 워크숍 개최
 - * (대응) 대규모 또는 사회적 이슈 오염사고 방제조치 결과 평가·공유 회의
- 오염사고 현장 방제작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실행력 확보
 - * (외부) 민간 방제세력 안전보건관리 이행체계 마련(해경청-공단-방제조합)
 - * (내부) 해양오염 방제훈련 가이드북(매뉴얼) 개정, 훈련 현장 안전대책 마련
- 해양환경 전문가와 최신 방제정책 등 정보 교류 네트워크 정례화
 - *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방제 포럼 개최(관계기관, 공단, 보험사, 협회 등)
- 해양오염방제 콘텐츠 개발, 방제정보 공유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 방제체계, 방제훈련 동영상 및 방제기술 등 외국어 제작,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 * 블루카본(갯벌, 염습지 등) 정보 방제시스템 지속 반영, 오염사고시 활용
- R&D 성과물 실증으로 신 방제기술 적용, 기술중심의 과학적 방제 기반 조성
 - * 긴급구난 의사결정지원 기술개발 등 3개 과제 종료('23년), 현장 실증 추진

R&D 과제	성과물 현장 활용 방안
① 긴급구난 의사결정지원 기술	▶ 선체 인양력 등 과학적 계산, 최적의 구난결정 의사지원 사고초기 수중 유류 이적 장비 활용, 기름유출 최소화 오염정보 등 자동표출 확산예측, 방제전략 수립 지원
② 수중 유류 이적 기술	
③ 오염정보 자동생성·표출기술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해양오염방제 콘텐츠 개발 학습단 구성 및 계획 수립(3월)
2분기	❖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방제 포럼 개최(6월)
3분기	❖ 민간 방제세력 중대재해예방 공동 안전관리체계 마련(9월)
4분기	❖ 해양오염 방제훈련 워크숍 개최(12월)
연중	❖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 평가·공유 회의 ❖ R&D성과물 실제 사고시 현장 활용

역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오염예방
	[과제목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율 ('22년) 717척 → ('23년) 800척(12%↑)	

□ 추진배경

- 해수부 항만지역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25년까지 60% 감축)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항만사업장 관리 강화 추진
 - * '17년 7,958톤 → '25년 3,165톤(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21.1월)
-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2.12. ~ '23.3)에 따른 선박·항만 미세먼지 저감 방안 이행 철저 요청(해양수산부)
 -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준수 점검, 비산먼지 억제설비 현장점검 강화 등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연료유 점검목표 관리제 추진 등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준수 여부 중점점검('25년까지 선박 출입검사 대비(연 2,400척)의 50% 이상)
 - * ('22년) 600척 → ('23년) 800척 → ('24년) 1,000척 → ('25년) 1,200척
- 휴대용 황분석기 추가 확보(5대)를 통한 현장점검 역량 강화
 - * 배출규제해역 관할서(부산, 울산, 여수, 인천, 평택) 추가 배치('22년 20대→'23년 25대)
- 항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점검대상 하역시설 확대 및 중점점검
 - * 미등록 하역시설에 대한 해양시설 등록 유도로 사업자의 책임관리 강화
 - * 시멘트, 석탄 등 화물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해상탈락 등 중점점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중점점검(1~3월)
2분기	❖ 휴대용 황분석기 구입(5대), 배출규제해역 관할 5개 해경서 보급(5월)
	❖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병행 하역시설 미세먼지 억제설비 점검(4~6월)
4분기	❖ 제5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연료유 점검 및 홍보(12월)
연 중	❖ 선박 출입검사 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지속 점검

정책	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선박·시설 중점관리	오염예방
	[과제목표] 부주의 오염 사고율 ('22년) 41.5% → ('23년) 40%	

□ 추진배경

- 최근 안전대책 미비에 따른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고위험 선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오염 사전예방 중심의 선박·해양시설 점검 및 감시 추진
 - * 점검목표 3,820회(선박·시설 3,245, 해양환경관리업 71, 무인비행기 감시 504)
- 300kℓ 이상 기름 등 저장시설 및 대규모 하역시설 집중안전점검
 - * '22년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이행(141개소 304건) 여부 지속 관리
-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점검·단속
 - * 미 FDA 현장 실사 대비 지정해역 내 기름,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투기 단속
- 방제·유창청소업 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미이행 선박 중점 관리
 - * 단일선체 유조선(27척) 이중선체변경 여부 등 유조선 등록기준 준수 확인
- 국내 4대 정유사(기름 등 저장시설)간 해양오염예방 협력 강화
 - * 해양오염사고 예방 우수사례 및 안전관리 현황 등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4대 정유사(기름 등 저장시설) 해양오염예방 간담회(3월)
2분기	❖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집중안전점검(4~6월)
3분기	❖ 방제·유창청소업 등록 유조선 중점 점검(9~10월)
4분기	❖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점검·단속(11~12월)
연 중	❖ 선박·시설 등 지도점검(3,820회) 및 해양오염예방 감시(순찰)

정책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예방활동 추진	오염예방
	[과제목표] 해양오염예방 순찰활동 (3년 평균) 7,416회 → ('23년) 7,787회(5%↑)	

□ 추진배경

-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업무를 추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어선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및 어선 폐유 수거체계 개선
 - * 윤활유 용기 실명제 활성화, 폐유 수거율 분석 등을 통한 수거 확대 추진
 - * 오염물질 적법처리 캠페인, 간담회 개최 및 퇴직공무원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장기계류선박, 해체선박 등 잠재적 해양오염 위험요소 관리
 - * 장기계류선박 관리카드 현행화, 잔존유 제거 및 정기순찰 등 중점관리
 - * 선박해체 업무처리 절차서 개선 등 선박해체 시 오염예방관리 체계 정비
- 해양환경감시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 오염방지설비 등 선내 주요장비 이해 및 점검방법에 대한 민간 위탁교육
 - * 선박 전자기록부 제도 신설('22.10월)에 따른 관련 규정 등 교육
- 무인비행기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 조종자 전문 교육·훈련 실시, 무인비행기 중장기 운용 계획 수립
 - * 파출소, 해양환경공단 등과 드론을 활용한 해양환경감시 협력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장기계류선박 실태조사·평가(2월) ❖ 어선 폐유수거 체계 관리개선(3~12월)
3분기	❖ 해양환경감시원 전문교육(9월)
4분기	❖ 선박해체 업무처리 절차서 개선(10월)
연 중	❖ 조종자 전문 교육·훈련 실시 등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환경 예방관리정책 이행	오염예방
	[과제목표] 해양쓰레기 수거량 ('22년) 562톤 → ('23년) 590톤(5% ↑)	

□ 추진배경

- 해양쓰레기 기인 선박 사고*로 해양오염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함에 따라 해양쓰레기 제로화 등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가 선박 프로펠러에 감기는 사고 연평균 500여건 발생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지속가능한 예방정책 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콘퍼런스 개최
 - * 예방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전문가 제언 등 해양오염 예방 발전 방안 모색
- 자원순환 프로젝트“우생순 캠페인”확대 추진('22년 제주→'23년 지방청별 1곳 이상)
 - * 우생순 캠페인: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해수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22.12월) 내 협업과제)
- 해양쓰레기 제로화 캠페인 국민 참여 및 민·관 협업 홍보 확대
 - * NGO 중심의 명예감시원 등 시민사회와 연계한 해양쓰레기 저감 추진
 - * 포스코건설과 협업 「사랑海 바다SEA」 캠페인 및 다중시설 활용 오염예방 홍보
- 케미컬 등 오염물질 예방관리 및 방제자재·약제 검정 규제개선 추진
 - * 선박대선박 화물이송계획의 관리대상 물질에 기름 외 케미컬, 액화가스 등 추가
 - * 방제자재·약제 검정 폐지 등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우생순 캠페인' 확대 추진(3월)
2분기	❖ 어선 교육·홍보 자료 제작(5월)
	❖ 해양환경 보전 콘퍼런스 개최(6월)
3분기	❖ 다중시설 활용 오염예방 홍보(7월)
연 중	❖ 해양쓰레기 제로화 캠페인(사랑海 바다SEA 포함)

장비기술국

정책	임무환경에 적합한 함정, 항공기 적기 도입	장비기획
	[과제목표] 신규사업(함정 27척, 헬기 3대) 계약 및 함정 31척, 대형헬기 1대 적기 배치	

[예산] '23년 함정건조 1,742억원, 항공기도입 654억원

□ 추진배경

- 미래 해양 임무환경에 적합한 장비 도입으로 현장임무 역량 강화
- 함정, 항공기 등 현장대응 세력 적기 배치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 세부내용

- **(함정)** 서해전력증강 3000톤 1척, 200톤 경비정 4척 등 27척* 발주 및 200톤 경비정 6척, 형사기동정 2척 등 31척* 준공

* **27척 발주** 경비함정 5척, 특수정 8척, 기타 14척 (구조대 구조정 2, 고속단정 10, 유류바지 2)

31척 준공 경비함정 6척, 특수정 11척, 기타 14척 (특공대 특수기동정 2, 고속단정 12)

- **(항공기)** 대형 및 중형 헬기(카모프대체) 3대 발주, 대형헬기 1대 준공

< '23년 함정·항공기 사업 현황 >

구분	계	함정사업	계	항공사업
계	73	신규 27(순증4,대체23), 준공 31, 계속 15	7	신규 3(순증1,대체2) 준공 1, 계속 3
신규 계약	27	경비함정 : 3000톤 1, 200톤 4, 특수정 : 방제함 1, 형기정 2, 연안구조정 5 기타 : 구조대 구조정 2, 고속단정 10, 유류바지 2	3	대형헬기 1 중형헬기 2
준공	31	경비함정 : 200톤 6, 특수정 : 예인정 1, 방제함 3, 형기정 2, 연안구조정 5 기타 : 고속단정 12, 특공대 특수기동정 2	1	대형헬기 1
계속	15	경비함정 : 3000톤 5, 500톤 1, 200톤 2, 특수정 : 형기정 2, 예인정 4, 방제함 1	3	중형헬기 3

□ 추진일정

구분	주요 내용
1~2분기	❖ 3000톤 기본설계 의뢰(2월) / 200톤 등 19척 건조계약의뢰(6월) / 헬기 3대 계약의뢰 (5월)
3~4분기	❖ 3000톤 설계완료, 건조계획수립(10월) / 200톤 등 31척 준공(12월) ❖ 헬기 3대 제안서 평가·계약체결(9월) / 대형헬기 1대 인수(10월)
연중	❖ 현장 감독관 공정회의 (현장점검, 화상회의 병행) 및 운용자 의견수렴

정책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기술역량 제고	장비기획
	[과제목표] 함정발전컨퍼런스, 설계공모전, 해경-해군 협업회의 개최 추진	

[예산] '23년 함정 발전 컨퍼런스 · 설계 공모전 0.4억원

□ 추진배경

- 첨단장비 기술정보 습득을 통해 장비도입시 미래기술 트렌드 반영
- 우리청 신형함정 설계시 국민참여 확대로 정책 이해도 증진

□ 세부내용

- 미래 기술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民·官 교류협력 추진

구 분	일 자	주 요 내 용
함정설계 공모전	4 ~ 10월	• 전국 조선공학 전공 대학생 대상 소통강화, 실무 학습기회 제공 및 함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해경·해군 장비기술 (군수)협업회의	6, 12월	• 兩 기관 장비분야 협력과제 발굴 등 실효성 강화 • 정례회의 이외 주제별 실무 회의체 운영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	10월	• 産·學·研 전문가 참여, 신장비·기술관련 정책방향 토론 및 연구활동 정례화
장비기술 아카데미	11월	• 첨단장비, 친환경기술 등 기술동향 및 연구 개발 현황 관련 전문가를 초빙, 강연회 개최
'24 국제해양안전대전 기본계획 수립	10 ~ 12월	• '24년 국제해양대전(제7회) 개최관련 참가업체 대상 홍보, 컨퍼런스 유치 등 사전 준비
유관기관 업무협력	수시	• KR, KOMERI 등 MOU 체결기관과 업무협력 및 실무회의 정례화, 연구사업 등 발굴

- 「함정 설계·기술 자문단」 활성화로 新 기술·장비 정보 획득

* 구성 조선·장비분야 전문가 54명 / 추진 함정설계건조시 심의 참여, 기술자문(수시)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함정발전 컨퍼런스 계획수립(3월) / 설계공모전 참가접수(4월) / 군수협업회의(6월)
3~4분기	❖ 함정발전 컨퍼런스 개최(9월) / 설계공모전 응모작품 심사·시상(10~11월) ❖ 장비아카데미(11월) / 군수협업회의(12월) / '24 국제해양·안전대전 기본계획 수립(12월)
연중	❖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준비 및 전문가 및 유관기관 업무회의 수시 개최

정책	효율적 장비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장비기획
	[과제목표] 장비법 및 관련규칙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장비 도입 · 관리방안 마련	

[법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추진배경

- 「해양경찰장비법」 시행에 따른 개정 · 보완사항 검토 필요
- 전략자산 도입소요 결정과정에 대한 정책 · 비전과의 연계성 강화

□ 세부내용

- **(법률 개정)** 「해양경찰장비법」 및 하위법령 시행('22.4월) 관련, 장비 도입 ·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완사항 발굴, 개정 추진

〈 '23년 해양경찰장비법 주요 개정방향 〉

✓ (장비도입) 중장기 장비도입 목표(소요)에 대한 검토, 심의절차 강화 근거 마련

* (현) 운용부서 자체심의 후 소요제기 → (변경) 소요확정 전 총괄 소요심의(차장주재) 절차 추가

- **(행정규칙 개정)** 「해양경찰장비법」 개정관련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사항을 관련 행정규칙(장비도입 업무규칙 등)에 검토, 반영
- **(장비도입 시행계획 수립)** '22년도 수립된 「제1차('23~'27년) 장비 도입 · 관리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5대 분야 19개 실천과제(장비도입 · 관리, 성능개선, 인력양성, 시설확충 등) 세부계획 수립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법령 개정사항 의견수렴 (3월)
2분기	❖ 법령 개정계획(안) 수립(5월)
3분기	❖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7월), 행정규칙 개정(9월)
4분기	❖ '24년 장비도입·관리 시행계획서 작성, 실무협의, 위원회 개최 (~12월)
연중	❖ 해양경찰장비법 개정 대응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 추진

역점	함정안전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정비보급체계 강화	장비관리
	[과제목표] 해경장비법 등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예산] 함정정비지원팀 1.45억원, 필수 예비품 구입비 3.8억원

[법령]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개정(필요시), 해경장비법(개정 추진)

□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정착화 등 추진

○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시행 및 매뉴얼 완성

- (소통·환류) 규칙 시행 초기 정착화를 위한 현장확인,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실시, 개선사항 적극발굴 → 제도의 안정적 정착유도
* 「함정 장비 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규칙」 시행('23년 1월 ~)
- (매뉴얼 완성) 함정 탑재장비 125종 중 62종의 작동 매뉴얼(표준, 현장) 작성으로 주요 탑재장비 매뉴얼 완성 및 고도화 준비 추진
- (법적근거 마련 추진) 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령(장비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련규정 신설(개정) 등 검토

○ 함정정비지원팀 정착화 및 강화

- (직제전환) 총 정원 44명 중 경찰관 12명 일반직으로 직종전환 추진
- (체계확립)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규칙 신설,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예산확보) 전용공구, 차량, 여비 등 운영예산 확보 추진

□ 예비품 확보 및 관리체계 고도화로 상시 정비지원역량 강화

○ (중요 예비품 확보) 예비품 관리규칙에 따른 체계적 확보

- MTU 엔진 등 중요장비 예비품 우선 구매(편성예산 3.8억원내)

○ (관리체계 개선) 예비품 확보근거 및 관리시스템 개선

- 「해경장비법」상 예비품 확보규정 신설 → 확보근거의 법제화
- 現 관리시스템상 재고(예비품) 관리현황 점검·분석(개선방안 마련)
* 통합장비관리시스템내 관리메뉴 신규생성, 수정·보완 등 추진
⇒ 중요 예비품의 신속·적기활용을 위한 실시간 현황(종류, 수량 등) 모니터링이 가능한 별도 매뉴생성으로 활용도 제고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4분기	❖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정착화, 함정정비지원팀 강화(1~12월)
1~4분기	❖ 예비품 확보계획 수립(1월), 구매(2~6월), 규정 법제화 및 관리시스템 개선(4~12월)

정책	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노후 공용차량 조기교체	장비관리
	[과제목표] '23년 노후차량 조기교체 및 '24년 100대 교체예산 52억 확보	

□ 노후 공용차량 조기교체 목표

- (현 황) 공용차량 510대 중 내용연수(8년) 경과차량 209대(41.8%)

* 노후교체 : '23년 40대 ⇨ '24년 100대 ⇨ '25년 100대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노후차량 대수	169대(33%)	215대(42%)	225대(43%)	209대(41%)
교체대수(비율)	20대(11%)	19대(8.8%)	27대(12%)	40대(19%)
평균 사용연수	15.5년	14.2년	13.2년	11.6년

- (교체목표) 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노후차량 저공해차 100% 교체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교체대수	100대-52억	100대-55억	50대-29억	50대-31억

□ 전기 순찰차 전면교체 및 도서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 '23년 노후순찰차 26대 모두 전기 순찰차로 조기 교체 및 연차별 확대
 - 파출장소 충전기기 보급으로 도서지역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 제공
 - * 공공기관 주도, 충전인프라 부족한 도서·해안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공유

□ 해양에서 운용되는 순찰차 등 내용연수 단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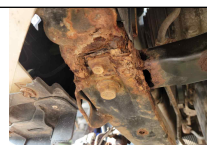
- 해수접촉, 염분부식 등으로 노후화 빠른 해양경찰 공용차량 내용연수 2년 단축(8년→6년) 협의 및 내용연수 고시 개정
 - * '20년 조달청 협의로 승용 공용차량 내용연수 1년 단축(9년→8년) 완료



월파시 해안순찰



해상(갯벌) 구조활동



8년 사용, 하부부식 심각



7년 사용, 조기폐차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 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해수 접촉이 많은 해상구조 차량은 내용연수를 2년 단축할 수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2~4분기	❖ 해양구조(순찰) 차량 내용연수 단축 조정 조달협의 / 내용연수 고시 개정
매월	❖ 신규 공용차량 조기 확보 노력, 기재부 협의 등 예산확보 노력

역점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한 항공기 감시장비 개선 추진	항공
	[과제목표] 예산 확보 ('23년) 10.1억 → ('24년) 90.9억	

[예산] '23년 10.1억(위성통신망구축 6.7억, 레이더주처리장치 교체 1.9억, 열상장비 업그레이드 1.5억)

□ 추진배경

- 전파통신 한계로 인해 광역순찰 중 획득한 항공정보(레이다 탐지, AIS)의 육상 상황실 및 함정 등 해상경비세력 간 공유 제한
- 현장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위성통신망 구축 및 장비개선 필요

□ 세부내용

- (위성통신망 구축) 고정익 항공기(CN-235/1대)에 대하여 2년차 사업으로 항공기 탑재용 위성통신장비 설치 추진
 - *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정지궤도 복합통신위성) 사업과 연계, 장비 확장성 확보
 - ** 해외사례 C-295(CN-235 유사기종) 탑재용 개발, 인증 획득
- (레이더 주처리 장치 교체) 노후 시스템 교체를 통해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 및 유가치 정보(AIS)의 융합 기능 확보(4대)

구분	개 선 전	개 선 후
전시화면		
프로그램	▶ R/D 프로그램 'A4C' → R/D 영상 및 FLIR 전시기능	▶ R/D 프로그램 'MSDC' → AIS(자동선박식별장치) 전시기능 추가

- (최신 FLIR 장비 도입) 탐지·식별장비 성능 개선으로 야간·원거리 해상 감시능력 강화 및 예비품 확보로 장비 가동률 향상(1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위성안테나 설치 관련 항공기 제작사 업무협의
2분기	❖ 감항인증 신청(→방위사업청) 및 위성안테나 설치 계약 추진
3·4분기	❖ 레이더 주처리장치·열영상장비 계약 추진
연중	❖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 대응

정책	고난이도 임무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항공
	[과제목표] 야간 이·착함 등 고난이도 임무능력 확보(3/4분기) 및 관리체계 마련	

□ 추진배경

- 야간 고난이도 임무 중 반복되는 사고방지를 위해 철저한 훈련·준비 요구
- 해상순찰-교육훈련의 균형있는 운항관리*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
 - * 전체 운항의 30%를 교육훈련 목적으로 편성

□ 세부내용

- **(관리기준 정립)** ❶중복 내용 지침서 재·개정 및 활용제도 보완, ❷항공 승무원 교육·훈련 요구기준 개선 및 관리지침 마련
- **(임무역량 확보)** 야간 이·착함 훈련 강화로 고난이도 임무능력 확보

▣ 단계적 야간 이·착함 훈련 확대 1분기 ~ 지속 추진

- (본청) 교관조종사 소집, 표준절차 교육 및 숙달 훈련(1분기)
- (지방청) 단계적 훈련계획 수립, 항공대 주관 시행(2~3분기)

▣ 주기적인 교육·훈련으로 역량유지 및 노하우 축적 연중

- (절차숙달) 시뮬레이터 훈련시 필수 숙달종목 지정
- (기획중대) 해군 야간 이·착함 훈련(YHE 등)시 합동훈련 추진 등

▣ 함정-항공기 합동성 강화 추진 1분기

- (제도개선) 대형함정 의무적 훈련 참여토록『함정훈련교범』개정·시행
- (관리지원)『대형함정 헬기지원시설 운용자』전문과정 개설(교육원)

- **(지속적 관리)** ❶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우수직원 선발제도* 도입, ❷항공교육·훈련의 총괄 관리조직 신설 추진(중기)

* TOP TEAM(최우수 팀), 최우수조종사 등 선발,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교범 및 지침서 개정 및 평가제도 수립(2~5월) ❖ 교관조종사 대상 이·착함 표준절차 교육 및 훈련(3월/해군협조)
2분기	❖ 각 항공대별 조종사 숙달훈련(4~6월)
매월	❖ 각 지방청 단위 교육훈련 분석 및 월간운항 환류 조치

정책	항공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 관리 여건 조성	항공
	[과제목표] 전문경력관 인력충원(3분기), 항공인력 정원·직급상향 반영	

□ 추진배경

- 회전익 조종사의 외부충원 의존으로 불안정한 인력수급 개선 시급
-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휘 · 관리자의 직급은 관리 규모 및 우리청(함정 등) · 타부처에 비해 낮게 편성되어 개선 필요

* 최근 10년간 항공인력 : 정원 213명(12년) → 530명(22년) / 조종정비 → 전담구조구급(직별 다변화)

□ 세부내용

- (전문인력 확보) 전문경력관(조종사 가군)의 최적 인력운영 방안 마련 및 항공정비대의 전문직위(가,나군) 정원 반영
 - * 항공정비 분야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직급 확립(예: 소방·산림청, 정비창 등)
-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항공인력의 수요 · 공급 데이터를 분석, 인력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교육기관(시뮬레이터) 설립 타당성 검토
 - * 시뮬레이터의 타기관 공동 활용 가능성 포함
- (항공단 · 대 조직 개선) 지방청 항공단·대장의 역할과 책임 규모에 적합한 직급 및 운항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선
 - * 단장(경정→총경)·대장(경감→경정) 직급 상향, 지방청항공단 운항담당 편성
- (수당 신설) 『야간 해상출동 가산금』 반영을 통해 고위험 · 고난이도 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채용 전문경력관(조종사 가군) 선발기준 및 인력운영 방안 마련(1월) ❖ 정비대 전문직위, 항공단·대장 직급 상향, 운항담당 정원 요청(2~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경력관(조종사 가군) 선발 및 채용시험 지원(3~7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경력관(조종사 가군) 배치 방안 마련 및 인사발령(8월)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및 수당 반영을 위한 적극 대응

정책	신뢰받는 항공정비관리 시스템 추진	항공
	[과제목표] 항공기 가동률 ('22년) 78% → ('23년)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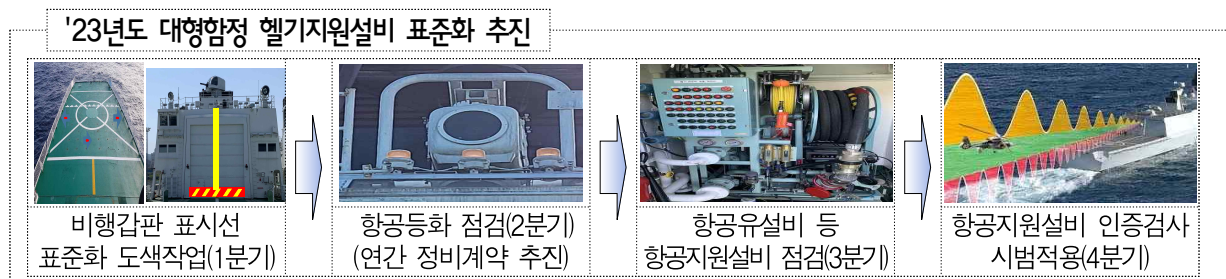
□ 추진배경

- 항공기 및 대형함정 세력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감항성 유지관리 필요
- 우수 정비인력 외부 이직방지 및 일선항공대 정비사 사기진작
- 맞춤형 중정비 노하우 습득 및 정비품질 향상으로 안정적인 정비 관리

□ 세부내용

- **(책임 관리)** 정비품질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책임관리체계 도입

- * 항공기 및 대형함정 헬기지원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감항인증업무 필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항인증 인력(중부청 회전익정비대) 확보**



- ** 항공대 및 대형함정 항공유 저장시설(유조차량 등 40개소)에 대한 안정적인 항공유 품질관리를 위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 추진**

- **(자긍심 고취)** 항공정비사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 *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항공정비마스터상(Aviation Master Awards)** 추진(직급상향 등)
- ** 우수인력 확보 및 정비품질 향상을 위한 채용직급 상향 추진

- **(정비품질 유지)** AS9110(항공품질관리시스템) 기반 정비역량 강화

- * 정비·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비 신속성 및 신뢰성 확보
- ** 자체양성 검사관, 표준 정립 위한 **제작사 및 국외교관 초빙교육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감항인증팀 신설 소요서 제출(1월)
2분기	❖ 항공유 시험기관 인정 추진계획 수립(4월)
3분기	❖ 제작사 및 국외교관 초빙교육 계획 수립 (7월)
4분기	❖ 항공마스터상 시상계획 수립(10월)

역점	노후 안테나 등 GMDSS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	정보통신
	[과제목표] ('23년) GMDSS 기반시설 개선 연구용역 → ('24 ~ 26년) 설계 및 개선사업	

[예산]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사업 관련 사전 연구용역 80백만원(일반연구비)

- **전문기관 사전 연구용역으로 사업 추진방향 및 현대화 모델 정립**
 - 국제기구 기준 및 新 기술을 적용한 GMDSS 현대화 모델 정립
 - 전파환경분석 및 실시설계 기반조성, 시스템 개선방향 설정 등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송수신소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환경 양호 대체부지 확보**
 - 주변 고층 건물로 인한 음영구역 발생, 인근 공원 조성, 출입로 점·사용에 대한 민원발생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분석 필요
 - * 송수신소 부근 도심화, 공원화로 전파환경 불량(인천, 부산, 동해 등 부지 이전 필요)
- **20년 이상 장기사용 노후 송수신 안테나, 철탑 등 기반시설 교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개선 및 시설물 안전 강화
 - * 철탑 지지선 노출/계단·등받이 울 등 추락 방지시설 미비, 안전펜스 미설치 등
 - 장기 사용에 따른 철탑 및 부속품 부식으로 위험도 증가, 송신기 출력저하 등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GMDSS 현대화 사업 추진
 - * 해양안전통신국 송·수신소(10개소) 및 해상교통문자방송시스템 송신소(2개소)
 - * 부산수신소 1972년, 동해송신소 2004년 준공, 그 외 대부분 80년~90년대 준공

〈 **소요 예산** 〉

구 분(단위: 백만원)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11,182	80	600	2,657	2,657	5,188
연구 용역	80	80	-	-	-	-
설계 용역	600	-	600	-	-	-
노후 안테나 교체	7,970	-	-	2,657	2,657	2,656
시스템 고도화	2,532	-	-	-	-	2,532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정책연구용역 사업 계획 준비 및 정책연구용역 사업 계약 의뢰(3월)
4분기	❖ 연구용역 준공 및 최종보고회(10월)

정책	IoT 기반 스마트 함정 플랫폼 구축	정보통신
	[과제목표] 함정 스마트체계화 ('23년) 시범구축(대형1척) → (~'27년) 초 함정	

[예산] 사물인터넷(IoT) 기반 함정 스마트워치형 조난자위치발신시스템 교체 1,839백만원

□ IoT 기반 스마트함정 플랫폼 시범 도입

- 3천톤급 1척에 IoT시스템 및 무선 디바이스(스마트워치 및 IoT센서) 등 최신 기술 및 재난망 기반 스마트함정 플랫폼 시범 구축

		
승조원 위치측위	당직순찰 자동화	시스템 통합관제
위치측위 플랫폼	업무자동화 플랫폼	통합관제 플랫폼

- '27년까지 중대형 경비함정에 스마트 함정 플랫폼 확대 구축

* '23(시범사업 1척) → '24(서해청) → '25(중부청) → '26(남해·제주청) → '27(동해청)

□ 소형 및 특수정 스마트워치 보급을 통한 조난자 위치발신체계 개선

- 공간이 협소한 소형 및 특수정에 적합한 기능·성능(착용/이용 편의, 통신거리, 신호수신율, 배터리시간 등)이 우수한 제품 도입 추진
- 승조원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단계별 위치측위(①함내 위치측위→ ②함 이탈 감지 → ③실시간 조난위치 발신) 기능 구현 체계 개선

* 스마트워치 도입 : '23(소형정 110척) → '24(특수정 166척)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계약 의뢰(2월)
4분기	❖ 물품 납품, 설치, 준공검사 및 사업종료(11월)

정책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 강화	정보통신
	[과제목표]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22년) 78점 → ('23년) 90점 이상	

[법령] 내실 있는 정보화 사업 관리를 위해 「정보화 사업정보화 사업 관리규칙」 제정 추진

□ 정보화 사업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화 사업 관리」 규칙 제정

- 정보화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화 사업 추진 체계 정립,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정보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 ✓ (위원 구성) 위원장 포함 1~7명 이상으로 구성(위원장: 지능정보화책임관)
- ✓ (주요 내용) 정보화 정책 및 제도개선,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정보화 사업 조정,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 방안 등

□ 정보화 사업 단계별 추진 내실화 및 전자정부 수준진단 평가 대응 철저

-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 단계별(예산수립, 과업심의 등) 사업 필요성, 추진 여건,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실 강화
- * 정보화 전공 주요 대학 교수, 공공행정기관(5급 상당 이상), 내부
- 현행 정보시스템 활용 및 운영 관리실태 진단·개선으로 운영 내실화

① 정보시스템 사전 컨설팅	② 정보시스템 구조 진단	③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
· 정보시스템별 활용률, 만족도,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개선 등	· 정보자원(CPU, 메모리 등), 운영 프로그램 장애 및 개선 · 주기적 점검 및 개선사항 진단	· 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운영 수준 및 성과 측정 강화 · 측정결과 '시스템 유지, 재개발, 고도화, 폐기' 결정

- 행안주 주관 「전자정부 수준진단」 평가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지표별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 등 평가결과 상향 추진(90점 이상)

* 정보자원관리수준, 단계별 성과관리 이행수준(정보화사업, 운영성과), 중복투자예방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대상 선정(2월) 및 사전 검토(수시) ❖ 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3월)
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정보화사업 예산수립 검토(3~5월) ❖ 정보시스템 구조진단(반기), 사업 및 운영 성과 분석(연중)

역점	안전한 정비창 건설사업을 위한 현장관리 강화	정비창신설
	[과제목표] 공정관리 ('22년) 토목공사 착공 → ('23년) 부지조성, 상가(도크) 시설 제작	

□ 추진배경

- 경비함정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부정비창 착공 관련 행정절차* 완료 및 토목공사 착수 ('22. 11월), 본격적인 현장업무 돌입

* 환경·재해영향평가 심의 및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完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공사감독 강화) 구릉지 밟파, 매립, 블록·케이슨 거치 등 토목공사 공사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감독 업무* 주력

* (주요업무) ① 공정관리, ② 설계기준 시공 점검, ③ 민원,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 결정, ④ 유관기관 협업, ⑤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지도·감독, ⑥ 안전관리 이행 점검 등



- (비상대응 체계 구축) 공사현장 산업·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고강도 민원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상황대응으로 안전사고 피해확산 방지 및 공사 지연·중단 등 예방

- (상가시설) 해군 위탁수리 (상가) 를 자체 수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형 플로팅도크 도입, 기술자문 및 요구사항 반영으로 완성도 높은 시설 제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서부정비창 착공식 (3월)
2분기	❖ 2년차 공정 및 안전관리 중간점검 (6월)
3분기	❖ 1,000톤 이상 대형함정 상가시설 플로팅도크 제작 추진 (9월)
4분기	❖ 사업예산 편성, 2년차 공정 및 성과 평가 (12월)
연중	❖ 공정별 진행사항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 지도·감독

정책	서부정비창 운영인력 및 장비예산 확보	정비창신설
	[과제목표] 운영준비 ('23년) 인력 및 예산확보 → ('24년) 채용·교육, 장비·공구 도입	

□ 추진배경

- 「정비창신설단」을 통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25. 3월 준공 예정, 이에 따라 정비창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공구 등 예산 확보 추진
- * 신규인력 채용·교육 및 장비·공구 도입 기간 감안 '23년 반영, '24년 집행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정원확보) 대형함정 플로팅도크(상가수리) 업무 등 신설 정비창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정별 인적 정비역량 등을 정의하여 소요정원 대응
-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창장 (경무관 또는 3급) 등 255명이 필요하다고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서부정비창 조직도 / '19.8월 〉



- (예산편성) 수리조선 기자재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정비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설비 분석, '24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 추진(약 400억 원 소요)
- * 고압세척기, 공기압축기, 유압펌프, 용접기, 운송장비 등 약 340종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서부정비창 운영인력 소요정원 요구서 작성·제출 (3월)
2분기	❖ 서부정비창 필요장비, 공구·설비 목록 및 예산 산정 (6월)
3분기	❖ 소요정원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대응 (7월)
4분기	❖ 필요장비, 공구·설비 예산 편성을 위한 관계기관 대응 (10월)
연중	❖ 서부정비창 운영인력 및 필요 예산 확보 대응

직속부서

역점	「바로·해(海)플랫폼」을 활용한 내부통제 제도 정착	감사
	[과제목표] 바로·해(海) 고도화 ('22년) 플랫폼 적용 → ('23년) 시스템 구축	

[예산] '23년 「해양경찰 정보화관리」 사업 內 감사운영시스템 구축(453백만원)

[법령] 「해양경찰청 자가진단 운영규칙」 제정

□ 추진배경

- 감사원은 내부통제 관련 기관장의 관심과 책임성 확보를 요구하고 이를 자체감사기구 평가에 반영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세부내용

- (제도 마련) 「해양경찰청 자가진단 운영규칙(가칭)」 제정을 통해 업무에 대한 책무성 강화 계기 마련 및 효율적인 내부통제 기준으로 활용
- 모니터링을 통한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촉구 등 위험관리 강화, 자체감사는 「바로·해(海)」진단을 통해 합법성을 검증하고, 주요정책의 효과성·효율성 검증에 실지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감사체계 전환
- (시스템 구축) 시행착오 없는 무결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 업무모니터링과 효율성 중심의 시의성 있는 주요정책사업 점검으로 조직 안정화 기여('23년 4.5억 원 예산확보)

[구성 예시]

		
로그인 화면	메인화면 구성	자가진단리스트 입력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바로·해(海) 운영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2월), 자가진단 규정 제정(3월)
3분기	❖ 바로·해(海) 운영시스템 준공(8월), 운영시스템 시범운영 실시(9월)

정책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해양경찰 실현	감사
	[과제목표]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을 통한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	

□ 국민 관점, 부패취약 분야 도출·개선으로 종합청렴도 향상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발표 '23년 1월 말)를 심층분석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불공정 직무수행 및 공직자 권한남용 여부, 금품수수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

□ 공직사회 반부패·청렴가치 중요성 지속 증대에 따른 조직개편

-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중심의 '청렴TF'를 '반부패 청렴 TF'로 개편하여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 이외 이해충돌방지 등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상의 ①신고 및 제출 의무(4개), ②제한 및 금지행위(5개)와 반부패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점검 및 조사) 강화

□ 자기주도적인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으로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

- 공직자 스스로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범 등을 총망라*한 내실 있는 교육 추진

* (교육자료) 1. 총론(기본개념), 2. 각론(각종 규범), 3. 부록(감사 및 징계처분 등)

- 뿌리 깊은 반부패·청렴의 내재화를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부패 NO! 청렴 海! 퀴즈, 청렴문화 콘텐츠 공모전, 청렴N 공감날씨 송출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조직개편(반부패 청렴TF) 및 해양경찰 공직기강 확립 방안 교육자료 마련(1월)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분석, 부패취약 분야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2월)
2분기	❖ '23년 반부패·청렴시책 수립(5월)
3분기	❖ 종합청렴도 평가 명부 및 부패실태 자료 등 제출(8월)
연중	❖ 순회(화상 포함) 교육 및 반부패·청렴 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 및 고비난성 비위 근절	감사
	[과제목표] 관행적·조직적·다수인 연루 비위,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체계적 공직 복무관리 및 자정노력 강화로 구시대적 관행 근절

- 항공기 부적정 사용, 대형함정 음주·낙시 등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적 비위와 갑질·성비위 등 고비난성 비위 근절에 역량 집중
- 부서 차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다수인 조사와 징계처분이 필요한 경우 주 대상자는 고비난성 비위에 준해 처벌하고 관련자도 엄단

고비난성 주요비위 + 부서차원 관행비위 발생 주 대상자

"중징계 의결" 요구 원칙 및 "6대 추가 패널티" 부여

- 지방청 점검팀* 구성, 소속 함정·항공기 등 복무점검 사각지대 분기별 불시점검 정례화, 점검결과 본청보고 → 기본업무 충실 유도
 - * (점검팀장) 청문감사담당관 (점검팀원) 청문 2명, 경비 2명 등 실정에 맞게 구성
- 국조실과 유기적인 협조로 시기·테마별 공직기강 점검 내실화
 - * 복무사각지대, 행락철, 해빙기, 명절 전후, VIP 해외순방 등 맞춤형 활동 전개

□ 급격히 변화하는 감찰환경에 따라 감찰조사부터 소송까지 전문화

- 항공기(10인↑), 대형함정(40인↑) 등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관행적 비위는 조사 관련자가 다수이고, 변호사 선임 소청·소송까지 진행
- 급격히 변화하는 감찰환경에 맞춰 부족한 감찰인력 확보, 조사부터 소청·행정소송까지 인적 전문성 및 감찰업무 전문화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023년 해양경찰청 공직복무관리 계획 수립 ※ 3월경 국조실 지침 하달
2분기	❖ 본청 주관 전국 감사·감찰관 역량 강화 순회 교육 등
3분기	❖ 갑질·성 비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
4분기	❖ 공직복무관리 소속기관 실태점검, 빛과 소금 선발 및 포상 등
연중	❖ 취약시기·테마별 공직기강 활동 (인사철, 명절 전후, VIP 해외순방 시기 등)

정책	내·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감사 추진	감사
	[과제목표] 사전에 준비된 핵심 위주의 정책현장 감사 추진	

□ 「안전 취약분야」 등 선제적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 사전 차단

- 종합감사는 「바로·해(海) 플랫폼」을 활용한 자가진단제도 운영으로 일정부분 대체하고, 정책분야 중심의 특정·특별감사에 역량집중
- 특히, 「이태원 참사」 및 「영등포 열차 탈선사고」 등 잇따르는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청 “안전 관리” 분야 테마감사 추진
 - * 지방청 감사인력을 포함한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여 주요사안 감사수행

□ 우리청 자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 그 동안 「바로·해(海)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이행 중에 있으나, 우리청 전반으로 실효성 확보 및 관심도 확대 필요
- 이에, 자체규정 외의 근거로 시행되는 각종 점검(수감)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바로·해(海) 플랫폼」 보완 및 관련 매뉴얼 작성 등 추진

□ 사전컨설팅 감사 다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

- 그 간 사전컨설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정책추진 지원을 위해 유동 정원을 통한 사전컨설팅 전담인력 1명 운용('21. 2.) 중이나,
-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전컨설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관 별 담당분야를 세분화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지원 확대
 - * '20년 사전컨설팅 5건 → '22년 14건으로 사전컨설팅 수요 280% 증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합동 감사반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3월)
2분기	❖ 각 지방청 별 안전 분야 합동감사 시행(4월) ❖ 합동감사 운영 결과보고(6월)
연중	❖ 감사관별 담당분야 사전컨설팅 확대 지원

역점	국민과 함께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연중 기획 홍보		대변인
	[과제 목표]	뜻깊은 해양경찰의 날 더 많은 국민과 함께 (22년) 기획홍보138건 → (23년) 152건 70주년 콘텐츠 온라인 소통 (23년) 댓글·좋아요 1,000회 이상	

□ 추진배경

- 한시적 단발성 홍보에서 더 많은 국민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홍보로 전환, 해양안전·해양환경 등 주요정책 기반의 기획홍보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홍보 전문가 컨설팅 용역과 병행하여 각 부서와 대변인실 협업으로 홍보T/F 구성 및 연중 기획홍보 계획 수립으로 뜻 깊은 창설 70주년을 국민과 함께
- * (주요행사) 각 부서 ↔ 대변인실 및 외부전문가 기획홍보 협업 내용(예시)

(5월) 안전, 방제		(6월) 안전	(7월) 국제	(8월) 구조	(9월) 경비	해양경찰의 날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바다의 날 평화 활동	전국 요트대회	국제 해양치안 기관장 정례회의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구조대회)	단정운용역량 경연대회	70주년 기념, 연간 홍보 종합영상 제작
본청·지방청홍보대사 릴레이 캠페인	해양정화 기네스 도전	70주년 축하 퍼포먼스	해외 기관장 축하인사	민해대원 70인 구조 야기	70주년 축하 퍼포먼스	

- 8·15 광복절 등 해양주권 수호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국민과 공감하고자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해상과 KBS공개홀 이원 방송
- * 해수부, 교육부(동북아역사재단),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울릉군청 등 협업하여 'KBS 열린음악회'를 독도·이어도·백령도 인근해상과 공개홀 등에서 이원 방송
-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가질 수 있는 유튜브, 방송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 정책 추진
- * 관현악단 정기·순회연주회(70회), 해양사고예방·해양안전 국민참여 공모전(이벤트), 한국잡월드·한강PC시험장 러버 야치(7m) 전시, MZ국민기자단 기념일 연재기사 등
- 국민과 함께 해양정화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정화 세계기네스 최초 도전 시도 및 언론 홍보(방송·보도) 통해 뜻 깊은 해양경찰의 날 여론 형성
- * 바다의 날(5월), 국제연안정화의 날(9월)에 전국적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국민과 함께 실시하고, 기네스 인증 결과를 발표하여 해양경찰의 날에 대한 호의적 관심 증가

< 기네스 예시 >

		<p>해양정화활동 최대인원 기네스 인증 도전</p> <p>“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국민과 함께 바다를 구(9)하재”</p> <p>* 유관기관(바다가족 등) 70인씩 참여</p>
---	--	--

- 해양경찰의 날 D-70일 부터 소통형 콘텐츠를 순차적 홍보, 국민과 함께 해양경찰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정책 소통 참여 유도·홍보

〈홍보콘텐츠 제작(안)〉

- ✓ (1탄, 해양경찰 뿌리를 찾아서) 1953년부터 최근까지 해양경찰 퇴직자를 찾아 인터뷰 하며 해경 창설 이념과 발전 모습 등 콘텐츠 2~3편 제작



- 1화 : 1기 해양경찰이 알려주는 해양경찰의 창설 역사
- 2화 : 퇴직자에게 듣는 해양경찰 이야기
- 3화 : 해양경찰의 미래를 보다(해경 출신 교수 등 인터뷰)

- ✓ (2탄, 해양경찰 7인의 히어로를 만나다) 완벽한 임무수행 또는 미담으로 알려진 영웅 7명을 찾아 예능형 인터뷰를 통해 대국민 홍보

- (새내기 영웅) SUV 사고를 목격하고 발빠르게 운전자를 구조한 신임 간부후보생
- (산소같은 영웅) 식당에서 기도가 막힌 남성을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한 순경
- (구조 영웅) 전복된 어선 선저에 통로를 개척하여 고립된 어민을 구조한 구조대 등

- ✓ (3탄, 7월급 색깔 온라인 사진 공모전) 직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70주년 상징하는 일급 색깔 테마로 추진



* 선정 사진은 향후 해양경찰 달력 제작,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일 홍보 컨설팅 정책 연구과제 수요 제출, ❖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홍보 전략 수립 및 타 부서 협업 T/F 구성 운영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청 주요행사 홍보확대 연계지원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70 콘텐츠 제작 및 공유, 를 통한 세계기네스 기록 도전 대국민 홍보 추진

정책	국정과제 대국민 소통 위한 전략적 언론 홍보	대변인
	[과제목표] 미디어 트레이닝 언론기고 및 커버스토리	(‘22년) 1회 → (‘23년) 1회 (‘22년) 6회/2회 → (‘23년) 9회/3회

□ 추진배경

- 우리 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과정을 언론사 및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원활한 정책홍보를 통해 정부정책 성과를 집중 부각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출입기자단과의 원활한 소통 위한 각 국 정책설명회 개최
 - *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언론 이해도를 높이고, '23년 국정과제 추진사항 및 국별 주요 정책을 선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출입기자단과 정례적 소통확대 및 유대강화 (순번) ①기획→②경비→③구조안전→④수사→⑤국제정보→⑥방제→⑦장비기술
- 업무이해도와 공감도 향상 위한 테마별·시기별 추진정책 홍보 및 현장체험 팸투어를 통해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정책 공유
 - * 광역해양감시망을 위한 항공기·무인드론·경비함정·VTS·위성센터 구축 등 선제적 경비체계(MDA)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경비현장 팸 투어
- 해양안전·환경보호 캠페인, 해양사고예방·정화활동, 해양시설 안전점검, 탄소중립 정책 등 언론홍보, 공익광고 및 스튜디오 제작(작업체험·인터뷰·뉴스 등) 방송
 - * MZ 국민기자단 정책소개, 캐릭터 그래픽·웹툰 활약상 소개, 월간 해양경찰 디지털 소식, 국민체험 「海(해)보자!」기획(7회), 해양안전·환경 콘텐츠(영상·카드뉴스 등) 제작
- 아나운서 전문트레이닝 전문기관 섭외하여 지휘부 대상 미디어 상황 대응 실습 및 브리핑 기법 습득 등 언론소통 강화 미디어 트레이닝 실시

〈미디어 트레이닝 내용〉

- ✓ 발표문 등 스토리텔링 및 브리핑 모니터링·분석
- ✓ 녹화된 개인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실습
- ✓ 코칭/리뷰, 난처한 주제로 ‘돌발 송곳 질문’ 응대 스킬



트레이닝 모습

-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별 테마로, 주요 언론사 언론기고(9회 이상) 및 월간지 커버스토리를 진행, 국정과제 성과 등 대담 방식의 심층 인터뷰 추진
 - * 불법 중국어선 현장체험, 수상레저 성수기 안전관리 등 해양경찰 활약상 현장지원 및 기관장 언론기고, 정책설명회, 월간지 커버스토리, 심층 인터뷰, 뉴스 등 기획보도

팸투어					뉴스 디지털				
	경비함정	해상경비	특공대	독도 해상		방송시스템	유튜브 LIVE	웹툰·그래픽 제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청장 등 지휘부 미디어 트레이닝, 정책설명회 개최(3월~)
매 월	❖ 기관장 언론기고·커버스토리·국정과제 공익광고, 언론사 오찬 간담회·현장체험 팸투어

역점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건립 추진	운영지원
	[과제목표]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건립 ('22년) 공사발주 → ('23년) 준공완료	

[예산] 2023년 총사업비 71억원(공사비 70억,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수기록관)

□ 국민과 소통하는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건립 추진

○ 특수기록관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 추진

- 해양주권 · 안전 등 다양한 해양경찰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 · 과학적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건립
- 특수기록관 실시설계 완료 및 시공사 · 감리사 선정 추진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개요



- 위 치 : 인천시 논현동 638-2
- 부지면적 : 4,694㎡ (1,420평)
- 연 면 적 : 7,500㎡ (2,270평)
- 규 모 : 지상 4층, 지하 1층
- 기 간 : '21년 ~ '24년
- 총사업비 : 185억원

○ 가칭 '기록관 건립 전담T/F팀' 구성, 중장기적인 건립 기반 마련

- 체계적인 기록관 건립을 위해 외부전문 자문단을 포함한 '기록관 건립T/F' 구성, 기록물 관리, 전시자료 발굴*, 연구 및 보존 추진
- * 해양경찰 70년 역사 분석 및 "사료 기증운동" 등 자료 수집 방안 마련
-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학예연구사 등) 확보 및 민간채용 확대방안 강구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특수기록관 공사 조달청 발주 및 특수기록관 실시 설계 완료 ❖ 특수기록관 총사업비 조정(감리비)
2분기	❖ 특수기록관 감리비 조달청 발주 및 특수기록관 시공사 선정
3분기	❖ 특수기록관 감리사 선정 및 특수기록관 착공
매월	❖ 특수기록관 진행사항 점검·관리

정책	마음 소통, 사소한 만남을 통한 근무만족도 향상	운영지원
	[과제목표] ('22년) 운영지원과 리버스멘토링 → ('23년) 공간 리모델링+전부서 리버스멘토링	

□ 추진배경

- 본청이 인천으로 환원 후(455명) 꾸준한 직원 증가로 현재 800여명을 초과, 그간 휴게공간 확보 노력에도 쉼 공간에 대한 부족 여론 多
- 기성세대와 MZ세대 갈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직 내 다양한 계급·연령층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위한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

□ 세부내용

- [마음환경 개선] ① '22년 본청 리버스멘토링(기성세대↔MZ세대)의 첫 모델로 운영지원과가 시범이 되어 내부 직원 대상 소통의 장 마련
 - * 런치타임(티타임), 체육활동, 게임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 ② '23년 본청 전체 부서로 대상을 확대하여 국·과 또는 직급·업무 분야별 그룹 활동의 미팅을 추진하며 친목도모와 유기적 관계 구축
- [물리공간 개선] 단순히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기존의 공간개선을 넘어 휴식·소통·만남이라는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조성
 - 직원 의견 및 참여 설계를 통한 본청 옥상·의경동 등 리모델링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3분기	❖ 소통·휴식공간 대상지 파악 → 직원의견수렴 → 리모델링 작업 실시
매월	❖ 본청 전체 부서 대상 리버스멘토링 시행

정책	해양경찰 마음돌봄프로그램 내실화	운영지원
	[과제목표] PTSD관련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마음치유, 산림치유)	

□ 추진배경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및 업무 스트레스 관리·치유, 직무몰입도 제고를 위한 심리상담, 산림치유,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중

□ 세부내용

- (마음치유) 개인상담, 동료상담사 양성, 힐링캠프 등을 통해 개인별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맞춤형 치유 서비스 제공 확대

- 경찰청 마음동행센터(18개소) 업무협의('18.6.1) 후 공동이용 中

< 최근 5년간('18 ~ '22) 심리상담 현황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심리상담(횟수)	3,100	3,407	3,363	2,508	3,588

⇒ 심리상담 대상·횟수 증가를 위한 예산 증액으로 마음돌봄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22년) 2,782명/306백만원 → ('23년) 4,102명/451백만원

※ 심리상담 대상·횟수 증가 등 마음돌봄프로그램의 내실화(우선대상자* 상담주기 2년 → 1년)

* 우선대상자 : 공상자, 구조대, 항공단, 특공대, 해상특수기동대, 수·형사 등

- (산림치유) 산림청 휴양림을 활용한 2박3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PTSD증상 완화 및 심리적 안정감 회복기회 제공

⇒ 산림치유 대상 확대* ('21년) 6회 235명 → ('22년) 7회 280명 → ('23년) 11회 440명

* 참여율 제고를 위해 치유장소 확대(강원 춘천 등 8개소), 운영방법 개선(본청→지방청)

□ 추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1분기	❖ '23년 마음치유프로그램 계획 수립 (1월) ❖ 한국산림진흥원과 산림치유장소 전국권 확대 협약(3월)
2분기	❖ 마음치유프로그램 온라인 전수진단 및 분석 (5월) ❖ '23년 산림치유프로그램 계획 수립 (4월)
3분기	❖ 마음치유프로그램 중간 보고(7월)
4분기	❖ '23년 마음치유·산림치유 프로그램 결과 보고 (12월)
매월	❖ 마음치유·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실적 분석

역점	위성센터 기구 신설 및 전문인력 확보	스마트
	[과제목표] ('22년) 총액인건비(한시) 조직 → ('23년) 정식직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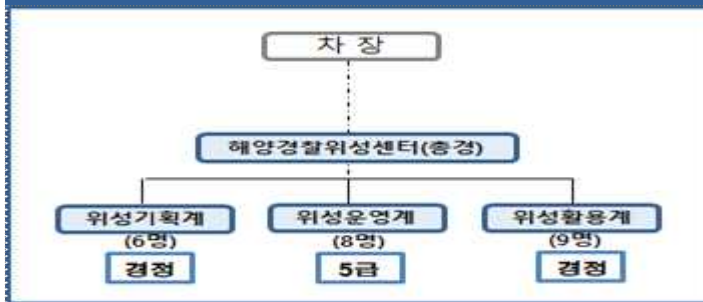
[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위성센터 기구 신설 및 전문인력 확보

○ 소요정원(기구신설 및 23명 증원)으로 상설조직 확보

- **(위성센터)** 관측·통신·수색구조위성 총괄부서로서 위성기획-위성운영-위성활용을 전담하며 국가우주정책 관련 대내외 협력까지 담당
- ※ 해양경비기획단, 정보통신과 등 유관부서와 역할 분담 및 조정 필요

【운영인력 24인<소요정원(안) : 23인(경찰관9, 일반직14)+1인(경찰관1) 자체 조정>】



- **(센 터 장) 총 경**
- **(위성기획) 경찰관6**
경정1(계장), 경감1, 경위3, 경사1
- **(위성운영) 일반직8**
5급1(계장), 6급4, 7급3(3교대)
- **(위성활용) 경찰관3, 일반직6**
경정1(계장), 경감1, 경사1, 6급3·7급3(3교대)

기
능

- **(위성기획)** 위성사업(R&D 등) 기획연구 및 예산 확보, 국내외 유관기관 협의
- **(위성운영)** 지상시스템 구축, 위성운영, 관련장비(시스템, 안테나, 서버 등) 관리
- **(위성활용)** 위성영상 분석활용, 현안대응 및 현업활용 지원, 활용기술 개발

○ 위성전문가 채용 및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위성전문가 채용)** 자율기구*로 확보한 인력을 토대로 유관대학, 연구기관(항공우주연구원 등), 위성 개발업체에서 민간경력자(최소2년↑) 채용
- * 자율기구 확보 정원(7명)으로 일반직 채용(총원규모는 인사담당관과 협의 필요)
- **(교육·훈련)** 우주 전문과정* 개설 및 위탁교육(연구기관, 대학, 군 등) 증설
- * 기존 '미래전략기술과 스마트해양경찰'을 우주 전문교육으로 확대(3일→1주) 개편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행안부 소요정원 요구서 제출(3월)
2~4분기	❖ 소요정원 요구 관련 행안부 설명(3월), 기재부 설명(8월)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12월)

정책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지속 확대	스마트
	[과제목표] R&D 예산 ('23년) 518억 원 → ('24년) 700억 원(35% 증액)	

□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전략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지속 확대

- (대응 전략) 정부 R&D 투자방향*과 연계한 현장 임무 중심의 맞춤형 전략으로 신규 R&D사업 등 연구개발(R&D) 소요예산 700억 원 확보 추진
 - '24년 신규 R&D 수요에 대해 ①국가필수전략기술, ②임무 중심형 R&D, ③성과물 실용화 등과 전략적 연계로 소요예산 확보 추진

《 * 정부 R&D 투자방향 》

- ①국가 필수전략기술(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등 12개 기술) 육성,
 ②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R&D ③성과물 실용·사업화 지원

< '24년 신규 R&D사업(안) >

대 응 전 략	①국가 필수전략기술	1. 위성 다부처 해상 부유물 탐지 다분광 전자광학 위성 2. 인공지능 AI기반 상황접수 및 초동조치 지원 기술개발 3. 첨단로봇 해양/해안 유·무인 방제장비 및 운용 기술개발
	②임무 중심형 R&D	4. 다부처 해양·항공 기상 관측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5. 현장임무 함정 정비진단 및 정비지원 기술개발 6. 다목적 소형 고속정 선형 플랫폼 개발 7. 레저선박·기구 스마트 안전검사 기술개발 8. RF 무선탐지기술을 통한 선박식별 기술개발
	③성과물 실용화	9. 연구개발(R&D) 성과물 실용화 기술개발

- (대응 방안) 신규 R&D사업 완성도 제고를 통한 전략적 예산확보 추진
 - └ 과기부, 기재부 등 예산심의 시 전문위원 검토의견 반영 예산배분·조정
 - 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사전 컨설팅, ②R&D 기술동향 분석 전략회의, ③연구기관 현장방문 등 R&D사업 기획 완성도* 제고

* R&D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타당성 등 제고로 예산반영 당위성 확보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중기('23~'27)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심의 대응 전략회의(1월) ❖ R&D 중기예산 기재부 심의 대응(1~3월) ❖ '24년 기획 신규 R&D사업 전략적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컨설팅(2~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기획 신규 R&D사업 기술 분야별 산·학·연 연구현장 방문(3~4월) ❖ '24도 R&D예산심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 등 전략회의(3~4월) ❖ '24년 단년도 R&D 예산요구서 작성(4월) 및 과기부 예산심의 대응(5~6월) ❖ 과기부 주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대상 사업설명(5월)
3분기	❖ '24년 R&D 예산안 기재부 심의대응(7~8월)
4분기	❖ '24년도 R&D예산 정부안 국회 심의대응(9~12월)

역점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양성평등
	[과제목표] '23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예산] 일반연구비(260-01) : 50백만원

[법령] 해양경찰 양성평등정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예정)

□ 추진배경

- 조직 내 양성평등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해 근무환경 및 구성원 성비, 조직문화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정책 목표 설정과 추진이 필요

□ 이행계획

- (기본계획 수립) 전담부서 신설 이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에 맞춰 정책 추진방향 설정
- (연구용역) 과거 기준이 적용된 현장부서의 기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후 기본시설 설치·개선 가이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 양성평등 관점 해양경찰관서 기본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가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성평등 실현 및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대상과제로 선정하고, 컨설팅을 실시
- (위원회 역할 강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해양경찰 양성평등정책 과제발굴·추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위원회와 연계·협력체계 강화
 - *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규칙 개정(2월) ❖ 해양경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컨설팅(4월) ❖ 해양경찰관서 기본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6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분기별)

정책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양성평등
	[과제목표]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 추진배경

-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조성(국정과제50-3.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이행계획

- (양성평등 조직문화) 찾아가는 간담회(모솔터), 성인지 교육 등 양성평등정책팀 주관 홍보·교육, 조직문화 진단, 실태 모니터링 지속 추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① 찾아가는 간담회



② 양성평등 교육



③ 현장방문 홍보·교육



④ 조직문화 진단

-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강조주간(9.1~9.8)' 운영
- (가족친화 조직) 가족친화법*에 따라 기관지표 실적을 관리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과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직장교육 시행
- * 가족친화법에 따라 우리청 여가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22.12월)
- (일·가정 양립) 일하는 부모의 육아·출산지원 제도 이행을 활성화 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이후 복귀 지원 멘토링 인프라 구축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직장교육 시행(5월)
하반기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멘토링 인프라 구축(7월)
연중	❖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시행 ❖ 직원 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